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창립4주년 기념학술회의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녹색평화의 비전과 21세기 한반도

● 일시 : 2010년 4월 26일(월) 오후 1시~6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창립4주년 기념학술회의

Program

등 록	12:30~13:00	
개회사	13:00~13:10	박명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장)
축 사	13:10~13:20	김덕룡(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제 언 | 한반도 녹색평화의 비전과 구상

13:20~13:40	박명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장)

1세션 | 녹색평화의 인문학적 상상력

13:40~15:40	사회 | 김성민(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발 표	김용민(연세대학교) - 녹색평화와 문학 영 담(조계종 총무원) - 종교와 한반도의 녹색평화 한면희(전북대학교 쌀 · 삶 · 문명연구원) - 생태평화와 문화 공동체의 실천적 원리
토 론	임홍배(서울대학교) 변진흥(카톨릭신학대학교)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휴 식	15:40~16:00	

2세션 | 한반도 녹색평화의 실천과 과제

16:00~18:00	사회 | 윤영관(서울대학교)
발 표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비핵화와 평화체제 김영윤(통일연구원) -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 -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DMZ의 활용
토 론	이상현(세종연구소) 배종렬(한국수출입은행) 전성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폐회사	18:0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창립4주년 기념학술회의

목차

제 언 한반도 녹색평화의 비전과 구상

박명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장) / 7

1세션 녹색평화의 인문학적 상상력

녹색평화와 문학 ····· 김용민(연세대학교) / 17

종교와 한반도의 녹색평화 ····· 영 담(조계종 총무원) / 34

생태평화와 문화 공동체의 실천적 원리 ····· 한면희(전북대학교 쌀 · 삶 · 문명연구원) / 42

2세션 한반도 녹색평화의 실천과 과제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비핵화와 평화체제 ·····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 59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 김영윤(통일연구원) / 76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DMZ의 활용 ·····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 / 89

제언

박명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장)

한반도 녹색평화의 비전과 구상

한반도 녹색평화의 비전과 구상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

I. 2010년의 한반도

한반도는 지금 매우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다음 어떤 비전을 갖고 앞으로의 백년을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할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백년대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들을 자주 접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터인데 실제 현실은 백년은커녕 십년 앞에 대한 준비도 쉽지 않을만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불행한 천안함 사태를 맞았다. 사태의 본질과 그 향후 전개과정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일이겠으나 지금까지의 흐름만으로도 남북관계의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정전상태의 불안정성과 잠복되어 있는 적대적 긴장성을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남북한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성이 커지는 가운데 불신이 증폭되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개연성이 큰 바,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평화로운 "통일시대"로 이행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위기와 불안정의 단초가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1)]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정책대응능력 못지 않게 여러 문제영역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큰 전략적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동북아 지역화에의 적응,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보, 실업문제의 해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의 대처, 다문화 상황에 대한 준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망적 사고가 필요하다. 20세기 한국사회가 공유했던 큰 목표, 즉 국가건설, 산업화, 민주화와 같은 차원의 전략 목표나 비전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일이 절실하다. 우리 세대에 한정되지 않고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고려하면서 한반도 전체 및 동북아와 전지구적 공간을 아우르는 사유의 폭을 갖춘 전망이 마련될 때 비로소 구체적인 여러 현안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도 가능해 질 것이다. 이 글은 '녹색평화'를 그런 미래가치의 하나로 제안해 보려는 것이다.[2)]

---

1) 이런 흐름은 여러 형태로 포착된다. 기존의 발전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논저들이나 한국형 발전전략을 구성하려는 여러 시도들은 모두 이런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FTA나 세계화,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여러 논의들도 각각의 입장차이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룬다. 남북관계에서도 '분단체제의 흔들림'을 이야기하는 백낙청과 '선진한국모델'을 주창하는 박세일 사이에서 역사적 전환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찾으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나 여러 형태의 통일론을 구상하고 있는 정책연구기관들의 시도들도 이런 '새로운 시대'에의 예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일차적인 구상은 2009년 12월 민화협의 공개심포지엄에서 제기한 바 있다. 당시는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눈앞의 효과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되고 매우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자 했던 것이지만 단기적인 정책론을 함께 다루느라 논리적으로 불충분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다. 박명규, "남북정상회담과 녹색평화선언구상", 민화협 심포지엄 발제문. 2009.12. 이후 민화협에서 발간한 [민족화해] 2010년 3-4월호는 "한반도 녹색평화 공존을 모색한다"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2. 산업화/민주화 이후의 발전패러다임

현재 한국사회의 주도적 발전론은 20세기 근현대사로부터 얻어진 근대화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크게 세가지의 목표가치, 즉 국가형성, 산업화, 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다. 자결의 주체인 한국민족이 스스로의 독립 국가를 구성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민주화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발전의 핵심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당연히 이런 발전 패러다임은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20세기 세계체제의 속성과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하는 무한경쟁의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무력을 키워야한다는 논리는 실제 국가의 소멸, 해방투쟁, 민족분단과 전쟁, 냉전적 대립을 거치면서 집합적인 가치로 체화되었고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정책과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줄곧 지속되어왔다. 그런데 분단과 전쟁, 체제경쟁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발전전략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분단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 발전의 단위주체를 대한민국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적대적 분단상황 하에서는 선택이었다기보다 주어진 '조건'이었고 지난 60년의 역사는 이 조건 위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국가나 민족의 틀을 넘어서서 발전을 사고할 여유는 거의 없었다. 안중근이 20세기 초 '동양평화론'을 주장하면서 동양 차원의 발전과 공존이라는 가치에 주목한 바 있고 일부 지식인과 운동가들이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한 경우가 없지 않지만 그런 시각들이 힘을 얻기에는 한국의 20세기가 매우 힘든 고투의 역사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속성은 한국만의 특성이라기보다 동아시아의 공통된 점이라 할 수도 있다. 유럽의 EU와 같은 실험이 아직도 낯선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한반도 주변의 실감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20세기 패러다임의 적합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의 발전수준이 고도화되었다는 내부적 조건과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세계화의 조건이라는 바깥의 변화에서 모두 찾아진다. 한국형 발전모델로 자타가 공인한 국가주도형 개발주의 전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미 우리가 실감하고 있듯이 미래의 한국은 발전의 동력 자체를 전지구적 개방성에서 얻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민족주의적인 동원논리나 국가중심적 정당화만으로 대처하기에는 21세기 한국의 구성이 빠르게 복합적이 되어간다. 밖으로는 중국의 거대하고도 급속한 성장에 대처해야 할 어려움이 가중되고 세계경제의 통합과 상호연동성이 고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에너지 수급과 자원확보를 둘러싸고 새로운 긴장과 염려가 점증하고 있는 것도 큰 과제다. 여기에 매우 큰 변수로 제기되는 되는 것이 남북관계의 불안정한 미래다. 남북간 비대칭성과 불균형상태가 심화되면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이 증대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데 북한변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조율할 것인가가 한국의 미래발전구상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부각될 때를 맞고 있는 것이다. 통일이 꿈이면서 현실일 수 있는 시대, 통일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일수도 엄청난 부담과 갈등의 계기일수도 있는 상황을 예견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만큼 이런 안팎의 변수를 감안한 창조적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3)]

3) 박명규, 이근관, 전재성 외, [연성복합통일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3. 통일과 개방의 시대 발전가치: 녹색평화

21세기 한반도는 20세기와 비교할 때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세계, 전지구적 차원의 연관성을 주목해야 하는 개방의 심화라는 조건이다. 전세계가 우리의 시장이고 해외의 기술과 자본이 자유롭게 유입되는 차원과 함께 전세계의 경기변동, 에너지위기, 환경기후변화라는 어려움과도 매우 깊숙하게 연계된, 심화된 개방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자본과 제품의 구성에서는 이미 이런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났고 노동력구성에서도 점점 더 개방화로의 경향은 커질 것이다. 두 번째는 남한, 즉 대한민국만을 중심으로 발전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단계, 다시 말해 남북한을 함께 포괄하고 동북아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북한변수를 잘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실현과 동북아 지역통합이라는 흐름과의 연계를 발전론의 틀 속에 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다.

한 사회의 집합적 목표가치는 시대적 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식민지하에서는 민족해방과 국가건설이 최대의 목표가치가 되기 마련이고 가난과 궁핍의 시대에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그 자리를 점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화적 수준이 높은 공동체 성원들이 독재와 억압으로 그 자율성이 훼손되던 시기에 자율과 자존,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꿈이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0세기 한국이 처했던 조건과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가치들은 밀접하게 상호연결되어 있었고 양자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셈이다. 그렇다면 개방과 통일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할만한 목표가치가 무엇일 수 있을까?

이 글은 개방화와 통일시대라는 조건을 염두에 둘 때 공유해야 할 기본가치로 녹색평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녹색평화라는 말 속에는 녹색가치와 평화지향을 결합시키려는 구상이 담겨있는데 이것은 물론 양자의 단순한 병렬적 승인을 넘어서 새로운 발전가치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녹색평화를 발전가치의 차원에서 정립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녹색론과 평화론의 흐름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킬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녹색평화는 21세기형 새로운 발전전략의 기초가 되고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가치지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대응들을 조율하고 성찰하는데 필요한 지적 준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녹색평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1) 한반도와 녹색평화

한국사회에서 녹색과 평화는 추상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인식되면서도 실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주요한 가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또 양자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 크지 않다. 추상적으로는 녹색론 속에 평화의 가치가 포함되고 있고 평화사상 속에 녹색적 지향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사회적 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양자는 고립적이다.

우선 한국에서 녹색지향은 비판담론으로서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대안적 발전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성장과 발전에 대한 대중적 합의가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 녹색론은 정책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인문학적 이상론 내지 낭만적 문명비판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그린 패러다임이라든지 녹색성장론, 녹색국가론 같은 정책적 주장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녹색론은 정책보다 운동에 친화력이 있고 사회과학보다는 문명비판적 인문학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생태주의 및 환경론자들의 개발주의 비판이 '운동론' 차원을 넘지 못하고 녹색가치를 표방한 정치세력이 의미있는 비중을 점하지도 못했다. [녹색평론]같은

흐름은 농촌공동체를 예찬하는 반근대적 지향성으로 경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철학적, 인문학적 녹색론들도 대체로는 꿈이나 상상력, 담론 차원에 머물거나 소규모 공동체운동과 연관되면서 종합적인 미래비전으로서의 무게를 갖추는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평화담론은 지나치게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과 정책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한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의 대립, 안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평화는 늘 전쟁억지, 안보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쟁점이었을 뿐 아니라 남북한간의 첨예한 논리대결의 맥락에서 매우 정치화된 개념이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평화라는 담론은 평화체제를 둘러싼 남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직결되어 있는 주제가 되었다. 북한의 '평화통일안'과 남한의 '선평화 후통일론'이 팽팽하게 대립해온 맥락,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둘러싼 민감한 대립구조는 한국에서의 평화논의가 지닌 복잡한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도 6자회담을 둘러싸고 북한은 평화체제 논의를 선행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바, 분단체제하의 평화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2) 녹색발전과 평화형성

녹색평화론의 핵심은 녹색평화라는 가치실현을 발전론의 차원에서 정립하는 것이다. 그동안 추상적이거나 부분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녹색지향과 평화론을 사회전반의 제도와 실천영역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적, 종합적 기획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론은 지금까지의 개발주의적 성장전략에는 비판적이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 개념 그 자체와 반드시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생태근본주의적인 지향도 없지 않지만 자연과의 공존, 환경친화적 발전, 지속가능성, 평화로운 삶 등은 새로운 형태의 발전가치들이지 발전을 거부하는 흐름과는 거리가 멀다. 탈냉전 이후 인종간, 민족간, 종교간 갈등이 커지고 테러와 폭력의 위험이 생활세계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는 그 자체가 매우 소중한 가치임도 분명해지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녹색가치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론을 모색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비록 더딘 진전과 한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1992년의 도쿄의정서와 2009년의 코펜하겐 기후회의를 거치면서 환경문제가 전지구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자원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보편의 틀을 발전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기술, 기후와 자원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의 모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평화문제 역시 민족주의, 종족감정, 인종차별, 종교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명론적 과제에 맞닥뜨리면서 근대문명 자체가 낳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 앞에 마주서 있다. 전지구적 노력과 기획 없이는 결코 폭력, 불안, 갈등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점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녹색평화론은 녹색적 요소나 평화상태를 성장을 돕는 조건 내지 수단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추구되어야 할 목표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발전에 대한 생각과 패러다임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환경, 생명, 평화, 생태, 자연 등을 강조하는 생태주의의 관점이 경제성장, 민주화는 물론이고 전쟁방지와 범죄예방, 일상생활의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미래전망을 담은 총체적 기획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나아가 녹색발전이야말로 평화형성을 가능케 할 조건이며 평화형성이 녹색발전의 전제이라는 양자의 밀접한 연관성도 중요하다. 녹색의 문제는 삶의 평화라는 가치와 직결되고 다

시 평화는 녹색 지향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양자의 결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세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핵과 관련한 것으로 핵무기의 위협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간의 어려운 쟁점이다. 현재의 화석연료의존적 개발전략의 한계를 주목하면서 저탄소 발전방식의 창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핵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무기로서의 핵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궁극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새로운 에너지 대안으로서 핵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없는 세상'을 표방한 가운데서도 핵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원자력이 과연 청정에너지로서 큰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지만 그동안 원자력발전에 비판적이었던 국가들이 새롭게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4] 바로 이 지점에서 녹색문제와 평화문제는 불가피하게 결합하게 되는 바, 녹색발전과 평화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탈민족주의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녹색과 평화는 만나게 된다. 기후환경문제에서 드러나듯 녹색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적 경계나 문화적 범주를 넘어서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추구되는 가치이다. 평화의 제도화 역시 20세기 국제정치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지구적인 문제다.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던 만국평화회의의 시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연맹, 2차대전 이후의 국제연합 등은 모두가 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 노력들이다. Anastasiou는 국가주의적 상호경쟁을 극복하는 것을 21세기 평화실현의 주요한 과제로 간주하면서 EU의 출현을 일종의 Peace Building System 의 형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5]. 그가 지적한 EU의 평화론적 의미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데, 경제통합, 법적 통합을 민주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 공유된 주권론을 통해 영구적인 공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개념으로 전환하는 것, 경제,사회, 문화,정치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다층적 평화촉진을 지향하는 것, 평화문화의 확산을 위해 화해와 평화에 대한 집합기억을 확대시키는 것, 그리고 상호성의 원칙을 살리는 대화와 설득문화를 중시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물질주의, 경쟁론에 빠져있는 상태를 넘어서 공존과 공생, 배려와 연대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근대성을 추구하는 노력 속에서 양자는 만나게 된다. 갈퉁은 소극적 평화와 구별되는 적극적 평화를 강조한 바 있고 실제로 평화학(Peace Studies)은 국가간 전쟁억지만이 아니라 생활세계 내의 다양한 폭력과 갈등의 해소를 주요한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다. Reychler는 평화를 폭력의 상대개념으로 파악하고 물리적 수단에 의한 폭력, 심리적 수단에 의한 폭력, 문화적 수단에 의한 폭력, 구조적 방식에 의한 폭력, 나쁜 통치, 조직적 범죄, 환경적 폭력 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평화학의 목표로 간주한다[6]. 전쟁억지라는 가장 중요한 평화의 차원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와 시장, 개인의 삶과 시민적 유대의 상호연관성이 밀접해지는 21세기에 다차원적인 평화를 구상하게 될 때 녹색가치와 평화지향이 맞물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테러방지, 평화를 위한 기술, 종교간 화해, 민족분규의 억지, 비핵화, 군축, 갈등해소 등 21세기형 평화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새로운 발전담론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

4) 전통적으로 원자력발전에 강력한 비판자 노릇을 했던 그린피스 역시 그 공동창시자의 한명인 Patrick Moore 박사의 원전찬성론으로 내부 논란에 봉착해 있다. "Greenpeace statement on Patrick Moore," http://www.greenpeace.org/usa/press-center/releases2/greenpeace-statement-on-patric#.

5) Harry Anastasiou, "The EU as a Peace Building System: Deconstructing Nationalism in an Era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2 No.2, 2007.

6) Luc Reychler, "Challenges of Peac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1 No. 2, 2006.

4. 녹색평화 비전과 제언

이상과 같은 생각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21세기 한국 발전의 핵심가치는 녹색평화가 되어야 한다.

21세기 한반도의 발전은 20세기형, 부국강병형, 개발주의형, 자국중심형이 아니라 지역적 연대와 소통, 환경과의 친화성과 지속발전성, 다양성과 민주성이 포용되는 새로운 발전이 되어야 함을 명료히 하면 좋겠다. 안중근이 말했던 '동양평화론'의 문제의식을 새로이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통일시대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성찰적으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21세기 장기 전략구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구상에서 녹색평화를 적극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녹색평화를 21세기 한국 발전의 핵심가치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녹색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원칙으로 견지해야 한다.

녹색평화의 실현을 위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함께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중요한 원칙으로 재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비핵화를 향한 인류적 희망에 반하는 잘못된 선택이며 비핵화는 우리의 당연한 목표이자 요구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북한비판론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21세기 발전론, 문명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까지 이를 필요가 있다. 비핵화는 미래의 한반도 통일국가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 통일된 이후에도 한반도는 결코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핵위협으로부터 전인류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주변국가들로부터 한반도의 통일과정을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데도 긴요할 뿐 아니라 한반도통일과 동북아 지역통합이 평화롭게 선순환적으로 연결되게 하는데도 필수적이다.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한국으로서는 더더욱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전세계를 이끌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비전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녹색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도 드러나듯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 상태에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될 수 있는 곳이다. 21세기 미래를 기획하려 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당장은 상호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장기적 전망과 전략적 대응기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녹색평화라는 가치가 중요한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정전체제 이후의 체제구상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사실 평화체제 논의는 현 정전체제 하에서 언제라도 분출될 수 있는 과제인 바, 이미 6자회담의 기본틀이라 할 9.19 공동성명에 6자회담과 별도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모임의 필요성을 명시해 둔 바 있고 북한은 북미협상 및 6자회담 복귀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평화체제 논의를 주장했다. 미국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가능성에 공감을 보인 바 있다. 녹색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단순히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국제법적, 국제정치적 과제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

전쟁억지를 위한 국제적, 제도적 조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하여 생태적 삶에서의 평화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능동적인 녹색평화체제가 동시적으로 구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이미 여러 차원에서 합의된 바 있는 약속들, 즉 남북간 상호체제 인정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교류협력의 증진, 상호 번영과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 들을 총체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녹색평화를 실질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지향적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녹색평화는 발전이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즉 개발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발전' 개념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전지구적 기후문제, 생태자원의 문제, 핵에너지 관리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환경론적 관점에서 민족경제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의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자칫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 협잡으로 인한 신뢰추락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남북경협은 녹색협력의 성격을 갖추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녹색발전, 녹색평화구상과 연결되어야 한다. 녹색협력은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경쟁보다도 협력과 공생의 가치를 존중할 뿐 아니라 현재의 남북관계를 상생공영의 관계로 재조명하면서 생태발전, 녹색성장의 힘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과의 경제협력을 '자본주의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주요 동력으로서 녹색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평화는 한반도의 주민들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을 지향하며, 그런 점에서 농촌공동체로의 회귀나 자연에너지만을 강조하는 환경근본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원자력 발전에 따르는 중대한 위험과 문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무시하지 않는 길을 진지하게 탐색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에너지 문제까지도 포함한 통일이후의 장기적으로 전략으로서 녹색평화의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녹색평화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의 평화'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소통과 인도주의 협력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녹색평화의 가치는 거시적이고 체제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미시적 영역에서도 평화가 작동할 수 있는 상황, 즉 '사람의 평화'와 '일상생활의 녹색화'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각종 인도적 사안들(이산가족문제, 납북자문제, 인도주의 지원 등)을 '사람의 평화'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또한 생활방식에서의 상호성찰,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북한의 기아, 경제적 궁핍과 남한의 낭비적 소비문화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기후, 환경 등으로 인한 재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한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녹색평화의 영역에 해당한다. 최근 신종플루 사태에 대한 지원이나 임진강 홍수문제,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나 생태환경 문제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체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녹색평화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6)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21세기형 가치로 녹색평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100년 전 뤼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이 남긴 '동양평화론'은 막강한 일본제국의 군사력이 몰락한 이후인 오늘에와서 더더욱 강력한 도덕적, 역사적 힘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김구가 해방직후 남긴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문화국가'라는 주장 역시 우리 가슴에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최근 '국격'을 높이자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21세기 한국은 동북아 및 세계를 대상으로 무엇으로 국격을 높일 것인가?

G20 의장국, OECD DAC 가입,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만이 가질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는 21세기적 보편가치를 적극 부각시키고 실현시키는 것이 긴요한 바, 그 핵심가치로 녹색평화가 주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장차 한반도가 21세기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문화적인 힘, 규범권력, 소프트 파워의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0세기를 맞으면서 북구의 작은 국가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세계평화를 주창하면서 강력한 문화적 주도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21세기 한반도는 녹색평화라는 가치를 통해 새로운 문명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형성,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식민지화, 민족분단, 동족간 전쟁, 이념적 갈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수행한다면 21세기 전인류 공동체에 공감을 불러 일으킬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의 폐해를 비판하고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며 근대문명의 장단점을 모두 포괄하는 높은 차원의 성찰적 능력, 비전을 녹색평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21세기형 가치로 녹색평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 론

한반도 상황은 앞으로 보다 유동적인 상태를 맞이할 것이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하는가가 미래의 한반도 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천안함 사태, 북한체제의 어려움, 악화되는 남북관계 등을 조망할 때 당장에 필요한 눈앞의 정책대안에 초조해질 수 있지만, 그럴수록 한반도의 장기적 미래를 전망하는 큰 전략적 틀 속에서 남북관계의 개선, 비핵화의 추구, 평화체제로의 전환, 궁극적인 통일한반도 실현을 향한 노력들이 절실하다. 중요한 것은 안팎의 중대한 전환 과정에서 건강한 21세기 통일 한반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남북한이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녹색평화의 가치는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적 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수용되기를 희망한다. 녹색평화는 비핵화의 중요성을 확인하되 대북한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반도 전체의 생태 평화, 문명적 평화를 강조하는 큰 전략적 비전을 담고 있다. 또한 '녹색협력', '사람의 평화'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평화 논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생태적, 자연친화적, 인간중심적 삶의 양식을 장차 진행될 남북관계의 변화 및 통일문제에 접맥됨으로써 다원적인 협력의 방식, 영역,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1세기 세계사에 한국이 녹색평화를 주도하는 높은 차원의 리더쉽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창립4주년 기념학술회의

1세션

사회 | 김성민(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녹색평화의 인문학적 상상력

녹색평화와 문학 ····· 김용민(연세대학교)

종교와 한반도의 녹색평화 ····· 영 담(조계종 총무원)

생태평화와 문화 공동체의 실천적 원리 ····· 한면희(전북대학교 쌀 · 삶 · 문명연구원)

녹색평화와 문학

김용민(연세대)

1.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화두는 평화와 환경이다. 벌써 반백년 넘게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분단상황을 끝내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고 점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여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분단상황의 종식은 우리 민족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고 환경문제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한반도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평화와 환경은 한반도에서는 더욱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오랜 분단과 대치상황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냥 통일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사회와 같은 모습으로 통일되어서는 환경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도 하고 환경문제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태사회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한국 사회는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대안사회, 즉 생태사회여야 한다. 그럴 경우 한반도의 통일은 이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녹색평화이다. 우리가 녹색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세계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되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 또한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통일한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여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독일통일의 교훈

독일의 통일은 그야말로 벼락같이 이루어졌다. 아무도 통일을 이야기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 통일이 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개방되고 1년도 채 안 되어 독일 통일이 완수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통일은 40년간의 비정상적인 분단 상태를 종식하고 하나의 독일을 이룬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인위적 분할로 인해 국경이 그어지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체제 대결을 펼치면서 각기 다른 나라처럼 살아가야 했던 동서독이 하나의 독일이 된 것이 바로 통일이었다. 따라서 통일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역사의 행보에 휩쓸려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과정과 이후에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통일이 된 지 20년이 가까워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서독 주민들 간에 머릿속의 장벽이 존재하는 것도 통일의 후유증이다. 독일의 통일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통일방식에서의 문제 -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

독일 통일이 지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동서독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간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동독의 몰락과 서독으로의 흡수 통합이라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통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동독의 모든 체제와 질서 그리고 가치가 무너지고 서독의 체제와 제도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서독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통일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독 지역의 변화나 서독인들의 일상이 바뀌지 않았다. 서독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기존의 서독 영토에 동독 영토가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서독이라는 국가에 동독의 5개 주가 새롭게 연방으로 편입된 것이 독일 통일의 실상이다. 그렇다보니 서독의 경우 통일로 인해 변한 것이 없이 지금까지의 경제, 정치, 사회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었다. 이에 비해 동독의 경우는 통일로 인해 그야 말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40년간 존속하던 동독이라는 국가가 소멸함에 따라 사회주의 제도 자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 대신에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곧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가치가 효용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가치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한다. 동독인들은 하루아침에 전혀 새로운 제도와 체제에 적응해야만 했다.

2) 무리한 경제 통합으로 인한 동독 산업의 붕괴

독일의 통일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오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독의 급변하는 국내정세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일 이전에 단행된 동서독간의 경제통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40년 간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경제체제가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했지만 역사의 행보에 떠밀려서 통합부터 해버리는 바람에 동독의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0년 7월 1일자로 단행된 동서독간의 경제통합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시행되었다. 당시 동독마르크의 가치는 서독마르크에 비해 공식적으로는 3분의 1일 수준이고, 비공식적으로는 7분의 1 정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가치를 무시하고 동서독 마르크를 1대1로 통합함으로써 동독 산업이 붕괴된 것이다. 내수와 수출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동독상품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10개 중 9개의 일자리가 사라져"[1] 버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3) 머릿속의 장벽 문제 - 내적 통합의 어려움

서독 주도의 흡수통일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독일통일은 제도와 체제의 통합을 우선하며 짧은 기간 안에 신속히 이루어졌기에 동서독인들의 정서적 통합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외적으로 통일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문화적, 정서적 통일을 시작한 셈이니 아무런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서의 통합은 제도적 통일로 바로 완성될 수 있다. 기존의 제도를 폐기하고 서독에서 사용하던 제도를 도입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 정서, 사고방식, 세계관 등의 동질화를 의미하는 정서적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일이 된 지 한참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서독인들에게 머릿속의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서독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정서상의 차이와 서로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1) 우베 뮐러 지음, 이봉기 옮김, 대재앙 통일 -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문학세계사 2006, 60쪽.

렇게 된 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 통일과 서독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동서독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통일과정을 진행시켰더라면 정서적 통일을 위한 준비 역시 함께 병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과정은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었다. 동독인은 자신들이 2등 국민이라는 자조감을 갖게 되었고, 서독인은 서독인대로 자신들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동독인이 불평만을 늘어놓으며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비판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를 <빤질빤질한 서독놈 Wessi>과 <툴툴거리는 동독놈 Ossi>으로 부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통일이 동서독의 국경을 없애고 경제와 정치제도를 하나로 만들긴 했지만 동서독인들의 정서는 통합되기는커녕 오히려 간극을 더 벌려 놓았다.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과 오해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지 않고 상당부분 고착화되어 여전히 정서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만일 독일통일이 흡수통일이 아니라 동서독간의 대등한 통일이었다면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정서적 통일 또한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다.

3. 한반도 통일의 기본 원칙

한반도 통일방안을 모색하는데 독일통일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중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한반도는 결코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독일통일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지만 서독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 방식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통일방안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통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일통일은 우선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사례로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독일의 통일과정과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뒤따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통일비용』을 쓴 서독출신 경제학자인 프리베와 히켈은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독일통일의 특징적 경험은 분명 모델로서 일반화할 수 없으며 또한 전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의 요점은 대한민국에서의 통일논쟁에 매우 유용하리라 기대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은 문제가 있는 독일의 출발상황을 방지해야만 할 것이다.”[2]라고 제안한다. 우리가 독일통일의 공과를 자세하고 철저히 분석할 때 세계사적 사건으로서의 한반도 통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통일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통일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야 할 것이다.

1) 평화통일의 원칙

독일통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선 통일은 무조건적으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력으로 병합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한때 남북한의 공식 통일노선이기도 했던 북진통일론이나 적화통일론이 남북 양쪽에서 다 위험한 방안으로 폐기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남북한의 군부나 보수주의자들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때로는 공공연하게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북한이 붕괴되어 남한에 접수될 바에야 차라리 결사항전의 의미로 전쟁을 일으켜 마지막

2) 얀 프리베, 루돌프 히켈 지음, 한종만 옮김, 독일통일비용,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4, 12쪽.

까지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군부 강경파가 존재하고, 남한에는 또한 보수파 인사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의 우위를 내세워 무력으로 북한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기에 여차하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쟁불사론을 주장하고 있다.[3] 이러한 주장들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남북한 모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을 써야 하고 무엇보다도 강경론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남북 대치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과 파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도 여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2) 통일에 대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

독일통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또 다른 교훈은 통일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급격한 역사의 발전으로 막상 통일이 닥치게 되면 그 와중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다. 독일의 경우 오래 전부터 동서독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전화나 편지교환은 물론 주민들 간의 왕래도 가능했으며[4], 동독인들도 서독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듯 오랫동안 교류가 이루어지고, 상대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통일 국면에 접어들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40년간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삶이 동서독인들의 의식과 생활방식 자체를 다르게 만들었기에 통일이 되면서 실제 서로를 마주하게 되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통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서독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동독주민들은 반서독 감정을, 서독주민들은 반동독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서독 주민간의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공통점이 머릿속의 분단을 없애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가정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5]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서로간의 교류가 활발했던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남북한은 전쟁이후 서로 문을 닫고 살아왔다고 할 만큼 교류가 없었다. 최근 들어서야 이산가족 상봉이나 문화예술계의 상호 방문 등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남북한 주민 대다수에게 다른 쪽은 미지의 세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남북한 주민이 서로 갈라져 완전히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것이 60년이 다 되어가니 서로간의 이질감이 동서독보다 훨씬 심한 것은 당연하다. 우리와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교류

---

3) 전쟁불사론은 일부 극우파뿐만이 아니라 보수진영 전반의 인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2006년 가을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대북 교류를 모두 중단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나라당의 공성진, 송영선 등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다행스러운 일은 대다수의 국민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이다. 북핵사태 직후인 2006년 10월 26일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화를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8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12.3%가 "공감한다"라고 답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10%가 넘는 이들이 전쟁불사론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레디앙, 2006년 10월 26일).

4) 서독인은 서독 당국에 신고할 필요 없이 국경에서 동독 세관으로부터 일일비자를 받아 자유롭게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동독인은 연금생활자나 서독 쪽의 초청 또는 가족 친지의 조경사가 있을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독 방문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중반이후 약 300만 명 이상의 서독인들이 동독을 방문하고 동독인들 역시 200만 명 이상이 서독을 방문하는 등 양쪽의 방문객 숫자가 비슷하게 되었다. 동독 방문객들의 대다수가 연금생활자로서 일반인들의 방문이 적긴 했지만 서로 간의 교류가 활발했던 것만은 사실이다(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 1997, 104-107쪽 참조).

5)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 1997, 404쪽.

가 활발했던 독일도 통일 이후에 서로 간에 의식, 사고방식, 세계관이 상이한 데서 오는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는데 우리의 경우는 더 심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후유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줄여나가는 선행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긴 시간을 두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들이 활발히 만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통일이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통일은 긴 시간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3) 한반도 통일의 대원칙 -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과정에서 그 어느 쪽도 일방적인 우위를 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한반도 통일방안의 근간은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일대일 통합 방식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아무리 평화통일이라 해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은 독일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남북한 민중의 합의와 당국자간의 일대일 협상을 통한 단계적 평화통일밖에는 없다. 남북한은 이미 1972년의 7·4 공동성명과 1992년 2월 19일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통일에 있어서도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각각 연방제와 연합제의 방식으로 단계적 통일방안을 제안해 왔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는 상징적 합의와 선언의 단계에밖에 이르지 못했다. 2000년 6월 15일의 남북정상합의문에서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이는 비록 상징적 합의이지만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선언을 통해 상대방을 병합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고 단계적 통일을 이루자는 대원칙을 양쪽의 정상이 만나 대외적으로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6.15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대등하게 단계적 통일을 이루어나가자는 인식에 합의하였다. 이제는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4)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아래로부터의 통일

평화적이며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진정한 통일이란 제도의 통합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문화의 통합, 즉 사회문화적 통합이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은 체제나 제도와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가치, 규범, 이데올로기, 의식, 문화의 통합"[6]을 의미한다. 독일통일의 예는 체제통합보다 사회통합이 더욱 어렵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체제 통합에 앞서 사회 통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60여년간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생활한 남북한 주민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가치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이질감을 느낄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통일과정이란 이러한 이질감을 해소하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다. 독일통일의 예는 정치통합보다 사회문화적 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이며 따라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동독 출신으로 연방대통령을 역임한 볼프강 티어제는 우리에게 그 점을 강조한다.

---

6) 이해영,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푸른 숲, 2000, 19쪽.

독일의 예에서 통일은 아주 길고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의 정서와 사고, 생활양식과 문화가 서로 동화되는 상호 이해의 과정은 정치경제적인 통일만큼이나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되 환상을 갖지 말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7]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활발한 인적 교류와 상호방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60여 년 동안의 분단과 상이한 체제로 인한 서로간의 단절과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과정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통일은 "상당기간에 걸친 지속적 과정으로서의 통일"[8]이어야 하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서 먼 훗날 완성된 형태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부단한 진행의 과정"[9]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한반도 통일 과정은 적대적인 상호 대결을 지양하고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바탕을 마련하면서 상호 이해를 통한 신뢰구축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통일 단계에 들어서는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활발한 만남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 한국의 사회 체제를 함께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을 완성할 새로운 체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민중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는 아래로부터의 해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 목표가 남북한 민중의 행복과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할 때 그들이 함께 살아야 할 통일 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남북한 민중의 적극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만남과 교류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의 과정과 방식이 반드시 전체 사회의 변혁에 기여"해야 하는 "운동으로서의 통일"[10]이면서 동시에 남북한 민중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나가야 하는 아래로부터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5) 세계사적 사건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끝내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통일은 오랜 준비 과정이 전제가 될 때 훨씬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 가야 할 통일은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전세계 인류의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사적 사건이어야 한다. 분단된 영토가 단순히 합쳐지거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체제가 다른 쪽으로 확대되는 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이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려면 현 체제의 모순은 물론 환경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사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현재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남한은 사회주의적 복지제도를 많이 도입하여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띤 사회주의에 가까이 가고,

---

7) 김누리 외, 변화를 통한 접근, 한울, 2006, 89쪽.
8)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2006, 76쪽
9) 김근식, 통일방안이 아닌 통일과정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 통일교육협의회 청소년분과 발제문, 2001.11.6.
10) 김근식, 위 글.

북한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 가까이 다가옴으로써 두 체제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생태주의가 바탕에 깔린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후 많은 동독 지식인들이 꿈꾸었지만 결국 실패하고만 제 3의 길을 북한이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장벽이 개방된 후 동독이 가졌던 가능성, 즉 "독립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정치, 경제적 개편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되, "서독의 모델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있는 어떤 형태의 '제 3의 길'을 모색"[11]하는 가능성을 북한이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 또한 현재의 천민적 자본주의의 틀을 대폭 수정하여 복지와 분배 그리고 사회통합에 더 중점을 두는 사회민주주의적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두 체제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을 때 통일한다면 새로운 통일방안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새로운 통일방한은 남북한이 각자 자신의 체제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과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체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체제 모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두 체제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여 새로운 체제를 만들되 생태주의를 근본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남북한의 통일을 넘어서서 인류의 미래에 우리가 던지는 희망이 될 것이다.

남북한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는 분단과 대립이라는 질곡으로 작용했지만 바로 그런 질곡 때문에 두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옌스 라이히 역시 "한국이 민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21세기 인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12]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경사일 뿐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사적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체제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남북한이 기득권을 버리고 통일국가로 거듭나는 통일이므로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어느 한쪽의 가치가 다른 쪽에 강요되지 않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한반도의 통일은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건국과 같은 자세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나 '재(再)'통일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신(新)'통일"[13]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통일한국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 3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 모델에 가장 적합한 것이 생태사회이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면서 동시에 생태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세계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4. 통일한국의 사회모델: 생태사회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함으로써 자본주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본주의 질서가 전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불거져 나오는 것도 사

11) 얀 프리베, 루돌프 히켈, 위 책, 106쪽.
12) 김누리 외, 위 책, 350쪽.
13) 이해영, 위 책, 19쪽.

실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모토로 하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반휴머니즘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생태사회이다. 인류의 문명 자체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의 등장과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생태계 파괴는 가속화되어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요즘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앙들은 생태계에 적대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다. 생태계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벌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근본 생태론에서부터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사회생태론 그리고 여성문제까지 생태주의에 포함하는 생태페미니즘 등으로 분화되어온 생태사상과 생태운동은 새로운 생태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성찰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제안하는 생태사회는 생태계 위기가 어디에서 초래되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존중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사회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새로운 사회는 자본주의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생태사회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기란 어렵다. 그렇기에 대안사회로서의 생태사회를 그리는데 문학이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문학은 생태주의가 주장하는 복잡한 내용을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로 보여주기 때문에 생태사회의 모습을 훨씬 선명하게 그릴 수 있으며 또한 아직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사회를 실제 존재하는 세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문학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비되는 대안사회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 자본주의 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사회 - 『에코토피아』

어니스트 칼렌바크 Ernest Callenbach가 1975년에 발표한 『에코토피아』는 미래소설이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2000년대의 어느 날이다. 뉴욕의 신문기자 윌리엄 웨스턴이 그동안 금단의 땅으로 미국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에코토피아를 방문해 취재하는 이야기가 소설의 내용이다. 에코토피아는 2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가 미연방에서 독립하여 건설한 국가이다. 이들이 독립한 이유는 생태학적 안정상태, 즉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독립하여 20여 년간 고립생활을 한 에코토피아의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미국 신문기자의 눈으로 관찰하여 기록한 것이 이 소설이다.

에코토피아는 말그대로 <생태사회>로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를 대체하는 대안사회이다. 모든 면에서 미국사회와는 다르다. 에코토피아 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큰 원칙은 느긋함과 즐거움이다. 에코토피아인들에게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할 만 한 가치가 있다면 즐겁게 그 일을 해야 한다”[14]는 원칙이 내면화되어 있다. 그렇기에 에코토피아 사회는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서 자본주의 사회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그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차이는 노동에 대한 태도에 있다. 에코토피아는 독립한 후에 주당 2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청교도적 노동 윤리”가 몸에 배어있는 미국인의 눈에 일주일에 겨우 20시간만 일하는 에코토피아인들이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들”로 비치는 것은 당연하다. 에코토피아 역시 처음에는 청교도적 노동 윤리를 수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노동시

14) 어니스트 칼렌바크, 김석희 옮김, 『에코토피아』, 정신세계사 1991, 108쪽(이후 본문에 쪽수만 표기).

간 단축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을 이겨내야 했다.

>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에코토피아는 보다 열심히 일하는 나라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고립주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각한 혼란이 오랫동안 에코토피아 경제를 괴롭혔다. 국민총생산은 3분의 1 이상이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주당 근무시간 축소가 함축하고 있는 가장 심오한 의미는 철학적이고 생태학적인 것이었다.(71)

근무시간 축소가 "철학적이고 생태학적"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그로 인해 삶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생산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에코토피아 사회에서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들은 씨줄과 날줄로 짜여진 직물처럼 얽히고설킨 관계를"(71) 이루고 있는 존재로 본다. 그렇기에 "인류의 행복은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느냐가 아니라 그들과 얼마나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에코토피아인들은 믿는다. 이를 위해 그들은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과 생산성을 무자비하게 늘려야"하는 자본주의의 발전원리를 거부하고 "현재의 소비생활을 희생"(71)할 뿐 아니라, "국민총생산의 급격한 감소"(72)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주당 40시간이던 노동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면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이 줄어들어 산업이 위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두 배로 늘려"줌으로써 기존 산업이 축소되어 생기는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개인소득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73)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현재의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해결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즉,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풍요로운 생활은 과도한 에너지와 원자재 소비에 바탕을 두고 있다.[15] 하지만 60억이나 되는 인류 전체가 미국인들처럼 생활하려면 현재와 같은 지구가 20개 있어도 모자란다. 결론은 미국인들이 지구의 자원이나 환경에 비추어 반생태적으로 과도하게 잘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나 지구촌 동포들을 위해서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앞으로도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 후손에게 자연자원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과소비적 소비생활을 버리고 안빈낙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에코토피아인들은 실천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에코토피아는 "미래의 생존"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기에 기존의 과소비적 생활방식을 부정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열망이다. 그들은 '땅 위를 가볍게 걷고', 대지를 어머니처럼 대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윤리에 비추어볼 때 대부분의 산업 공정과 근무 시간 및 생산품이 수상쩍게 여겨지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49)

자본주의는 성장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효율성을 강조하고, 모든 작업공정이나 근무시간을 효율성에 맞추어 조정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노동기계로 전락하고, 자연은 상품생산을 위한 단순한 재화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에코토피아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축소와 인구감소

15) 미국 혼자서 매년 전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다. 미국인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7921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 1631Kg의 5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톤으로 세계평균 4.9톤의 4배이다.

정책을 시행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만들고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만듦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찍어내는 집들을 도입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개인용 자동차의 제한과 공공교통기관 및 자전거의 활용, 상업광고 금지 등을 통해 친환경적이며 소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를 줄여 지방으로 분산시켰다. "경제적 혼란", 즉 "국민총생산의 급격한 감소"가 오히려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활방식과 사회체제를 도입할 수 있게 만들어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72)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도시의 복잡한 삶에서 해방되어 더 많은 여유시간을 갖게 된 에코토피아 국민들은 미국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에코토피아인들이 경제축소와 인구감소를 오히려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를 통해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웨스턴은 처음에 에코토피아인들의 생활과 생각을 접하고 당혹스러워 한다. "무엇에서 즐거움을 얻느냐"는 에코토피아 여인 마리사의 질문에 웨스턴은 자신 있게 일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대답한다.

> 우선 힘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다음은 내 뛰어난 글솜씨와 지성에 대한 자부심, 또 (...) 경륜과 독창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치를 좋아합니다 일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옷을 사입고, 가장 훌륭한 부류의 사람들과 사귀지요.(83)

웨스턴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대부분이 오늘날 추구하는 목표와 다르지 않다. 에코토피아인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잘먹고 잘사는 것이 꼭 크고 넓고 좋은 집에서 커다란 자동차를 굴리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먼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코토피아인들은 알고 있다.

웨스턴은 결국 에코토피아의 삶이 지니는 "힘과 매력"(149)에 빠져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에코토피아에 남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의 아이들까지 에코토피아로 데려올 계획을 세우는데 대안사회로서의 에코토피아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곳임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잘먹고 잘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새로운 노동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오늘날 위기에 처한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를 대체할 대안사회를 선취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칼렌바크가 그리는 "생태적, 페미니즘적, 사회주의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보다 나은 경제질서"[16]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대안사회의 모델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2) "하루 3시간만 일하고 굶어죽지 않기" -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박민규의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하 '삼미 슈퍼스타즈'로 표기)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지만 무엇이 잘 먹고 잘사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코토피아』와 공통점을 지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대안적 삶의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두

16) Jost Hermand, Im Wettlauf mit der Zeit, Berlin 1991, S.177.

작품은 일맥상통한다.

『삼미 슈퍼스타즈』는 삼미 프로야구 구단의 창단과 폐단 그리고 그 구단의 어린이 팬클럽 회원이었던 주인공과 그의 친구 조성훈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 소설은 1982년 프로야구가 도입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프로'라는 새로운 가치관"[17]이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도발적 문제제기로 시작한다.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오던 사람들의 삶이 어느 한순간 아마추어와 프로의 분명한 기로 위에 서게 되었고"(76), "이젠 프로만이 살아남는다"거나 "프로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77)라는 모토가 지배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프로야구의 도입은 스포츠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미국식 자본주의 질서가 관철되는 역사적 계기로 그려진다. "어떻게 더 많은 일을, 국민들에게 당연하게 시킬 수 있을까"(244) 고민하던 정권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프랜차이즈"로 프로야구를 도입한 것이라는 주인공의 친구 조성훈의 말은 황당하지만 동시에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죽어라 일하고 또 일해도 최고가 되지 못하면 뒤처지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메커니즘은 최고가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는 프로야구의 세계와 같기 때문이다.

> 이것이 프로의 세계다. 평범하게 살면 치욕을 겪고, 꽤 노력을 해도 부끄럽긴 마찬가지고, 무진장,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해봐야 할 만큼 한 거고, 지랄에 가까운 노력을 해야 '좀 하는데'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 허리가 부러져 못 일어날 만큼의 노력을 해야 '잘하는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127)

삼미 슈퍼스타즈는 1982년 전기리그에서 10승 30패를, 후기에서 5승 35패를 기록하고 이후 1985년 전기리그를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120승 4무 211패의 전적을 올렸다. 이 정도의 기록이면 삼미는 평범한 야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미가 "그토록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팀으로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125)있는 것은 프로의 세계라서 그렇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3위나 4위 팀이 평범한 것이고 꼴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하위의 삶처럼"(127)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교야구나 아마야구에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팀이 프로야구라는 - 실로 냉엄하고, 강자만이 살아남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126)하는 프로의 세계에 들어섬으로써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삼미의 운명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 전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는 오늘날 죽어라 노력해도 살아가는 것은 점점 팍팍해지고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할 일은 점점 많아지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일벌레가 되어 점점 정신없이 살아간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고, 마치 모두들 "돼지발정제를 마신 것처럼 땀을 흘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으며 "돈과의 교미"(182)를 벌이는 듯하다. 주인공 역시 자본주의의 냉엄한 법칙을 깨닫고 죽어라 노력하여 일류대학에 합격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 최대의 대기업"(206)에 취직하여 프로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 하지만 주인공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4년간 "새벽 5시에 집을 나와, 거의 자정 무렵"(213)에야 집으로 돌아가고 휴일에도 출근해 근무한 결과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아내의 이혼 선언과 IMF 이후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해고당한 것이었다.

해고 되어 실업자가 된 후에 비로소 주인공은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이었는가를 즉, "나는

17) 박민규,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한겨레신문사 2003, 76쪽(이하 쪽수만 표기).

일찍 일어난 새가 아니라, 일찍 잠이 깬 벌레였다는 것을"(224) 깨닫는다. 그러면서 프로의 세계가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문제는 바로 프로의 세계였던 것이다.

> 요는 말이지. 어쩌다 프로가 되었나, 라는 것이야. 생각해봐. 우리는 원래 프로가 아니었어. 그런데 갑자기 모두 프로가 된 거야. 그 과정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물론 프로야구가 세상을 바꾸었단 얘기가 아냐. 요는 프로야구를 통해 우리가 분명 속았다는 것이지. (...) '어린이에겐 꿈을! 젊은이에겐 낭만을!'이란 구호는 사실 '어린이에겐 경쟁을! 젊은이에겐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243)

이 말을 하는 주인공의 친구 조성훈은 삼미 슈퍼스타즈가 "프로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모든 아마추어들을 대표해 그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이라 말하며 이제 "세상을 박해하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바로 프로"라고 말한다.(243) 이러한 세계에 저항한 것이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다"는 모토를 내건 삼미 슈퍼스타즈였다.(251) 그래서 주인공과 그의 친구는 삼미 슈퍼스타즈처럼 자본주의 세계가 요구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도 너무 아름다운 것"(278)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필요 이상으로 몰려 있는 세계에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279)

이러한 인식에 도달한 주인공은 이제 "일밖에 몰랐던 인간"(237)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인간, 자유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237) 시간에 공터에 나와 친구와 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무언가 거대하고 광활한 것이 내 머리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로 처음 본 하늘"(239)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경쟁에서 도태되고 해고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왜 꼭 이겨야 하는가, 지면 안 되는가, 지면 어떤가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이다.

> 하루 3시간만 일하고, 굶어죽지 않고, 나머지 21시간은 내 것이다 - 가 신문 배달 때와 다름없는 놈의 자랑이었다. 그리고 나는 - 퇴직금을 까먹으면서 그냥 놀기로 했다. 4년 내내 미친놈처럼 일을 했고, 그 퇴직금으로 밥을 먹지만, 하루 24시간이 내 것이다 - 가 예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나의 자랑이었다.(257)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프로의 세계에서 하차한 주인공이 하는 일이란 "충분히 잠을 자고, 산책을 하며 하늘을 보고, 캐치볼을 하고"(258) 쉬는 일이다. 그에게는 감당키 어려울 정도의 많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시간에 쫓긴다는 것은 - 돈을 대가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간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니 지난 5년간 내가 팔았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시간, 나의 삶이었던 것"(265)임을 깨닫는다. 그런 그의 눈에 아마추어 야구단의 전지훈련차 찾은 삼천포는 그 이름이나 마찬가지로 프로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세계로 보인다.

>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해가 지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었다. 즉 24시간 운영, 연중 무휴, 연장 근무, 불철주야, 철야 근무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해가 뜨면 마을 사람들은 일을 시작한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다. 뛰어다니는 것은 개들뿐이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잔다.(...) 이곳은 무엇이 들어와도 국내 최후이며, 삶의 분주함으로 따지자면 국내 최저이며 그 어귀에는(...) 동네 사우나탕 정도의 규모를 지닌 국내 최소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할 만큼의 일을 하고, 먹을 만큼의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것이다.(276-277)

삼천포의 세계는 속도의 면에서도, 규모의 면에서도 그리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대안사회의 면모를 보여준다. 서두르지 않고, 크고 화려한 것을 쫓지 않고, “할 만큼의 일을 하고, 먹을 만큼의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안빈낙도의 삶을 실천하는 곳이다. 이 세계는 주당 20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삶을 즐기는 에코토피아와 닮아 있다. 더 이상 일이 중심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 세계가 그곳이다. 물론 삼천포는 그러한 유토피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유토피아를 경험한 주인공은 나중에 다시 취직을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일이나 출세, 돈버는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월급을 받고 대신 충분한 자유시간이 있는 직장을 찾아다닌다.

> 지구상의 어떤 양서류보다도 돈 욕심이 없어진 나는 - 늘 조금이라도 더 나의 시간, 나의 삶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또 찾았다. 결국 나는, 작은 종합병원의 후생관리 직원이 되었다. 균등하고 변함없는 하루 6시간의 업무. 그리고 그 6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나의 시간이다.(297)

『에코토피아』와『삼피 슈퍼스타즈』에서 그리는 대안사회의 특징은 모두 일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들을 위해 쓰는 그러한 사회이다. 그에 따라 자연히 노동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정립된다.

3) 새로운 노동개념과 새로운 사회모델

『에코토피아』와『삼피 슈퍼스타즈』의 주인공들에게 노동은 어디까지나 즐거운 것이지 결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인간은 생산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즐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된다. 노동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난다. 에코토피아인이나『삼미 슈퍼스타즈』의 주인공 모두 노동의 압박에서 벗어나 있기에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며 자아를 실현해 간다. 두 소설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개념은 흥미롭게도 독일의 사회학자 볼프강 엥글러가 2000년대 들어서서 제안하는 새로운 노동개념과 맞닿아 있다. 엥글러는 20%에 육박하는 실업률과 젊은이들이 빠져나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구동독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새로운 노동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동독지역의 실업자들이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과 사회적 관계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은 지금까지 노동에 부여했던 중요성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즉, 노동이 삶의 원천이고, 노동이 사회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기반이라고 생각했기에 노동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사회에서 낙오된 자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현재 동독지역에서는 노동하는 사람보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 이후 구동독인들이 대거 서독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18] 여기에 덧붙여 구동독지역의 산업붕괴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 지금 구동독지역 인구의 상당수를 어린이와 청소년, 실업자, 연금생활자 등과 같이 노동하지 않는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동독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즉 어린아이나 청소년, 실업자, 연금생활자들을 제외한 직업종사자의 수는 600만 명밖에 안 된다.(107) 전체 인구 1500만의 40퍼센트만이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구동독지역의 인구공동화 및 노령화는 계속되고 노동인력 부족으로 산업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하는 사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존의 노동 개념을 바꾸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엥글러는 동독지역에 아예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 내자고 제안한다. 동독지역의 피폐 및 공동화 상태가 오히려 새로운 사회모델 및 삶의 양식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유럽의 한가운데에서 동독지역처럼 매력적이고, 변화무쌍하며, 드넓은 곳을, 인구밀도도 낮고 산업과 배기가스와 시멘트에 손상되지 않은 곳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곳에 바로 완전히 새로운 지역정책을 수립할 계기와 자원이 있지 않는가?[19]

현재 동독지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을 씨앗”(178)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는 노동이 중심이 되는 “노동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개념을 바탕으로 한 대안사회여야 한다. 노동이 중심이 되는 “노동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를 위해 그는 “시민수당 Bürgergeld” 도입을 제안한다.(174) <실업수당>이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지원금이라면 <시민수당>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 생활비이다. 실업수당은 그것을 받는 것 자체가 자신이 실업자임을 드러내고 모두가 노동하는 사회에서 낙오된 자라는 표지가 된다. 실업수당은 철저하게 노동자와 실업자라는 이분법적 노동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수당>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기초생활비이다. 실업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받는 기초생활비이기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자괴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한시적인 실업수당과는 달리 시민수당은 지속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통해 인간적 삶과 함께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에 시민수당을 도입하면 노동사회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엥글러는 말한다.

>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장된 수입을 갖게 될 것이다.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시민수당을) 요구할 수 있기에 자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단을 얻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174)

시민수당이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지 않고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자

18) 장벽이 개방되던 1989년의 동독 인구가 1640만 명이었는데 통일 10년 후에는 15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불과 10년 사이에 인구의 11퍼센트가 줄어든 것이다. 동독지역을 떠난 이들 중에는 특히 젊은이들의 비중이 커서 동독지역은 그야말로 ‘낡은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서쪽으로 떠나갔기에 주택난을 겪는 서쪽과는 달리 동독지역에는 100만 채 이상의 집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19) Wolfgang Engler, Die Ostdeutschen als Avantgarde. Berlin 2002, S. 126(이하 본문에 쪽수만 표시).

연히 “노동에 대한 인간의 관계” 역시 “혁명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몰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174) 이때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없어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삶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엥글러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준비”, 즉 “새로운 문화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즉, 가족, 유치원, 학교, 공공 여론기관, 예술, 철학, 학문이 함께 힘을 합쳐 "교육과 호기심 그리고 지식획득"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면 각자가 자신의 활동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178-179)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관심과 능력을 일깨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사회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엥글러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연출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면, 활동이 중요한 거지요, 노동이 아닌 활동 말입니다.”[20]라고 말한다.

엥글러가 주장하는 새로운 노동개념이나 새로운 사회모델은『에코토피아』나『삼미 슈퍼스타즈』가 꿈꾸는 사회와 많은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칼렌바크가 그리는 에코토피아 사회에서는 엥글러의 제안이 이미 상당부분 실현되어 있다. 에코토피아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일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에코토피아, 246)가 많다. 더 나아가서 “일과 놀이의 차이가 서서히 사라지져 가고”(245) 마치 놀이하는 것처럼 일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파티를 열기도 한다. 요컨대 노동의 개념이 바뀐 것이다. 또한 그들이 실업자가 되어도 전혀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에코토피아인들은 실업마저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사회보장제도와 생필품을 싸게 파는 중심 상점 덕분에, 사람들은 실업을 재난이나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업기간을 이용하여 대개 창조적인 일에 몰두하거나 재교육을 받거나 휴식을 취하며, 때로는 실업 기간을 일부러 연장하기도 한다.(246)

이처럼 일과 놀이의 구분이 사라진 에코토피아에는 엥글러가 말하는 “새로운 문화모델”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삼미 슈퍼스타즈』에서 주인공이 “일밖에 몰랐던 인간”(237)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인간, 자유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노동의 압박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며 나아가서 상당한 수준의 예술가가 될 수도 있다.

엥글러의 주장은 지금 과연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이상주의적 제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컴퓨터 기술과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폭 대체하여 적은 규모의 노동자가 필요하게 된다면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적어질 테니 새로운 노동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또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20대 80의 사회, 즉 한 나라 또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상위 20%가 모든 생산을 담당하고 나머지 80%는 잉여적 존재로 전락할 <위험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엥글러의 주장은 비록 당장은 실현가능하지 않지만 산업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회적 판타지”이자 “인상적인 픽션”이라 할 수 있다.[21]

---

20) “Vielleicht geht es im Osten" Inerview mit Wolfgang Engler, in: taz, 2.10.2002.
21) Beatrix Langner, Bürgerstolz vor Arbeitsämern, in: Neue Züricher Zeitung, 7.05.2003.

그리고 동독지역을 넘어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신선한 문제제기이다. 높은 실업률과 가혹한 경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지구상 도처에서 신음하고 있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사회를 대체할 대안 사회는 성장의 이윤을 분배하여 노동 없이도 인간적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여야 하기 때문이다. 엥글러의 제안은 『에코토피아』와 『삼미 슈퍼스타즈』가 꿈꾸는 생태사회를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의를 지닌다.

5. 나가는 말

『에코토피아』와 『삼미 슈퍼스타즈』의 예는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한 정책변화가 아니라 사회의 지향점,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 및 방식, 사회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매우 근원적 처방임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통일 한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물질적 성장과 풍요를 지고의 가치로 삼아 앞만 보고 달려왔다. 지난 40년간 우리에게는 경제발전이 최우선이었기에 오로지 더 많은 생산과 수출 그리고 소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 개인들 역시 보다 많이 일하고 보다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것이 바로 잘먹고 잘사는 길임을 당연히 여기며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다. 이에 대해 신경림 시인은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우리는 너무 허둥대지 않았는가
> 잘 살아 보겠다고 너무 서두르지 않았는가
> 이웃을 속이고라도 짓밟고라도
> 잘살아 보겠다고 너무 발버둥치지 않았는가[22)]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잘살아보세>라는 구호의 바탕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물질적 발전을 이루면 된다는 발전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 발전 이데올로기의 근간은 인간중심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이다.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는 자연을 가차 없이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과 생산과 소비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법칙이 오늘날의 여러 위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의 자연은 온갖 공해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개인들 역시 일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바빠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하고, 쉬지 않고 일해도 삶은 더 어려워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늘 일자리를 잃을 불안에 떨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발전이고 무엇을 위한 노동인 것인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후손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태계 위기나 우리 삶의 황폐화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를 통일이후까지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통일 한국의 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표와 다른 삶의 척도를 지

22) 고진하, 이경호 엮음, 『새들은 왜 녹색별을 떠나는가. 생태환경시집』, 다산글방 1991, 84쪽.

닌 새로운 사회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좀 더 많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크게!>를 외치며 더 많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지고의 가치로 삼아 앞만 보며 달려왔다면 이제는 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기에 빠진 지구 생태계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점 각박해지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물질적 풍요와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대신 적게 일하고, 적게 벌고, 적게 쓰되 삶의 질은 높이는 그런 삶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기계발을 하고 자연을 만끽하며 동시에 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포기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가 되고 말겠다는 욕망 역시 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한국의 목표를 선진국이 아니라 중진국으로 삼아야하며 그것이 생태사회의 비전에도 어울린다. 모두가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관심과 능력을 일깨우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비록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지금처럼 물질적 풍요를 누리진 못하더라도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 사회는 부국강병의 나라가 아니라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생태사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60년 전에 김구선생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꿈꾸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마침내 통일된 한반도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이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충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
>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인류가 부를 서로 나눈다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으며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모두가 편안히 살 수 있다는 주장은 김구선생이 이미 60년 전에 오늘날의 생태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선생의 호소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다가온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통일한국의 사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종교와 한반도의 녹색평화

영 담(조계종 총무부장)

Ⅰ. 여는 글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인류의 역사는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갑론을박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광의로 말하면 우주의 생성 역사가 약 150억 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인류는 아직 저마다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리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갑론을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예화(例話)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예화지만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태조가 무학대사에게 농담을 건넵니다. 무학대사는 왜 얼굴이 돼지같이 생겼습니까? 무학대사가 답합니다. 전하께서는 용안이 부처님 같으십니다. 다시 태조가 묻습니다. 대사의 흉을 보았는데 대사는 언짢지 않으십니까? 무학대사가 일침을 놓습니다. 마음이 돼지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얼굴이 돼지 같이 보이고 마음이 부처님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얼굴이 부처님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 예화는 세상이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면 세상 또는 삶에 대한 태도 또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시대정신을 통해서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세상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보편화 또는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시대정신이 정신과 물질문명의 발전을 이끈 토대이자 동력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물질문명이 발전했다고 믿어온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세상은 그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과 폭력은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실업과 빈곤, 환경파괴는 국지적 범위를 넘어 세계적 위험요인이 된지 오래고 심지어 이 세상이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른바 지속가능한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래 문명사적 전환, 즉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소납에게 맡겨진 주제는 종교가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좁혀 말하자면 종교가 녹색평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유효한 상관성을 가질 수 있

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납은 매 시기 시대정신과 깊숙한 연관성이 있었던 종교가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물질보다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종교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납은 우선 종교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서 출발하여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 종교의 실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인류의 등장과 함께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개인은 물론 사회의 제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고 때론 시대정신을 만들고 사회제도의 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친숙한 종교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종교는 각 종교별로 교리가 다르고 또 학문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실로 수많은 견해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영원히 가까워 질 수 없을 듯 보이는 서로 다른 교리와 학문적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명분이 되어 종교전쟁까지 일어났고 지금도 종교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종교가 정말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혹시 종교가 내세우고 있는 자비와 사랑, 희생과 봉사, 평등과 평화에 기대를 거는 것이라면 소납의 생각으로는 종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지난 수천 년간 자비와 사랑, 희생과 봉사, 평등과 평화의 중요성을 열심히 설파했지만 지금의 인류는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인류가 자초한 신의 징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비와 사랑, 희생과 봉사, 평등과 평화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종교는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라기보다 새로운 사회에 실패의 경험을 전수하는 징검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비와 사랑, 희생과 봉사, 평등과 평화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가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실천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그 숭고한 가치 실현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는 속담도 있지만 결과가 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종교의 개념

소납은 그 원인을 개념화된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종교, 즉 대중이, 일반신도들이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소납이 인용하는 사전적 정의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의 내용이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중의 생각이 반영되고 다수의 대중이 동의한 정의라고 판단하여 인용해 본 것입니다.

○ 위키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토리>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그 대상 '교리'행사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토테미즘·물신 숭배 따위의 초기적 신앙 형태를 비롯하여 샤머니즘이나 다신교·불교·기독교·이슬람교 따위의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신성하거나 거룩하거나 영적이며 신적인 것과 인간의 관계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작·운영하는 <문화원형백과사전>

초월적 절대자 또는 신성시하는 대상을 경외하는 신념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신앙기원·예배의 행위로써 구제·축복·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현상의 하나. 종교 구성의 3요소는 신앙의 대상, 신념체계, 종교집단(성직자와 신도로 구성)이며 그 위에 종교의례와 계율 등을 갖춘다. 종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모든 민족과 문화에서 볼 수 있으며 고대일수록 정치나 예술 등 사회의 전 영역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는 궁극적 가치체계가 되었다. 종교의 일반적 기능은 현실 세계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생기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3가지의 사전적 정의는 표현은 다르지만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첫 번째, 초월적 존재 또는 절대자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되어 있으며 두 번째, 인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 또는 절대자는 인간에 대해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세 번째, 초월적 존재 또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만이 인간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소납이 굳이 이 3가지 정의를 인용한 것은 종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고 만일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무비판적으로 용인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역시 새로운 종교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왜곡되었는가?

4.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단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자문화권에서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신종'의 단어입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불과 100년 전에 서양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일본의 학자들이 영어의 'religion'을 종교라고 번역해서 생긴 단어인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가 사용하는 '철학', '정치', '경제라는 단어들도 한자문화권에서 애초부터 쓰던 단어가 아니고 종교와 같은 경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왜 각종의 종교가 일찍이 발전한 한자문화권에서 왜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 궁금증에 대해 캐나다 맥길대학의 윌프레드 C. 스미스 교수가 <종교의 의미와 목적(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이라는 책에서 의미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북아시아 사람들에게 애초부터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고 대신 불교 또는 유교라는 이름의 전통만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교와 유교를 엄연히 종교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납 굳이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서양의 종교, 즉 'religion'의 개념이 종교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소납을 수행자의 길로 나서게 한 불교도 그 중 하나입니다.

5. 종교의 미래 가능성

서양의 대표 'religion'인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신이 존재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따라서 두 종교 간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인간에 대하여 기독교는 4세기에 활약한 그리스도교 신학자인 락탄시우스의 해석, "인간은 창조주 하느님만을 인식하고 따르며, 그분께만 공경을 마땅히 드릴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이 하느님께만 묶여 있고 매여 있다는 신심에서 종교라는 이름이 유래하고 있다."는 언급을 정설로 삼고 있는 반면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던 따르지 않던) 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가르침을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964년에 발표된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이 그리스도교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살아 있는 생명과 자연의 힘을 지배하는 놀라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현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연의 힘을 지배하고, 그 선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적당한 도구들을 창조하고, 그런 질서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위대함의 소산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명은 무엇보다도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시편 저자가 외치듯이 지혜와 선의 귀중한 보화들을 인간에게 풍요롭게 주시려고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하게 지성과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으로 올려놓으신 것이다. 계속하여 시편 저자는 외치고 있다. "당신은 인간을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어주셨나이다.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삼라만상을 그의 발아래 두시었으니." 이에 비해 불교를 포함한 동양의 종교는 '만물은 절대적 실재(ultimate reality)의 현현(manifestation)'이며 상호인과관계를 가지고 상호의존

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서양에서는 종교가 절대권위가 되었고, 동양에서는 종교가 생활의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히 여러 종교가 생활 속에서 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렇게 다른 모습의 종교들에서 어떤 부분을 가려 자양분으로 하고 추진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

사실 종교에 대한 비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그동안 넘칠 정도로 제기되었습니다. 아마 이 글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려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종교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종교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지만 회개와 참회를 통해 자기쇄신을 하고 사회봉사에 앞장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불자들은 부처를 닮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납은 종교의 이런 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자양분이 되고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 녹색평화의 가능성

다음으로 녹색평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평화에 대해서는 그 논의의 폭이 워낙 넓고 솔직히 소납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박명규 교수의 발제문 내용을 고찰하면서 소납의 경험과 견해를 밝히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 교수는 발제문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에 대해 “전통적인 체제대결이나 이념 갈등, 정치세력의 주도권 경쟁 차원에서 바라볼 단계는 지났고 체제경쟁은 더 이상 판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남한의 우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남북의 심각한 비대칭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가 더 큰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보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되, 북핵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통일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적 원칙, 실천방안 등을 진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내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가 꼽은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는 크게 4가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남한은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과의 적절한 조율과 협조체제를 전제하는 한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현 정권이 보수색채인 만큼 진보색채의 지난 정권이 추진한 정상회담보다 남북 상호간에 다룰 수 있는 의제나 논의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현 정권이 일부 예상되는 남한 내의 정성회담 반대여론을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타개해낸다면 북한에 미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의구심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한반도 녹색평화선언'의 채택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녹색평화'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체제의 구축', '친환경적 또는 지속가능한 남북경협과 민족경제공동체에 대한 접근', '인도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나 생태환경 문제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체제의 제도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납은 박 교수의 견해에 대해 동의하며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현 정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한 점은 탁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북문제는 남북한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이해가 얽혀 있고 그 이해의 내용이 정치, 경제, 군사 등 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교수가 제시한 '녹색평화'가 남북간 대화의 중심의제로 등장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한반도의 미래구상이 남한 만의 주장이나 의도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남한 내부적으로 남북문제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이견이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의 선택이 보편적 당위론으로만 결정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녹색성장과 평화체제의 구축은 남한의 발전을 위해서도 물론이거니와 통일한반도의 미래비전(생존전략)과도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구체적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 내에서 아직 평화체제의 구축에 방안에 대해 이견의 골이 깊고 녹색성장의 경우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라는 점입니다.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4대강 사업'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은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획 및 실천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구상하는 경제재건 전략에 대해 아직 첩보를 모아 분석하는 수준이라는 점과 남북한 간의 신뢰관계는 아직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전한 상태이고 남한의 정권교체로 인한 대북정책의 변화는 상대인 북한과의 신뢰를 튼튼히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이종무 소장이 <민족화해> 최근호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은 원자력과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고 증산 위주의 화학 농업을 주로 하면서 북한에게는 신재생에너지와 유기 농업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

만 소납 또한 그런 우려를 떨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7. 마치는 글

소납은 지난해 12월 16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2009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공동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커다란 약속이나 성과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일이고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이 서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이제는 그 동안 추진해온 여러 정책적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기다리는 전략'에서 남북관계를 '추동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년여를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정기'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정부의 이런 자세는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이 되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는데 일정 정도 기여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더 이상 '민족애'만을 앞세워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이제부터 남북관계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었고 어쩌다 돌발사건이라도 생기면 서로 극단적 언사들을 쏟아내면서 그간에 쌓아온 화해와 협력의 기초를 스스로 허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쪽에서는 과거 정부가 10여 년간 추진했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고 한나라당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 관련 예산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하고 이를 기초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인데 대통령 탄핵까지 했던 거대정당 한나라당이 과연 지난 대북정책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 내지는 책임회피가 아닌가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소납은 우선 연내에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늦추면 회담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보수신문으로, 대북문제에 대해 매우 완고한 입장이라는 평가를 듣는 조선일보가 지난해 8월 4일자 사설에서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는 한 대북 봉쇄도 소용없고, 그렇다고 전쟁으로 북한을 굴복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한번쯤 곱씹어 보았으면 합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막대한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통일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주어졌지만 어느새 시간이 촉

박합니다. 소납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대북지원이라는 틀을 벗어나 좀 더 큰 틀,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큰 그림, 녹색성장과 평화국가의 건설이라는 청사진을 그 통일의 고속도로에 우뚝 세워주길 기대합니다.

생태평화와 문화 공동체의 실천적 원리

한면희(전북대 HK교수)

I. 머리말

인류는 20세기에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겪었고, 그에 따른 참상을 성찰하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결성했다. UN이 들어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쟁은 이어졌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지속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약소국은 힘의 불평등을 개선하거나 당한 설움을 만회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형세이므로 지구촌은 끊임없이 유무형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각종 갈등과 대립에 종교적 색채가 드리워지면 문제는 더욱 심해진다. 이런 사태는 나라와 민족 간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도 집단이나 개인 사이에 전개되고 있다. 대립적 입장을 지닌 갈등 당사자들의 행보는 종종 양보 없는 폭력으로 비화하면서 승자와 패자로 갈리고, 그에 따라 약자의 고통은 지속된다.

폭력과 전쟁으로 비화하는 갈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종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은 평화(peace)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통적으로 평화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의되고 있다.[1] 첫 번째로 다가가는 "평화란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폭력의 감소다."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평화란 비폭력적이고 창조적 갈등의 변형이다."를 뜻한다. 첫째 정의는 폭력 대비적 평화 개념이고, 둘째 정의는 비폭력을 수반하는 갈등 대비적 평화 개념이다. 통상 폭력은 갈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둘째 정의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갈등 대비적 평화 개념은 물리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 및 문화적 측면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경우든 평화는 폭력과 결부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별된다.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이 그것이다. 직접적 폭력은 갈등 당사자 간의 대면 속에서 구체화하는 반면, 구조적 폭력은 간접적인 형태로서 사회의 제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대표적인 평화주의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유무형으로 이루어지는 직간접적인 폭력의 정당화와 허용이 그것의 기반인 문화적 토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적 폭력으로 설정하여, 이것마저 바로 잡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2] 그의 견해가 주목을 받는 점은 바로 이런 접근 방식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인간의 사회에서 이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회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 이후 지구촌 환경재난이 위기로 가시화하면서 평화의 지평 확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연과의 평화(peace with nature)를 도모하자는 발상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선도한 집단으로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Greenpeace)를 들 수 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월남전 참전에 반대한 일련의 미국 평화주의자들은 전쟁 반대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거나, 그 일부는 심지어 조국을 떠나 타

1) 요한 갈퉁, 강종일 외 공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들녘, 2000), 36쪽.
2) 위의 책, 19-20쪽.

국인 캐나다로 이주하기도 했다. 이들은 1970년 4월에 열린 지구를 구하자는 첫 번째 '지구의 날(Earth Day)' 행사를 이끄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그런 여세를 모아서 1971년에 미국 군 당국이 새와 수달의 서식지인 암치카섬에서 실시하려던 핵실험을 저지하고자 녹색 평화를 뜻하는 그린피스라는 이름의 선박을 띄운 것이 단체 출범의 계기였다.[3] 그린피스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회적 평화 운동을 전개하다가 자연과의 평화를 도모한 대표적 집단인 셈이다.

평화를 사회에서 자연으로까지 확장한 또 다른 대표적 사례를 종교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보편적인 종교라면 모두 평화에 관심을 표명하지만, 기독교는 더욱 각별하게 중시하는 편이다. 가톨릭교회의 중심인 로마 교황청은 수십 년 전부터 매년 새해 초에 교황의 이름으로 '평화의 날' 담화문을 발표한다. 너무 당연하게도 사회 속 평화가 그 내용이었다. 20세기 후반부터 피조물인 자연과의 평화를 부분적으로 언급하다가, 마침내 1990년에는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를 담화문 제목으로 삼음으로써 자연과의 평화를 전면으로 제시하였으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의 평화의 날 담화문에서 또 다시 주제를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로 설정하였다.[4] 교황청 문헌의 변화는 해가 거듭될수록 인류 사회가 자연과의 평화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자연과의 평화를 도모하는 접근을 크게 둘로 분별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환경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평화이다. 물론 양자를 함께 포괄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환경적 평화를 언급할 수 있지만, 자연과의 평화를 도모하는 방식과 내용의 현격한 차이에 비추어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양자를 구분하여 논의를 펼치겠다. 본 글에서 필자는 좁은 의미의 환경평화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견지하면서 자연에 다가가는 접근이기 때문에 사회적 평화가 구현되더라도 자연과의 평화 구축에 실패함으로써 인류를 위험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근원적으로 인간 사회와 자연의 유기적 관계성에 바탕을 둔 생태평화가 요청됨을 주장할 것이다. 생태평화는 폭력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평화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사회적인 것과 다소 다른 특성이 있음을 분별할 것이고, 그런 기반 위에서 생태평화에 대한 최소한의 의미 규정을 내릴 것이다. 끝으로 평화가 구현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에 핵심이 되는 실천적 원리를 네 가지로 축약하여 제시할 것이다.

2. 산업문명과 환경평화, 그리고 위험사회

산업사회 등장 이전에도 인류는 간혹 환경재난을 겪기도 했다. 이런 경우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연에 과부하를 주는 문화적 행위를 한 데서 비롯되었지만, 다분히 우연적이었다.[5] 산업사회 등장 이후 환경재난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위력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먼저 산업 선진국서 발생하다가 공해 다발성 생산설비가 후

3) R. Scarce, *Eco-warriors: Understanding the Radical Environmental Movement* (Chicago: The Noble Press, Inc., 1990), ch. 4.

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및 교황 베네딕토 16세, 「201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참조.

5)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볼 것. 도날드 휴즈, 표정훈 역, 『고대 문명의 환경사』 (사이언스북스, 1998), 4장.

진국으로 이전되면서 개발도상국가도 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환경재난은 초기에 국지적 양태로 발생하였지만, 산업화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전 지구적인 문제로 증폭되고 있다. 산업문명의 환경재난이 구조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선진국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지구촌 일반의 위기로 감지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기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다. 영국의 런던스모그 사건은 1952년에 발생했고, 일본의 4대 공해병 사건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어났다. 물론 전파매체를 통해 이런 소식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특히 미국인들의 환경적 의식을 일깨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1962년에 여성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쓴 『침묵의 봄』이란 한 권의 책이었다.[6] 이것은 20세기 들어서서 대량 생산을 통해 사용하기 시작한 온갖 화학약품으로 인해 자연의 먹이사슬 체계가 깨지면서 봄은 찾아오지만 새가 우짖지 않는 침묵의 계절이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DDT와 같은 농약은 땅과 강으로 스며들고, 이것은 그곳서 살아가는 지렁이와 물고기의 몸에 축적되며, 또한 이를 잡아먹는 새의 알은 부화되지 못하는, 그래서 봄은 왔지만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을 수 없는 시절이 올 수 있다는 경종의 메시지였다. 물론 거기에는 자연의 침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그 화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0세기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던 소아 암(예 백혈병 등)이 급증하고 있고 성인에게도 암이란 병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대체로 산업사회의 화학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7]

카슨의 저술은 출간과 동시에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산업계와 과학계는 과장으로 일관된 낭설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었지만, 다수의 시민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확인되기 시작한 것은 카슨의 지적이 대체로 온당하다는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안에 임해 있는 한 무인도는 펠리컨의 주된 서식지였는데 그 개체 수가 점차 줄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마침내 지역 과학자 집단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살펴본 결과, 그해 낳은 펠리컨의 알은 1200개 정도였는데, 부화된 것은 단지 2개뿐이었다.[8] 정밀 조사 결과 DDT와 같은 농약이 새 알의 두께를 얇게 한다는 견해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시민들이 암에 걸리는 비율이 부쩍 높아지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후부터 DDT와 같이 독성이 강한 농약은 생산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도 생겨났다. 마침내 환경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종합적 성격의 법률인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제정되면서, 이런 제도를 관리하고 정비할 환경 부서인 연방 환경청(EPA)이 1970년에 탄생했다.[9] 특히 1970년 1월 미 대통령이 서명한 연두교서는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내용을 당시로서는 심도 깊게 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은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서유럽 국가 또한 뒤늦게나마 환경문제를 정책적으로 풀기 위한 시도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서유럽이 채택한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은 환경문제를 관리적 형태로 제어하는 방식이었고, 이런 지침은 후일 개도국으로도 이어졌다. 당시 환경정책은 자연 그 자체를 보호하려는 데 목표를 둔 것은 아니었다. 정책적 인식은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해 인간의 환경여건이 지나치게 나빠지고 그 정도가 누적되어 가중된 형태로 되

---

6) Rachel Carson, *Silent Spring* (New York: Ballantine, 1962).
7) 레이첼 카슨, 정대수 역, 『이제 봄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넥서스, 1999), 14장.
8) BBC 제작, KBS 방영, <20세기 희망과 절망: 상처받은 지구>, 1997.10.31.
9) M. E. Kraft, "U.S. Environmental Policy and Politic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O. L. Graham, Jr. ed., *Environmental Politics and Policy, 1960s-1990s*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0), p. 21.

돌아옴으로써 현대인의 삶에 치명적 위해를 드리우게 되는데, 가능한 한 이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환경문제를 관리하자는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이런 접근은 자연에 대한 직접적 배려가 아니라, 인간의 환경여건과 관련되는 한에서 자연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와 UN이 환경정책의 차원에서 전개하는 접근을 평화와 관련지을 때, 좁은 의미의 환경평화(environmental peace)의 시도라고 보겠다.

환경평화의 담론에 담긴 철학적 세계관은 서구가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anthropocentrism)이다. 이 입장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특별히 우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자연을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간주한다. 이런 철학의 윤리적 접근은 자연을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의 담지자로 설정한다.[10] 물과 공기, 토양과 같은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 맑고 깨끗한 상태로 풍부하게 주어져 있으면 그 도구적 가치, 즉 경제적 값어치는 저평가되지만, 반대로 나빠지고 부족해지면 그 값은 오르게 된다. 값이 오르고 귀해진 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부자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환경여건이 나빠지는데, 비용을 들이면 개선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태 해결은 기꺼이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부자 나라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부자가 되는 경제성장은 끊임없이 요구된다고 역설한다. 물론 이런 입장은 소실되는 자연자본을 인공자본(human-made capital)으로 대체하는 과학기술의 연구를 중시한다.[11]

좁은 의미의 환경평화를 추구하는 주체는 주로 국가와 UN이었고, 책임 있는 대기업은 이런 흐름에 뒤쫓는 형태로 동참하는 분위기였다.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그 성격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염원의 사후관리 해법(end-of-pipe solutions) 위주였다. 산업공단의 굴뚝과 하수구에서 정해놓은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것이 대체적인 방식이다. 환경평화 담론은 경제성장에 적극적이면서 자연에 대해서는 관리주의 형태를 취하는 소극적 방식을 선호해 왔다. 이런 접근을 취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한데, 환경평화를 사회의 최고 가치로 설정한 경제성장보다 하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업의 경제적 영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그 아래 영역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중심의 환경평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21세기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음은 속 좁은 환경평화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장차 인류는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12]

위험사회를 예고하는 징후로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로 온실가스 과다 배출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산업화 이전 1천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70~290ppm의 범위에서 변화를 보이며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산업

10) J. B. Callicott, "The Search for an Environmental Ethic," T. Regan ed., *Matters of Life and Death* (New York: McGraw-Hill, 1993), p. 341.

11) Robert U. Ayers et al., "Strong versus Weak Sustainability: Economics, Natural Science, and Consilience," *Environmental Ethics* 23 (2001), p. 157.

12) 위험사회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U. Beck,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1992). 이것에 대한 번역서로는 다음을 볼 것. 울리히 벡, 홍성태 역,『위험사회』(새물결, 2006).

화 활동으로 인해 1900년에 295ppm에 이르렀고, 1950년에 310~315ppm, 그리고 1995년에 360ppm에 도달했다.[13] 최근인 2005년에는 379ppm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현재의 가파른 추세대로 해마다 2~3ppm씩 오르게 되면 2050년에는 무려 500pp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는 2007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온도가 0.74℃ 상승했고 방치할 경우 금세기 말에는 최대 6.4℃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동 보고서는 기온이 1.5~2.5℃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동식물 종의 20~30%가 멸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획기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막화 확산과 태풍 및 가뭄 빈발, 열대성 전염병 창궐 등 지구적 재앙으로 번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위험사회의 또 다른 징후로 슈퍼바이러스의 도래를 꼽을 수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말라리아, 결핵 등 각종 전염병으로 숱한 곤욕을 치러왔다. 19세기 말부터 장티푸스 백신과 페니실린 등 다양한 백신의 발견과 개발, 대량생산 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환경보건상의 위생적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박테리아 등 여러 세균성 질환에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수명도 대폭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미생물 역시 백신에 저항하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했다. 특히 축산업이 효율적 이윤 창출을 위해 공장식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열악한 위생여건으로 인한 질병 노출을 차단하고자 가축의 항생제 복용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내성을 지닌 슈퍼바이러스의 출현이 예고되고 있다.

퇴치된 것으로 알려진 결핵이 최근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1990년대 초 내성 결핵균으로 인해 사망한 수가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에 이르렀고, 1997년에 감염된 환자가 5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DT와 같은 화학약품 내성의 말라리아가 출현하여 결핵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1959년에 중아아프리카에서 침팬지로부터 인간에게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에이즈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데, 1978년부터 20년 사이에 1400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998년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 4700만 명 가운데 3분의 2가 아프리카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의 바이러스는 청결하지 못한 생활여건에 노출된 가난한 국가와 일반 민중들에게 높은 전염율과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다.[14] 2009년에 전 세계를 긴장시킨 인플루엔자A[H1N1]도 변종으로 출현할 경우, 또 다시 세계를 경악시킬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슈퍼바이러스의 침투는 비교적 눈에 잘 뜨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반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서 구조적으로 현대인을 서서히 침몰하게 만드는 위험요인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 내분비교란물질을 들 수 있다. 현대 산업화 사회는 각종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화학물질과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 가운데 일부는 자연에 노출되면서 햇빛 등에 의해 분해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동물의 생체 안에 축적되어 있다가 먹이사슬 체계를 거쳐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1990년 미국 플로리다의 한 호수를 조사하던 과학자 연구팀은 주변 호수에서 사는 악어의 80% 정도가 성기 이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고, 악어가 낳은 알의 75% 이상이 죽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원인을 추적하면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매우 높음을 식별하는

13) J. R. 맥닐, 홍욱희 역, 『20세기 환경의 역사』 (에코리브르, 2008), 199쪽.
14) 위의 책, 330-340쪽 참조.

등 거의 모든 악어에게서 호르몬 비정상 상태를 분별해내었다.[15]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암수 동체의 잉어, 파리에서는 암컷이 된 수컷 뱀장어,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생식기 비정상의 표범, 일본에서는 암컷화하는 가자미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화학물질이 자연으로 흘러들어가서 어류와 패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에 축적되고, 그 안에서 대표적인 암컷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행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자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생물학적 건강성 지표인 정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1950년대 출생의 남성에게서 1밀리리터 당 평균 1억 이상의 마리 수가 1970년대 출생의 남성에게서 7,500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불과 2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같은 비율이 지속될 경우, 1990년대 출생의 남성이 성인이 되었을 때 5000만 마리로 떨어질 것이고, 그 경우 불임클리닉이 생식능력 위험 기준으로 보는 2000만 마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6] 환경호르몬은 다른 관계성 질환의 한 원인으로도 간주되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여성의 유방 비대증과 남성의 성기 왜소증, 그리고 유방암과 고환암, 전립선비대증 등 여러 질병의 발생과 직결되어 있다. 환경호르몬 분류 물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PCBs에서 비스페놀A, 노닐페놀, 각종 프탈레이트에 이르기까지 60가지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가소제와 계면활성제, 농약, 페인트 등의 형태로 다가와서 자연으로 흘러들거나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다.[17]

인간 중심의 환경평화는 경제성장의 지속을 우선시하면서 환경문제를 관리적 형태로 제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과의 실질적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 환경평화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통한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면서 인간에게 미치는 환경적 위해를 차단하는 선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관리적 접근을 취하는데,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제도와 생활양식이 바로 자연을 죽이고 또 인간의 건강한 삶마저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즉 현상적 치료에 머무를 뿐 근원적 치유의 수준으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환경평화를 도모하는 정도로는 인류의 위험사회 진입을 막을 수 없다. 인류가 자연에 구축한 문화적 생활을 온전하게 존속시키려면 인간의 탐욕을 반영한 사회제도와 생활양식의 전환을 통해 자연과의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변혁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환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인간 중심의 환경평화를 추구하는 지평에서 자연과 상생하는 생태평화의 지평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본다.

3. 폭력 대비적 생태평화의 길

생태평화(ecological peace)의 특성은 우선 생태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 생태학(ecology)의 출현 이전에 서구인이 자연에 대해 가졌던 인식은 전통 생물학을 통한 것이다. 당시 생물학은 근대과학의 기반 위에서 탄생한 탓에 과학혁명을 촉발한 물리학 등과 같은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다.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이 지닌 특징은 방법론적으로 개체론(individualism)에 따른 분리주의이다. 우주와 사회, 인체와 같은 전체를 기술할 때, 최소의 구성요소로 분리하고 낱개의 특성을 파악하여 합하는 것으로 다가간다.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 합으로 환

15) 데보라 캐드버리, 전득산 역,『환경호르몬』(전파과학사, 1998), 프롤로그 참조.
16) 위의 책, 293쪽.
17) 와따나베류지 외, 정해상 외 공역,『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겸지사, 1999), 2장 참조.

원되고 결정되며, 내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의 외적 결합은 기계론적 법칙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된다. 생명공학에서 보듯이 동물의 유전자를 떼어내서 식물의 세포에 붙이는 방식도 이런 접근의 소산이다. 이렇게 해서 근대과학과 그것에 영향을 받은 현대 과학기술은 이원론과 분석주의, 환원주의, 결정론, 기계론적 법칙주의를 특징으로 하게 된다. 생명 현상을 이해할 때도 같은 방법이 적용되었고, 그래서 근대의 생물학이 탄생했다.[18] 그런데 이런 접근으로 생명 현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19세기 말부터 달리 설명하는 접근이 고개를 들었고 20세기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흐름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생태학이다.

생태학은 동물과 식물 또는 각 종의 생명유지 현상을 설명할 때 그것이 처한 물리적 환경과 상호연관을 통해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19] 물론 생태학 진영 내에 여전히 환원론과 전체론(holism) 사이의 대립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지만, 필자는 생태학이 자연의 생명현상을 유기적 연계성(organic relationship)에 의해 이해하려는 전체론적 접근이라고 본다. 이런 생태학적 기술은 환경문제에 대한 첫 번째 위기의식이 고조되던 1960년대 말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환경재난은 인간에게 사회문제의 한 유형으로 비화하면서, 이를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때 인간이 입는 환경적 피해 규명과 해결은 불가피하게 자연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생태학의 자연 이해를 반영하는 사회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녹색정책이 입안되면서 사회과학적 생태론의 접근이 형성된 것이다. 예컨대 녹색당의 출현은 이런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사회지평에서 채택되는 녹색당의 정책은 강령과 이념에 의거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사회를 조망하는 생태주의(ecologism) 사상이 짙게 배어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20] 자연에 대한 과학적 기술로 등장한 생태학의 설명이 사회의 정책 이론, 더 나아가 사상과 이념의 지평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평화에 포함된 생태적 의미는 맥락에 따라 자연과학의 생태학적 영역일 수 있고, 사회과학의 생태론적 범주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문학의 생태주의적 지평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두에 일관되게 관통되어 있는 것은 자연적 존재 사이에 내적 연관성이 형성되어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인간이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는 생태평화는 좁은 의미의 환경평화와 다르다. 환경평화는 인간(사회)과 자연을 목적과 도구로 이원화하는 도식을 유지하는 반면, 생태평화는 인간 사회와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자연이 도구를 넘어선 가치(non-instrumental value)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여 자연을 보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21]

인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도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나 폭력의 지양을 도모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회 구성원 사이의 내적인 유대, 즉 친밀한 유기적 연계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실제로 평화주의자 갈퉁은 사회의 평화를 인간의 신체적 건강에 비유하고 있다. 그는 "건강을 위한 조건이 인간 신체의 중요한 요소들의 안정된 균형 상태"이듯이,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은 균형 잡힌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22] 서양

---

18)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다음을 볼 것. 한면희, 『초록문명론』(동녘, 2004), 4장.
19) 로보트 매킨토시, 김지홍 역, 『생태학의 배경: 개념과 이론』(아르케, 1999), 23쪽 참조.
20) 자연과학의 생태학에서 사회과학의 생태론, 그리고 이념적 생태주의로 이어지는 의미 확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한면희, 「인문생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학논집』 36집(한국학연구원, 2008).
21) 자연의 탈-도구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J. B. Callicott, "Non-Anthropocentric Value Theory and Environmental Ethics," *Philosophical Quarterly* 21 (1984), pp. 299-309.
22) 요한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7쪽.

의학은 개체론의 방법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현미경 사용 방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개별 장기의 특성 파악에 매달림으로써 장기 사이의 관계적 이해가 매우 약한 편이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 의학은 전체론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오장육부 사이의 관계적 이해에 강한 편이다. 예컨대 인체는 관계적 연결 네트워크인 경락체계에 기(氣)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 장기 사이의 균형이 알맞게 이루어지면 건강을 유지하게 되지만, 외부의 사기(邪氣)가 침입하거나 경락의 통로에 이상이 생겨 균형 상실이 나타나면 병에 걸리게 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자연과 인간 모두에 관통하는 것은 우주에 가득한 기이다.

서양의학이 주로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동아시아 의학은 예방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치료에 부응하고자 한다. 대표적 의학서로서 중국 한나라 때 편찬된 황제내경은 인간의 신체가 자연의 음양 및 사계절의 흐름에 조응하는 연유로 사람은 누구나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형태로 병을 예방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23] 그런데 갈퉁 역시 “치료적 처방은 소극적인 경우를 목표로 하고, 예방적 처방은 적극적인 경우를 목표로 삼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건강과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평화를 창조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치료)과 폭력을 피하는 것(예방)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24]

예방에 주안점을 두는 평화 개념은 동아시아 건강 이해와 평행적이고, 동아시아 인체 이해는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태적 의미는 동아시아 자연관이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연계성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평화는 천지인 합일의 시각으로 자연과 인간 사회를 조망함으로써 인간이 동료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존중과 배려, 호혜성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생태평화는 생태 친화적 문화를 새롭게 조성하는 형태로 자연과의 평화를 구조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생태평화는 유기적 연계성의 기반 위에서 사회와 자연을 동일 공동체로 간주한다. 인간을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회적 평화와 생태평화 사이에 적지 않은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평화가 갈등 조절을 통한 폭력 비화를 차단하고자 하는 반면, 생태평화는 갈등보다는 인간 사회가 자연에 대해 가하는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강조에 따른 차이가 있다.

산업문명의 등장 이후 사회는 물질적 풍요라는 목적 성취의 도구로 삼아 자연에 수탈을 일삼고 있는데, 그 양상이 평화를 유린하는 폭력과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회가 자연에 가하는 직접적 폭력의 유형으로는 자연이 감내할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서는 대규모 개발 행위를 들 수 있다. 예컨대 강과 강변에 대형 선박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과 도로를 설치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강 생태계와 동식물 서식지의 직접적 파괴로 이어진다. 간접적 폭력의 사례로는 상품(예 선박)의 생산 과정에서 페인트칠을 하는데, 그 도료 성분이 물에 용출되어 어패류에게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연쇄적인 자연 교란이 일어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 구조물과 자동차, 대형 선박, 에어컨, 농약, 페인트, 헤어스프레이, 세제 등을 사용하는 현대인의 생활양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자연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이런 것을 출현시킨 산업문명의 생활양식은 그 자체가 자연에 문화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문명은 자연에 구조적으로 문화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문화의 자연에 대한 접근과 질적

23)『皇帝內經: 素問』,「四氣調神大論」 참조.
24) 요한 갈퉁,『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8-19쪽.

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평화와 생태평화의 동일성은 둘 다 폭력을 해소하거나 지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접근하면 양자 사이에는 다소 다른 성격이 드러난다. 인간 사회에서의 폭력은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으로 구분이 된다.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행위는 정신적 폭력의 일종이다. 물리적 폭력의 사례로는 구타와 전쟁의 살상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 행하는 폭력에도 분별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인간이 고양이나 개와 같은 동물에게 행하는 야만적 태도와 위압적 언사는 역시 정신적 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연의 모든 존재 단위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에 대해 가하는 인간의 물리적 폭력 규정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폭력과 먹이사슬의 관계적 행위는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적인 것과 생태적인 것 사이에서 폭력의 의미가 달라지는 분기점이 형성된다. 초식동물이 풀을 뜯거나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를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문화적 생존의 차원에서 행하는 자연 이용을 폭력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성격 규정이 가능하려면, 필자는 폭력 대비적인 생태평화의 개념을 설정하고자 할 때 개체론적 접근이 아닌 전체론적 접근이 요청된다고 본다.

서양의 일각에서 개체론의 접근 방식으로 자연에 다가가는 환경윤리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공리주의 계열의 학자 싱어(P. Singer)는 동물 각각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모든 동물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25] 칸트적 의무론의 계열에 있는 레간(T. Regan)은 동물 하나하나가 삶의 주체로서 살 권리를 갖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동물에 대한 침탈은 불식되어야 한다고 여겼다.[26] 슈바이처의 생명외경 사상을 발전시킨 테일러(P. Taylor)는 생명체 하나하나가 각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론적 생명 중심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27] 동물 해방과 권리에 대한 주장은 불가피하게 이념적 채식주의를 수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개체의 특성에 비추어 동물을 보호하자는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식탁에 육류와 어류를 올리는 행위 자체가 폭력이므로, 자연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면적인 채식주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생태적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곳에서는 인간이 채식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프리카와 에스키모인의 거주지 등에서는 원천적으로 채식에 의해서만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물 중심주의로 이행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동물은 물론 식물까지 포괄하는 생명체 하나하나에 대한 침탈 중지를 시행해야 하므로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하는 폭력을 개체가 갖는 특성에 비추어 다가가는, 즉 개체론적으로 접근할 경우 스스로의 안위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생태평화를 운위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폭력 대비적 생태평화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해 행사하는 폭력에 대해 전체론적 접근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법론으로서 전체론이 갖는 기본 성격은 전체의 구성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수용하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전체론도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함을 드러낸 바 있다.[28] 기본적으로 부분들의 유기적 관계성을 수용하는 토대 위에서 생명 실체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된다. 생명 실체 개념

---

25) P. Singer (2nd ed.), *Animal Liberation* (New York: New York Review of Books, 1990), p. 8.
26) T.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London: Routledge, 1983), p. 244.
27) P. W. Taylor, *Respect for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121-122.
28) 한면희, 「가이아 가설과 환경윤리」, 『철학』 제59집 (1999), Ⅳ절.

을 전체에 두면, 가이아 가설과 같이 유기체 전일론(有機體 全一論)으로 부상한다. 반면 필자는 생명 실체 개념을 낱 생명체에게 두고, 전체를 생명의 장(field)으로 설정하면 필자가 제안한 기-생태주의로 나타나는 유기적 전체론(有機的 全體論)에 이르게 된다. 대조적으로 조망하면 개체론은 평화 구현에 역행하고 유기체 전일론은 전체주의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 반면, 유기적 전체론은 인간과 같은 개체의 관계적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전체적 성격을 띠는 사회나 자연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실천이 가능하게 된다.[29] 동아시아 세계관은 전체론의 지평에 놓여 있지만, 유기적 전체론으로 발전시킬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에서 알맞은 생기를 공급받아야 하고, 자연과 자연적 존재는 이런 것을 제공해주거나 생기가 흐르는 터전과 통로이다. 동학(東學)은 인간의 섭생이 갖는 문제를 해소하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일러 이천식천(以天食天), 즉 인간인 한울님이 자연의 일부인 또 다른 한울님을 먹는다고 했다.[30] 이것은 먹이사슬 관계에 놓인 자연적 존재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유기적 전체론의 시각에서 폭력 대비적 생태평화에 다가가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생존과 폭력의 긴장관계도 해소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인간의 문화적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인간은 엄격한 의미에서 문화적 존재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인 동식물 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화(culture)는 어원학적으로 자연에 대한 경작(cultivate)에서 유래했다. 이때 인간이 스스로의 생존에 알맞도록 자연을 경작하는 것이 가능했던 연유는 인간이 이성 또는 정신을 갖게 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엄격한 문화적 이성(cultural reason)은 인간만이 지닌 특성이고, 이로써 인간은 자유를 구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문화인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개인주의적이냐 아니면 공동체주의적이냐의 문제는 논란을 빚는 성격의 것이다. 가령 개인주의적 자유가 다른 사회 구성원의 그것과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 할수록 사회적 평화는 그만큼 깨지기 쉽다. 양심과 사심의 양면성을 함께 지닌 인간 각자가 자신의 고립적 자아를 완성하는 데 주력할 경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실종됨으로써 갈등과 폭력은 증대되고 마침내 평화 유린의 사태로 전개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라는 전체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으로 간주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면 할수록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감수하게 만드는 전체주의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다. 문화적 자유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양 극단에서 중용(中庸)의 정도를 취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인간이 한편으로 타인과의 선의의 유대를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공동체주의적 연대(communitarian solidarity)를 도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 연대의 기반 위에서 각 개인이 스스로에게 고유한 자유(inherent freedom)를 한껏 펼칠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적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 자연에 다가가면서 추구할 생태평화는 사회적 평화와 견줄 때 폭력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형태로 다가가기 때문에 동일 지평에 놓여 있지만, 양자에 적용되는 폭력의 성격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서도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 개인은 자유와 생명의 담지자이므로 한 개인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해서 타인의 자유와 생명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폭력이고 살인으로 규정

29) 한면희, 『동아시아 문명과 한국의 생태주의』(철학과현실사, 2009), 6장 4절.
30) 김지하, 『밥』(분도출판사, 1984), 55쪽.

된다. 이에 반해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에서 먹이를 취하는 것은 폭력이나 살인으로 규정될 수 없다. 논과 밭에서 쌀과 채소를 취하여 식탁을 차리는 행위가 자연과의 평화를 깨뜨리는 폭력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에서 일상으로 일어나는 먹이 침탈 관계가 평화 유린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핵심적 관건은 인간의 문화가 구조적으로 자연의 생명부양 체계를 깨뜨리게 될 때 그것이 문화적 폭력으로 규정되는데, 이것이 가시화함으로써 자연과의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점이다. 인간의 문화적 폭력은 자연에 해를 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에 따른 후유증이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인간에게도 돌아온다. 인간의 환경재난 그 자체가 인간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임은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인간 사회가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자연에 문화적 폭력을 구조적으로 드리워서 질병과 죽임의 그림자를 증폭시키게 되면, 그래서 점차 악순환으로 탈바꿈을 시키게 되면, 일차적으로 동식물 등 자연적 존재의 피해가 나타나게 되고, 뒤이어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은 인간 사회와 자연의 유기적 관계성이 내적으로 실재함을 뜻한다. 자연에서 사물 사이의 관계성은 사물만큼 실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31] 따라서 생태평화는 인간이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연서 누리는 온갖 혜택에 보은하는 형태로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를 구축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지속가능한 문화와 생태평화의 실천적 원리

일반적 의미의 평화는 폭력의 부재나 감소를 의미한다. 생태평화는 이에 조응하는 형태로 발전된 것이어야 평화의 맥락적 의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생태평화에 대한 의미 규정을 다음과 같이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생태평화는 인간 사회가 자연에 문화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의 생명부양 체계가 유지되고, 그로 인해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리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생태평화는 인간이 존엄한 문화적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적 폭력과 갈등이 부재하거나 감소하도록 하면서, 더불어 자연에 구축한 문화가 자연서 조성되는 생명의 선순환을 질병과 죽임의 악순환으로 바뀌지 않도록 생명부양의 체계를 존속시킴으로써 현존 생물 종이 진화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폭력의 부재나 감소를 뜻한다.

인간 사회가 생태평화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규범적 원리를 최소한으로라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그 핵심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겠다. 그것은 유기적 연계성과 자연의 탈도구적 가치, 문화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성이 어우러지는 존엄한 삶의 문화적 양식의 원리이다. 물론 이 안의 원리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네 가지 이상으로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최소화하여 넷으로 분별하고자 한다.

첫째, 생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과 존재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적 연계성의 원리(principle of organic relationship)를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것에 대립되는 것이 이원론적 분리주의 인식인데, 여기에 우열 의식이

31) P. Sherpard, “Ecology and Man: a Viewpoint,” P. Shepard et al. eds., *The Subversive Science* (Boston: Houghton Mifflin, 1969), p. 3.

합세하면 산업사회 현대인의 행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화적 폭력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에 자연에는 물론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도 생명의 그물(web of lives)이 존재론적으로 펼쳐져 있음을 인식하여 생명 순환을 저해하지 않거나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자연의 탈도구적 가치의 원리(principle of non-instrumental value)를 수용하고, 그에 따라 자연을 대우하는 실천적 행보를 취하여야 한다. 인간이 자연을 도구로만 간주할 경우, 인간 문화의 자연 이용은 수탈로 변모되어 생명의 원천을 파괴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문화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자연은 생명의 원천이면서 또 생명 탄생과 유지, 소멸의 과정을 겪는 장이므로 인간에게 자연은 도구를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탈도구적 가치의 유형으로 자연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나 고유한 가치(inherent value) 또는 온가치(Onn value) 등을 찾을 수 있다.[32] 탈도구적 가치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 인간이 이런 가치관으로 자연을 조망하여 다가갈 때, 현존 생물 종은 인간과 함께 진화의 여정에 동참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과 생명은 필연적으로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의 문화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원리(principle of ecological sustainability)를 준수하도록 재구축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문화는 자연에 대한 활용을 전제로 한다. 자연에 대한 문화적 활용은 자연의 생명부양 체계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하다. 그런데 자연의 생명부양 여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결국 인간 사회의 경제도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인간 경제는 생물권 경제의 하위에 속하기 때문이다.[33] 따라서 문화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원리는 인간 경제의 성장의 한계(limits of growth)를 포함한다. 양적 크기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제성장은 질적으로 변화를 꾀하는 경제성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인간 문화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평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넷째, 인간은 문화인으로서 자연의 생명적 기반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그 범주 안에서 누구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 동료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므로 존엄한 삶의 문화적 양식의 원리(principle of the cultural modes of dignified life)를 실천해야 한다. 인간은 정신을 지닌 고유한 삶의 주체이고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함께 공동체적 생활을 도모하는 존재이다. 이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서 스스로의 인격을 함양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산물을 향유하거나 자연 활용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짊어지게 될 때도 정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원리가 사회적 평화는 물론 생태평화에서도 요청되는 이유가 있다. 사회적으로 빈곤에 내몰린 집단은 불가피하게 나무를 베어 목탄을 굽는 등 원시적 형태로 자연에 의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을 이용하여 획득한 자산의 분배가 부정의한 양태로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야기되어 사회적 평화를 저해하는 일로 나타

32) 필자는 서구의 생태윤리가 제시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나 고유한 가치를 이분법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와 자연의 호혜적인 관계적 가치, 즉 상생적 가치로서 자연의 온가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한면희, 『환경윤리』(철학과현실사, 1997), 5장; 『동아시아 문명과 한국의 생태주의』(철학과현실사, 2009), 6장.

33) H. E. Daly, "Sustainable Growth: An Impossibility Theorem," H. E. Daly et al. eds., *Valuing the Earth: Economy, Ecology, Ethics* (Cambridge: The MIT Press, 1993), pp. 267-268.

난다. 평화적 접근은 사회제도를 통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원리는 앞의 셋째 원리와 맞물려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생태평화는 사회적 평화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멀리 내다보면, 사회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34]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평화가 구현되고, 정의가 흘러야 하며, 그리고 자아실현에 따른 자유로운 삶이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덕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생태평화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은 사회인으로서 동료 사회 구성원과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때 갈등과 폭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만 인간이 누리는 행복한 삶이 자연에 대한 약탈과 희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삶의 문화는 지속가능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미래세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평화 없는 생태적 평화는 문화인에게 무익하지만, 생태적 평화 없는 사회적 평화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5. 맺는말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인간이 선악의 양면성을 띠고 있고 그 지혜도 제한적인 연유로 사회에서는 각종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일부 갈등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증폭되어 대립과 살상, 전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피해를 끊임없이 입게 된다는 점이다. 윤리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규범적인 행위의 원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이때 가능한 한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올바르게 조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평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구하게 된다. 지금까지 평화는 사회적인 것으로만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증폭되면서 인류는 자연과의 평화도 함께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이해하게 되었다.

인류가 새롭게 도모할 자연과의 평화는 접근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보수적 환경평화와 진보적 생태평화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 중심의 환경평화는 산업문명서 누리는 물질적 혜택을 향유하면서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환경문제가 사회적 해악으로 의미 있게 드러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따라서 자연에 거주하는 인간의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므로 여기서 자연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런 환경평화 접근은 현상적 접근에 불과하므로 환경문제를 위기로 증폭시키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 미래세대 인류를 위험사회로 내몰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진보적 생태평화는 근원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현존 산업사회의 사회제도와 생활양식, 더 나아가 가치관까지 포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생태평화는 사회적 평화의 의미를 계승하는 선에서 자연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시도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폭력을 불식시키는 형태로 의미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적절하게 다가가는 문화인의 자연 활용이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으려면 문화적 행위와 폭력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는 구획 기준은 문화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자연의 생명부양 체계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의 산업문명은 생태평화

34) N. J. Vig and M. E. Kraft,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in N. J. Vig and M. E. Kraft eds., *Environmental Policy* (Washington, DC: CQ Press, 2006), p. 376.

를 깨뜨리고 있는데, 그것이 구조상 환경재난을 위기로 증폭시킨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생태평화는 사회적 평화의 연장선상에서 인간 사회의 폭력 부재를 희구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문화적 폭력이 자연의 생명부양 체계를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문화적 인간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평화로운 문화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생태평화가 구현되도록 노력할 때 비로소 인류는 미래세대와 자연에 대해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2세션

사회 | 윤영관(서울대학교)

한반도 녹색평화의 실천과 과제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비핵화와 평화체제 ·····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 김영윤(통일연구원)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DMZ의 활용 ·····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비핵화와 평화체제[1)]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I. 문제설정

북한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다른 국가들처럼, 핵무기를 공격용이 아닌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력'으로 정당화했다. 북한이 설정한 억지의 대상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극악한 제재압력책동"이다.[2)] 또 다른 정당화의 논리는, 핵무기의 개발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세계적 수준에서 핵군축과 핵철폐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1964년 10월 중국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비슷한 정당화의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전쟁과 위협의 억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핵군축 및 핵철폐로 정당화하는 모순적 담론의 구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그 목적이 타국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침해에 있지 않고 또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때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만 충족시킨다면" 국제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3)]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국내법 위반이다. 1986년 4월 제정되고 2004년 4월 "수정보충"된 북한의 「환경보호법」 제7조는,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고,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다른 한편, 남한의 이명박정부는 북한에게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제안하면서도, 전임 노무현정부처럼 북한의 핵무기와 핵위협에 미국의 '핵우산'으로 맞서는 전통적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2009년 10월 41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5)] 미국은 2010년 4월 6일 「핵태세보고서」에서, NPT를 탈퇴하고 "핵 비확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잠재적 적국" 북한을 사실상 핵공격 대상에 포함시켰다.[6)] 북한은 외무성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 또는 담화보다는 '낮은' 수준인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핵위협이 지속되는 한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증강하고 현대화하겠다고 응수했다.[7)]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남한이 핵실험이나 핵개발과 같은 반환경적 행위를 하지

---

1) 불완전한 초고입니다.
2) 2006년 10월 3일 북한 외무성 성명. 북한의 발표문은, www.kcna.co.jp 참조.
3) 이근관, "국제적 인권으로서의 평화권에 대한 고찰," 『인권평론』 창간호(2006), p. 225.
4)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전후로 북한이 「환경보호법」을 개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991년 3월 17일 『민주조선』에 실린 법규해설에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 화학전쟁 도발책을 반대하며 우리 민족과 인류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도록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는 구절이 보인다. 반핵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법」 7조에 대해서는 '무규범적 정치선언'이라는 비판이 있다. 박상철·김창규,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 북한법제분석 95-2, 한국법제연구원.
5) 한미안보협의회 성명은, 국방부 웹사이트, www.mnd.go.kr 참조.
6)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April 2010.
7) 『로동신문』, 2010년 4월 10일.

못하게 하는 제약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이명박정부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수도 있는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그리고' 이명박정부는 이른바 친환경적 '녹색성장'의 담론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2009년 7월『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제출했다.[8] '녹색'과 '성장'이 충돌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녹색성장은 녹색을 상품화하는 담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국가담론의 중추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 계획서에는 북한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지 않다.

남북한은 환경 또는 생태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핵문제'에 대해 '비핵화'라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 1992년 1월 20일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남북한이 동의한 문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핵화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비핵화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한반도적 맥락에서 비핵화가 평화와 동의어라고 할 때, 평화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평화의 길에 대해서도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핵화를 추동하는 발본적 상상력인 녹색담론에서도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21세기 가치의 하나"인 '녹색·평화의 패러다임'에서,[9]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문제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녹색·평화 국가론과 국제질서

(1) 국가행동의 이론

국가행동의 이론화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10] 의인화된 행위자인 국가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국제정치이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정도다.[11] 국가행동의 이론화는 국가의 밖과 안의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미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국제체제적 수준에서의 힘의 분포가 국가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나 또는 국내정치를 통해 국가행동을 설명하려는 자유주의 계열의 이론들이 서로 경쟁해 왔다.[12] 국가행동의 이론화를 위해 국가의 안과 밖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게 되면, 즉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의도적으로 제거했던 국가의 속성과 국가행동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이론의 간결성(parsimony)을 훼손하게 된다.[13]

그러나 이론의 간결성은, 그 자체가 미덕일 수 있지만, 현실을 이론으로 재단하고 구성하는 담론적 효과를 지닌다.[14] 복잡한 현실에 대한 복잡한 이론화는 불가피하다. 어느 한 수준의 변수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국가행동은 국가의 안과 밖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가행동의 이론화와 관련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국제정치이론이

8)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2009. 7.
9) 박명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녹색평화선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창립 4주년기념 심포지엄 기조발제, 2010. 4. 26.
10) 함택영·백창재·구갑우, "국제관계," 김세균·박찬욱·백창재 편,『정치학의 대상과 방법』(서울: 박영사, 2005).
11) 이근욱,『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파주: 한울, 2009).
12)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K.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왈츠를 둘러싼 논쟁과 신현실주의 연구프로그램 내부에서의 다양한 수정은, 이근욱,『왈츠 이후』.
13) J. Hobson,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4) 구갑우,『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서울: 후마니타스, 2008), 2장.

가지고 있는 강대국 중심적 또는 선진자본주의국가 중심적 편향이다. 예를 들어 신현실주의 이론가 왈츠는 양극체제에서 두 국가만이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미국패권이 없이도 협력이 가능한가를 묻는 신자유주의 이론가의 저작에서도 행위자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다.[15]

국가행동의 이론화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국가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유주의적 시각처럼 국가이익이 국내정치를 통해 구성되는 방식에 주목한다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는 국내정치를 설명하는 한 변수로 활용할 수도 있다.[16] 이 견해를 수용한다고 할 때도 두 가지의 이론적 문제가 남는다. 첫째,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포함한 국내정치적 변수 때문에, 국제체제적 수준에서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익을 동일화하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국가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의 여부다. 둘째,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일국적 수준을 넘어서 관철된다고 할 때 우리는 국가와 경쟁하는 초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금융기관, 초국적 범죄조직이나 테러리스트와 같은 행위자를 설정할 수 있다.[17]

국가행동의 이론화과 관련된 쟁점들을 조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국제정치와 비교정치의 결절점에 '국가형태'(form of state)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18] 국가형태를 "특정한 영토적 경계 내부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제도의 집합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지배적 사회관계가 응축되어 있는 형태로 이해할 때," 국가형태는, 역사적으로 특수한(specific) 자본축적의 단계에 조응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정치체제(political regime)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국가형태를 결정하는 안과 밖의 변수로, 축적체제, 국가-시민사회 관계 및 정치적 대표, 국가제도, 세계질서 등을 제시할 수 있다.[19] 역사특수적 국가형태론을 도입할 때, 국제적 수준은 시간의 관념이 결여된 국제체제가 아니라 변화가 가능한 국제질서 또는 세계질서로 개념화할 수 있게 된다. 즉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지만 국가를 매개로 국내적 수준과 국제적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국제질서 또는 세계질서를 상정하게 된다.

(2) 남북한의 발전·안보국가

20세기 특히 이차대전 이후 이른바 서구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대략 1958-71년의 짧은 기간-에는 '영토성의 관리'가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의 동의어였다. 즉, 이 시기 세계질서의 특징은 '완성된' 열국체제(inter-sate system)의 안정적 재생산이었다. 이 재생산의 국제정치적 토대는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및 핵무기를 매개로 한 공포의 균형이었고, 국제경제적 토대는 서구 자본주의권에서는 금과 미국 달러의 태환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화폐자본의 투기적 이동을 제약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자율성을 보장한 '브레튼우

15)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16) A. Moravcsik,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17) S. Strange, *States and Market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London: Pinter, 1988); S. Gill, ed.,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M. Rupert and H. Smith, eds., *Historical Materialism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2002); R. Hall and T. Biersteker, eds., *The Emergence of Private Authority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iersity Press, 2002).

18) 비교정치와 국제정치를 가로지르는 국가개념의 재구성은 난제며 숙제다. J. Caporaso, ed., *The Elusive Stat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Sage, 1989).

19)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 6장, 8장. B. Jessop,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Polity, 2002); R. Cox,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Social Forces in the Making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즈체제'와 소련의 루블화를 기축통화로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의 호혜적 지원을 목표로 만들어진 '코메콘(Council of Mutual Economic Assistance)체제'였다. 이 국제정치경제적 토대를 기초로, 열국체제는 미국 또는 소련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우산을 제공받는 동서의 국가군과 미국과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하는 제3세계로 구성되었다.

이 냉전과 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 시대에 남한은 발전·안보국가라는 국가형태를 매개로 산업화를 추진했다.[20] 발전국가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조정하는 형태라면, 안보국가는 적과 위협을 설정하고 군사적 방법에 의한 국가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폭력의 제도적, 물적, 이념적 기반이 국가장치와 시민사회로 확장된 형태다. 이차대전 이후 패권국가 미국의 트루만정부가 발전·안보를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을 연계하는 개념으로 동맹국가 및 제3세계에 수출하면서, 발전·안보는 국가형태를 구성하는 이념과 정책이 되었다.[21] 한국전쟁 이후 북한도 시장적 조정기제보다는 관료적 조정기제를 우선하고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는 발전·안보국가의 길을 걸었다. 1960년대 중소분쟁이라는 세계질서의 압력 속에서 '경제의 자립'과 '국방의 자위'는 북한판 발전·안보국가의 구호가 탄생하게 된다. 북한판 안보국가의 극단적 형태 가운데 하나가 수령이 최고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유격대국가'다.[22]

남북한의 발전·안보국가의 형태적 유사성과 더불어 두 형태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국가 주도로 중공업에 우선성을 부여하면서 투입요소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강행성장을 추구했던 발전국가이기는 했지만, 세계경제와의 연관 속에서 외자도입형 수출중심적 축적전략을 선택했던 남한과 달리 북한의 사회주의 국제분업 속에서도 외자배제,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구하는 자립적 발전전략을 선택했다. 남한은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현물동학과 관료적 조정기제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 시장경제를 제거하고자 했다.[23] 북한이 추진했던 1960년대 경제·군사건설병진책, 즉 수입대체 군사정책의 추진은 경제성장을 제약했고, 결국 1976년경부터 국방비 투자에 있어 남한보다 열위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역설적 결과를 만들게 된다.[24] 그리고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시민사회가 정치적 반대파를 생산하는 저항의 공간으로 기능한 반면, 북한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적 반대파 숙청이 완료되고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의 길을 걷게 되면서 자율적 공간으로서 시민사회는 소멸하게 된다.[25] 이 차이들은, 남북한이 발전·안보국가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과의 측면에서 비

---

20) 발전국가와 안보국가의 개념은,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나타는 주권의 자율성을 국내적으로 투사해서 자율성을 가진 제도로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국가중심적 국가론'에 기초하고 있다. P. Evans, D. Rueschemeyer, and T.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21) 더글러스 러미스, 김종철·이반 옮김,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대구: 녹색평론, 2006); J. Der Derian, "The Value of Security: Hobbes, Marx, Nietzsche, and Baudrillard," in D. Campbell and M. Dillon, eds., *The Political Subject of Viole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B. McSweeny, *Security, Identity, and Interests: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2)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서울: 돌베개, 2002).

23) 전철환, "수출·외자 주도 개발의 발전론적 평가," 김병태 외,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돌베개, 1981); 이정철, "북한의 경제발전론 재론: 1960년대 경제조정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남대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현대사 1』 (서울: 한울, 2004).

24) 함택영·서재정, "북한의 군사력 및 남북한 군사력균형," 경남대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파주: 한울, 2006).

2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1967년 5월 조선로동당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가 숙청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었다. 이 숙청을 계기로 북한에서 정치적 반대파는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

대칭성을 생산한 결정적 요인들이었다.[26]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남한과 비슷하게 외자도입과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위기에 맞물려 북한의 개방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외연적 축적체제에서 내포적 축적체제로의 전환에서 필수적인 기술혁신도, 북한판 '기술혁명'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사상혁명'의 강화를 통해 투입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금 폐쇄적 경제정책으로 복귀하게 되고, 1970년대 말부터 경제침체에 들어가게 된다.[27] 북한 발전국가의 위기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 등으로 절정에 오르게 된다. 발전국가의 위기는 안보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 투자를 감소시켰고 1990년대 초반에 이르게 되면 '투자비+운영유지비 누계비교'에서 남한이 북한을 앞서게 된다.[28] 결국 냉전의 해체로 극단적인 안보위협을 느끼게 되는 북한은, 유격대국가를 더욱 극단화한 형태인 '선군정치'를 앞세운 '정규군국가' 또는 '군사국가'로 전환하게 된다.[29]

세계경제와 연관되어 있던 남한의 발전국가는 197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가 가속화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남한에 대해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를 이식하고자 했다.[30] 김영삼정부는 1994년 발전국가의 제도적 상징이던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 Board)을 폐지했고, 세계화를 명분으로 자본시장의 개방을 추진했다. 결국 1997년 이른바 IMF 위기로 남한의 발전국가는 해체되었다. 그럼에도 남한은 1960년대부터 북한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보국가의 국내적 토대로서 '자주국방'을 추진할 수 있었고, 결국 남북한의 군사력균형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남한의 우위로 변형되었으며,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남한의 안보국가가 설정했던 적과 위협 가운데 일부가 사라지게 되었다.

(3) 녹색·평화 국가론과 남북한, 그리고 국제질서

녹색·평화국가는 발전·안보국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개념이다. 20세기의 국가이념이었던 발전이 자연에 대한 폭력을, 안보가 인간에 대한 폭력을 결과했다는 반성 속에서,[31] 녹색과 평화가 국가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발전과 안보와 마찬가지로 녹색과 평화도 일란성 쌍생

---

26) 비대칭성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로는,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27) 북한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1973년 '3대혁명 소조운동', 1975년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등을 시작했다. 박순성,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서울: 법문사, 2004).

28) 함택영·서재정, "북한의 군사력 및 남북한 군사력균형."

29) 와다 하루키, 『북조선』.

30) 1990년 2월 한국과 미국은, 제1차 한미금융정책회의(Financial Policy Talking) 개최에 합의했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금융자유화, 증권시장개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철폐, 금리의 자유화, 정책금융의 폐지 등이었다. 수차례에 걸친 한미금융정책회의를 통해 1992년 6월 말 한국은 '금융자유화와 시장개방계획'이라는 청사진을 완성했다. 구갑우·안정식, "김영삼·클린턴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 북한 위협의 상수화와 미국식 자본주의의 수입," 『역사비평』, 88 (2009 가을); 손호철·전제성,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대응 비교연구: 1997년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응," 손호철·김원 엮음, 『세계화와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II』 (서울: 이매진, 2009). .

31) 토다 기요시, 김원식 옮김. 『환경학과 평화학』 (대구: 녹색평론사, 2003).

아다.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녹색·평화 국가론은, 1980년대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나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같은 혁명적 기획이 아니다. 또한 1990년대의 '시민사회론'과 같은 '반국가주의적 실천'도 아니다. 녹색·평화 국가론은 시민사회의 비판과 저항을, 국가의 개혁과 국가행동의 변화 그리고 다른 국가의 개혁과 행동의 변화와 연계하려는 정치적 기획이다.

녹색국가는, "인간존재의 조건변화로 인해 생태중심성과 인간중심성 그 사이에서 인간복지와 생태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다.[32] 이 정의에 입각할 때 녹색국가의 형태는, 환경부담의 관리를 생각하고 국가에 환경주의자를 포함시킨 '약한' 녹색국가에서부터, 시민사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과정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강한' 녹색국가가 있을 수 있다. 약한 녹색국가의 외곽에 환경과 생태를 위해 국가폭력에 의존하는 생태권위주의 국가가, 강한 녹색국가의 외곽에 자연국가 또는 생태자치연방이 있을 수 있다. 녹색국가도 국가인 한 그 본질에서 지배와 통치의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생태중심적인 자연국가나 생태자치연방이 녹색국가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의 폭력과 강제로 생태적 가치가 보호되는 국가는 민주주의를 배제하기 때문에 녹색국가의 형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33] 녹색국가의 형태변환은, 국가능력,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시민사회의 능력 등의 함수다.

녹색국가론에 기초할 때, 남한과 북한의 비대칭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이명박정부는, 녹색국가의 건설과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34] 담론의 수준에서 남한은 강한 녹색국가로 이행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35] 그러나 녹색성장 핵심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4대강살리기'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공공이익을 결정하는 민주적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일시적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지만, 발전국가의 개발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36] 4대강살리기가 생태계 파괴를 결과한다면, 약한 녹색국가로 이름붙일 수도 없을 것이다. 남한정부의 녹색국가론은, 발전국가가 해체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경제성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국가'가 발전국가적 방식으로 녹색을 포섭하는 전략의 산물이다.[37]

---

32) 문순홍, "녹색국가 논의의 구조와 과정: 녹색국의 유형화·단계화 및 이를 결정하는 변수들"; 구도완, "녹색국가의 전망," 바람과 물 연구소 편,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서울: 당대, 2002). 또 다른 정의는, "민주주의와 환경주의/생태주의를 통합한 국가이다."

33) 녹색윤리를 논쟁의 주제는, 인간중심주의 대 비인간중심주의, 개체론 대 총체론, 환경윤리 대 환경철학, 유기적 은유 대 공동체 은유, 시민적 전망 대 소비자적 전망, 과학적 정당화 대 사회과학적 정당화 등등이다.

34)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2009. 7. 녹색성장 10대과제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자립, 기후변화 적응 강화, 녹색기술 산업개발, 전 산업 녹색화,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 교통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성장 모범국가다.

35) 남한에서는 1967년 2월 보건사회부에 환경위생과가 만들어지고 산하에 공해계를 신설함으로써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었다. 1977년에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80년 1월 보건사회부 소속의 환경청이 설립되었다. 노태우정부는 1990년 보건사회부 소속의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면서 환경원년을 선언했다. 김영삼정부는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김영삼대통령은, 환경대통령 선언을 통해 환경정책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대중정부 하에서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선언'과 함께 2000년 9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t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되었다.

36) 정민걸, "4대강사업을 멈추면 살아날 것들," 『창비주간논평』, 2010. 4. 14.

37) 경쟁국가 또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에 대해서는, Jessop,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 13장 참조.

북한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38] 북한의 발전국가는 '약탈국가'로 퇴행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북한의 「환경보호법」 해설에 따르면, "자연을 정복하여 풍부한 물질적부"를 생산한다는 발전주의적 사고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39] 식량생산을 늘리기 위한 산림파괴와 그에 따른 토양침식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재앙의 대표적 사례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에서 드러나듯 국가가 재정능력의 확대를 위해 인민의 화폐소득을 수탈하는 방식의 정책을 선택하고 있고, 반생태적인 과거의 발전모델을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국가가 약탈국가와 다른 점은, 국가의 자율성이 강제든 동의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작동한다는 것이다.[40]

평화국가는, "국가의 폭력성과 폭력적, 억압적 국가장치에 기초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체"다.[41] 평화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국가도 물리적 폭력의 정당한 독점이 유지되는 국가이지만 평화국가는 물리적 폭력의 적정 규모화 및 최소화를 추구한다. '비도발적 방어' 또는 '방어적 방어'의 개념이 그 사례일 수 있다.[42] 둘째, 평화국가는 평화외교와 윤리외교를 지향하는 국가장치를 필요로 한다. 셋째, 평화국가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 폭력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축적체제에 기초한다. 평화국가도 녹색국가처럼 '과정-구조'의 성격을 지닌다.[43]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조화 및 관계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평화국가의 형태로, 안보국가를 지양하려는 평화지향적 안보국가와 기본원칙을 충족하는 평화국가를 설정할 수 있다.[44] 그리고 평화국가의 외곽에 국가성을 넘어선 정치체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평화국가론에 입각할 때도 남북한의 비대칭성이 현저하다.

지구적 수준의 냉전이 해체된 1990년대 초반 남한은 평화지향적 안보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적의 위협이 감소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이익집단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이끌어냈다.[45] 다른 한편 남한정부는 노태우정부부터 시작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남북한 사이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은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남한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평화국가론의 시각에서 볼 때, 남한은 평화지향적 안보국가의 문턱 정도에 들어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안보위협을 느끼며 핵게임에 들어가게 된다. 1994년 10월 핵문제를 봉합한 북미 제네바합의가 체결될 즈음에 북한은 '선군정치'를 시작하게 된

---

38) 1986년 4월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고 그 일을 담당하는 비상설기구로 '국가환경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96년 10월에는 정무원 산하에 '국토환경보호부'가 설치되었고, 1998년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통합되었다가 1999년 3월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했다. 2004년의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39조)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박상철·김창규,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

39) 『민주조선』, 1991. 3. 17.

40) P. Evans,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41)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2007).

42) D. Barash and C. We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 (London: Sage, 2002).

43) J. Lederach, *Moral Imagination: The Art and Soul of Building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44) 평화국가론을 둘러싼 쟁점은, '평화담론과 안보담론의 관계', '평화(국가)담론과 통일담론의 관계', '평화국가담론과 현실의 국제관계' 등이다. 구갑우,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한국과 국제정치』, 24: 3 (2008).

45) 서재정, 이종삼 옮김,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 (파주: 한울, 2007).

다.[46] 결국 2002년 10월 제2차 핵위기가 발생하고 북한은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전쟁 '억지력'으로서 핵무기의 제조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47] 북한 국내적으로는,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최고국가기관으로,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규정함으로써 선군정치의 제도화를 마무리했다. 결국 북한은 안보국가에서 '군사국가'로 형태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국가형태를 고려할 때, 남북한 관계는 '(최소) 녹색국가 · (평화지향적) 안보국가'와 '약탈국가·군사국가'가 협력·갈등하는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형태의 차이는 남북한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이 에너지를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북한에게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나무심기는 녹색평화공존사업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평화의 에너지'이다,"[48]라는 진술을 남북한이, 그리고 남북한의 내부에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녹색이 무엇인가, 평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녹색과 평화는 함께 가는 가치인가를 둘러싼 담론투쟁은 불가피하다. 녹색·평화는 발전·안보의 삶의 형태를 바꾸려는 근본적 문제제기다. 생태계와의 평화가 녹색이고, 녹색은 적극적 평화를 위한 조건이다. 녹색·평화국가가 담지하고 있는 규범적 차원의 실현가능성은, 남북한 관계의 최대 쟁점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세력 사이의 협력과 갈등을 통해 검증될 것이다. 녹색·평화국가로의 전환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동하는 국내적 원천이다.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녹색·평화국가로 전환하게 하는 국제적 계기가 될 수 있다.

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1)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했다.[49] 이명박정부의 대북강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두 번째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자위적핵억제력"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 두 번의 사건은,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아닐 수

---

46) 이정철, "북핵의 진실 게임과 사즉생의 선군정치," 경남대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 연구의 성찰』 (파주: 한울, 2005). 북한의 선군정치 시점은 재해석되고 있다. 북한문헌에서 선군 또는 선군정치라는 표현은 1997-98년경에 등장했다. 북한은 최초 선군정치의 시작을 1995년 1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고사포부대인 '다박솔초소'를 방문했을 때로 공식화했다.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그 이후, 선군정치와 짝을 이루는 '선군영도'는,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인 1960년 8월 25일 '류경수 땅크부대'를 방문했을 때로 소급되고 있다고 한다.

47) 장달중·이정철·임수호,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대립』 (서울: 서울대출판부, 근간).

48) 이해정, "북한나무심기는 녹색평화공존사업이다"; 이유진, "재생가능에너지는 '평화의 에너지'이다," 『민족화해』, 2010. 03+04.

49) 2003년 1월 10일 '공화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NPT 탈퇴를 밝힌 후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즈음한 같은 해 4월 6일 "군사적 억제력"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제1차 6자회담(2003. 8.27-29)이 시작되기 전인 8월 18일에는 미국이 "대조선정책전환용의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핵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조선중앙통신 "론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3년 9월 29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대답의 형태로, "미국의 핵선제공격 막는 핵억제력강화의 실제적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글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의 대외발표문의 중요도는, 정부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외무성 담화, 외무성 대변인 담화, 외무성 대변인 대답 순이다.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국가다. 북한의 핵무기 '그 자체'에 대한 남한의 대응은,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2006년 10월 20일 38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를 언급했고, 2009년 41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이용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했다.[50]

"미국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군사국가' 북한은 국내자원을 동원하여 미국에 맞서는 세력균형정책을, '안보국가' 남한은 미국에 편승하는 방식의 세력균형정책을 선택하고 있다.[51] 남북한의 부차적 선택들도 있다. 남북한은 국제제도인 6자회담에 참여하여 각자가 인식하는 위협을 감소시키려는 '초월(transcending)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남한의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과의 기능적 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방어적 관여정책'을 실천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개혁 2020'처럼 군비증강을 통한 내적균형정책도 노무현정부의 선택이었다.[52] 이명박정부는 방어적 관여정책보다는 북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형태로 북한의 안보위협을 줄이려는 또 다른 초월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도 남한과 미국에 대해 방어적 관여정책을 주기적으로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53]

녹색·평화 국가론에 입각할 때, 세력균형의 지속이나 일방의 '세력우위'에 의한 타방의 흡수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전쟁이 최악이라면, 세력균형은 '차악'(次惡)일 수도 있다. 현실주의적 세계에서 차악의 선택은 불가피할 수 있다.[54] 그러나 한반도에서 차악의 선택은 비핵화의 과제를 외면하게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력균형이라면,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억지력을 인정하는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현실주의자들은, 핵확산이 억지력에 기초한 평화-'소극적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55] 1975년 6월 박정희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을 걷는다면 생존을 위해 핵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한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보수우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한에서 녹색·평화국가의 건설을 제약하는 퇴행적 길을 가게 할 수 있다.

녹색 · 평화국가로 '가는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합의들이 1992년 1월 20일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년 9월 19일의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2005년 11월 17일의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이다. 이 문건들에는 한반도

---

50)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은, www.mnd.go.kr 참조.

51) 2003년 8월 1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06년 7월 5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6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세력균형정책을 정당화했다. "힘의 균형이 파괴될 때 불안정과 위기가 조성되고 지어 전쟁까지 벌어진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오늘날의 이라크사태가 보여주는 국제관계의 랭혹한 현실이다. … 결국 우리의 미싸일개발과 시험, 생산 및 배비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52) 노무현정부의 모순적 정책에 대해서는,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 14장.

53) 중소국의 또 다른 선택으로는, '숨기'(hiding)와 '특화'(specialization)가 있다. 이 이론화는, 조동준,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중소국의 선택," 『세계정치』, 30: 1 (2009). 강대국의 선택으로는, 균형과 편승 그리고 '유화'(appeasement)와 '책임전가'(buck-passing)이 있을 수 있다.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54) 라인홀트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1992).

55) S. Sagan and K.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3).

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들인 남북미의 비핵화에 관한 입장들이 담겨 있다.[56]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고 비핵화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수용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하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의 당사자인 남북미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1항의 전문이다:

>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항에서 북미, 북일의 "관계정상화"가 언급되고, 3항에서는 "6자의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약속되었다. 5항에서는 공동성명 실행의 '방법론'으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방식"이 합의되었다. 4항이 평화체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9·19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한국과 미국이 재확인했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 6자회담이 상호 보강하기를 기대하였다." 2007년 2월 24일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미국이 행사하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이 작전통제권

56)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자료모음집으로는, 허문영 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57]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를 거치면서 2008년 하반기에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체가 교환되면서 북미관계는 정상화로 가는 종착역에 접근하는 듯했다. 그러나 다시금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방법론은 지켜지지 않았다. 6자회담 참여국 내부에 핵문제의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두 번째 핵실험을 했고, 남한정부는 5월 26일 PSI 참여를 선언했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4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을 비난하자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인 결의안 1874호가 발표되자 외무성 성명의 형태로,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와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겠고 대응했다. 그러나 2009년 9월 4일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대화와 제재 모두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했다.

2009년 10월 24일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과 미국 국무부의 성 김 북핵담당 특사가 뉴욕에서 만났다. 20여 년간 타협과 결렬을 반복해 온 북미대화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리고 2009년 12월 8-10일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다. 북미가 만나기 전인 2009년 10월 5일 중국의 원자바오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이 회담을 평가했다고 한다. 중국, 미국과 접촉한 후 북한은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을 의제화했다. 2010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선 평화체제 후 비핵화로 읽히는 대목이다. 북한은 2005년 7월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형식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핵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는것으로 되며 그것은 자연히 비핵화실현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58] 2010년 1월 11일 북한은 평화협정의 체결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게 제의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것처럼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하는 북한의 전략은 미국 오바마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에 대한 나름의 독해에 기초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009년 5월 핵실험 이후 북한은 미국에게 핵군축과 CTBT의 규범을 한반도에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국제적인 핵군축, 핵철폐의 움직임”과 연계하여 “조선반도비핵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핵군축, 핵철폐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미국은 2010년 4월 「핵태세보고서」에서 비확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잠재적 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지구적 핵전쟁의 위협은 감소했지만, 핵공격의 위험은 증가했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주 관심사는 핵물질에 대한 통제를 통해 핵확산을 막는 것이

57) 이수형, “노무현 정부의 동맹재조정정책: 배경, 과정, 결과,” 이수훈 편,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9).

58)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18: 2(2009).

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4월 12-13일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nuclear security)라는 '기묘한'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2010년 4월 9일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핵확산만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미국에게 NPT 복귀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면,[59] 북미 핵갈등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0년 4월 21일 핵무기의 과잉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며, 비확산과 핵물질의 안전관리에 기여하겠다는 외무성 비망록을 발표한 것도 국제적 맥락에서 갈등의 전환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60]

남한정부의 선택이 핵문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라는 단서를 설정해 놓고, 남북한의 교류와 대화를 사실상 중단했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발전주의적 사고의 전형이기도 하다. 남북한 관계가 정지된 상태에서 북미협상이 재개될 때, 남한정부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 북미대화를 봉쇄하든지, 아니면 북미대화를 방관하는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명박정부가 북한의 선 핵포기를 고수한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의제화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공동성명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만약 재개된 6자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북한 핵무기의 '실존적 억지력'을 인정하면서 핵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관리'하는 형태의 미봉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북한이 자신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하고,[61] 남북한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 6자회담을 소집할 능력은 없지만, 6자회담이 재개되면 그 틀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남한이 녹색·평화국가를 지향한다면, 국제적 맥락에서 핵군축과 핵폐기를 향한 흐름, 일본의 민주당정부 등장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남한의 녹색·평화국가 구상에 대해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약탈·군사국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남한에게 손실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남한 내부의 진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력균형정책보다는 평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남한정부가 적극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연계를 의제화하는 것이 비용/편익의 관점에서도 유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이 의제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59) 2005년 9월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60) 북한의 비망록에 대해 미국 백악관 대량파괴무기 정책조정관인 게리 세이모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2010년 4월 23일.

61)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2)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

한반도 평화체제는 1953년 정전체제의 대체물이다. 북미가 평화체제를 의제화하고 있지만, 남한정부의 입장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인 정전체제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와 예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정전체제 또는 분단체제의 유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치사회세력들은 분단체제의 재안정화를 선호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의 유지·강화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익집단들이 연루되어 있다. 만약 평화체제가 한미동맹의 유연화를 결과한다면, 평화체제의 의제화에 강한 반대세력이 될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유지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치사회세력도 같은 의사를 보일 것이다.

반면 정전체제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생각하는 정치사회세력들도 존재한다. 한 세력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고려하며 흡수통일을 지향하고자 한다. 만약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패권국가 미국과 잠재적 패권국가 중국이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선호한다면,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이른바 통일외교와 충돌할 수도 있다. 다른 한 세력은, 정전체제 극복의 대안으로 국가연합을 제시한다. 남북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질서의 지각변동을 시도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62] 그러나 흡수통일과 국가연합 모두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두 대안 모두 중간단계를 결여한 비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정전체제를 불편하게 느끼는 정치사회세력들에게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는, 너무 앞서 가지 않는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는 지금-여기서 흡수통일과 국가연합에 동의하지 않는 국내적 좌우파는 물론 국제적 행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의제기도 하다. 그러나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논의해야만 하는 피해갈 수 없는 쟁점들이 있다. 이 쟁점들의 조정과정이 평화체제를 둘러싼 협상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자.

첫째, 평화체제는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더 이상 적과 위협이 아닌 상태다. 따라서 평화체제 협상과정에서 적과 위협에 기초한 안보담론의 변경이 요구된다. 평화체제 논의는 안보담론의 평화담론 내지는 평화지향적 안보담론으로의 전환과정일 수밖에 없다. 안보담론의 제도적 장치들인 남한의 헌법 3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과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등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관계다. 이명박정부는 집권 초기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로 읽힐 수 있는 정책대안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협상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처럼 동시 과정으로 의제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명박정부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가장 큰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셋째, 평화체제의 내용과 형태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평화체제(peace regime)는 평화라는 이슈영역에 만들어진 규범, 규칙, 원칙, 절차 등과 같은 제도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구성요소는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평화조약이다. 쟁점은 평화조약이 각 국가에서 비준을 요구하는 강제성이 있는 형태가 될 것인지의 여부다. 다른 쟁점은, 평화조약의 서명국이 누가 될 것인지의 여부다.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10·4공동선언

62) 박세일,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선진화포용 통일론"; 백낙청, "포용정책 2.0버전이 필요하다,"『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2009 화해상생마당.

에서는 3자 또는 4자의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1953년 정전협정에 유엔과 중국과 북한이 서명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 남한이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남한은 연합군의 형태를 취했던 유엔군의 일원이었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문제제기를 하곤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와 평화조약의 당사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평화조약은 최소한 남북미,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9·19공동성명도 6자회담과는 별도의 한반도 평화포럼을 통해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가 평화조약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면 6자회담 참여국 전체나 유럽연합의 서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핵화 평화체제가 함께 논의될 때 비핵화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 이후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핵만의 폐기가 아니라 한미동맹에 의해 남한에 제공되는 미국의 핵우산 및 동북아 차원의 핵군축 및 핵철폐와 연계하고 있다. 비핵화의 의미를 둘러싸고 북미는 물론 한미와 남북한 사이에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한미동맹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면, 북한이 추구하는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의 반입과 반출을 금지하는 '비핵지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63]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도 불가피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법적 기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북한의 위협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미동맹은 북한을 적과 위협으로 설정해 왔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평화체제 논의에서 한미동맹의 형태변환 또는 폐기가 의제화될 수 있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은 비핵화와 연관된 또 다른 쟁점이다. 북한은 9·19공동성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우라늄농축을 통해 핵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한은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남한은 건식처리 공법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은 핵물질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처리가 아닌 재활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재처리의 권리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우라늄농축과 남한의 재처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다.

다섯째, 평화체제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존폐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관리기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유엔군사령부를 존속시키면서 새로운 평화관리의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64]

---

63)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연계하는 것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과제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동북아시아 비핵지대-핵 없는 세상'을 연결하는 '3차원 비핵화'도 논의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확장하자는 주장이다.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비핵국가인 남한, 북한, 일본에 대한 핵보유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 11월 23일 핵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PNND)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한일국제회의』 자료집 참조. 다른 지역의 비핵지대화와 관련하여서는, A. Acharya and J. Boutin,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Treay," *Security Dialogue*, 29: 2 (1998); J. Redick, "The Tlatelolco Regime and Nonproliferation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35: 1 (1981) 참조.

64) DMZ 중립국감독위 스위스 대표단의 장 자크 요스 장군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제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 스위스군이 행복하게 귀국하는 것, 그리고 통일 후에도 DMZ의 아름다움이 보전되는 것이다.

여섯째,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관계설정도 논의될 수 있다. 동북아에는 유럽과 달리 양자동맹-한미동맹, 미일동맹, 북중동맹-이 군사협력의 지배적 형태다. 공동안보를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은 선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매개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 될 필요가 있다.

(3) 녹색·평화국가의 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쟁점들이 '군축'과 '남북관계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다. 공포의 균형이 부활할 수도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과정이 시작될 수 있는 이 지각변동의 정세에서, 녹색·평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세력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 남한의 국내정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논의도 예외는 아니다. 남한 내부에서 평화체제를 둘러싼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때, 국제적 수준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둘러싼 국내에서의 담론투쟁이 가지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세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구적 수준과 동북아 수준과 남북한 수준이다. 각 수준을 관통하는 실현가능한 연대의 원칙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반전·반핵·평화의 원칙'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의 원칙이다. 소극적 평화의 원천인 반전의 원칙과 더불어 우리는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은 평화담론을 지구적 수준에서 재구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이 더 이상 핵무기가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인식의 반영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은 보편적 차원에서 반핵·평화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남한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평화지향적 국가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구시민사회 내에서 평화지향적 정치사회세력의 연대를 통해 평화권을 국제인권의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한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에 얽매어 있는 두 대안인 자주냐 동맹이냐를 넘어서서 동북아 수준에서 냉전체제의 해체를 유도하고 동북아 군축과 비핵지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건설을 의제화할 수 있어야 한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국제적 조건이다.

셋째, 남북관계 수준에서는 이른바 6·15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하나는 기능적 접근이 정치군사적 협력을 결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기능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이 진행될수록 남한은 비용을 북한은 체제의 붕괴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통일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누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향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 이후는 열린 선택으로 남겨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각 국가 내부의 체제전환이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녹색·평화 국가론은 이 지점에 주목한

다. 남북한 두 국가가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가용한 자원의 배분에서의 우선성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주민의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뿐만 아니라 억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군산복합체의 입지를 강화해주지만, 평화지향적 세력의 입지는 약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남한에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와 녹색 그리고 복지를 연계하는 정치적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의 기능적 교류에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에서 녹색적 사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남한이 선군축이나 국방예산의 복지예산으로 전환 등을 통해 '평화국가'로 가게끔 할 수 있는 평화·복지연합의 형성은, 남한 내 정치적 헤게모니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에 대신하여: 녹색·평화의 철학

녹색·평화는, '나'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녹색이 생태계와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또한 '그들'과의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녹색·평화는 개별국가의 행동에서 시작할 수 있다. '변화를 통한 접촉'이야말로 녹색·평화의 철학이다. 선 변화는, 타자를 관용할 수 있는 차이의 철학의 기초다. 추상적인 이 철학적 원칙들이 현실의 국제정치에 투사되는 모습을 일본의 국제정치학자 사카모또 요시까즈(坂本義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65]

> 북한측의 전쟁 공포를 가라앉히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대칭적인 우위에 선 미국과 한·일이 먼저 긴장완화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대개 비대칭적인 사회관계에서 약자는 굴종하거나 교활하고 불법적인 수단에 호소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으며, 관계개선의 이니셔티브는 강자가 먼저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미국은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라, 그러면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격상 등을 진전시켜 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것이다. 먼저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나 평화협정 체결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군축을 진행하는 식의 길을 택해야 한다. 또 전쟁을 상정하여 연중행사처럼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조속히 축소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차이의 철학에 기초하여 국제정치의 현실을 읽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가 북일관계에서 다른 쟁점을 덮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까모또 요시까즈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 '자신의 아이가 납치된 것을 비인도적이라고 분노한다면, 굶주리는 북한 아이들에게 일본에서 남는 쌀을 보내기를 거부하는 것은 비인도적이지 않은가'라고 강한 비판을 신문에 쓴 적이 있다. 그후 그들은 격렬한 비난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래서 필자가 다시 '설

65) 사까모도 요시까즈, "21세기에 '동아시아 공동체'가 갖는 의미,"『창작과 비평』, 146호(2009 겨울).

령 보낸 쌀이 군용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북한에 쌀을 보내지 않으면 군 이외의 어린이나 민간인에게 가야 할 쌀이 더 줄어들 뿐이지 않은가'라고 하자 더이상의 반론이 없었다.

일본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할 글이지만, 금강산관광사업이나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남북한의 협력사업과 북한의 핵개발 사이에 인과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사회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인다.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본다는 것이,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상은 아니다. 녹색·평화는 이익과 권력과 같은 현실의 개념을 넘어서려는 초월적 담론이 아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 녹색·평화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면, 이익과 권력을 둘러싼 쟁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발전·안보담론의 한계에 대한 합의는 있는 듯하다. 녹색·평화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이유다. 즉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아하고 있는 새로운 국가형태의 싹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녹색·평화 국가론은, 현실의 일부를 취사선택해서 과장하고 정당화하는 현실주의의 물신화도 역사적 뿌리가 없는 이상주의적 열망도 아닌, 현실 속에서 현실의 변화를 추구하는 '비판적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속선상에서, 타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며,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을 생각하는 녹색·평화의 사유가 이익과 권력의 기초일 수 있다. 미국 오바마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최초의 핵테러리즘"[66] 국가였던 미국이 핵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66) J. Gerson, *Empire and the Bomb: How the US Uses Nuclear Weapons to Dominate the World* (London: Pluto Press, 2007).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김영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yykim@kinu.or.kr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녹색평화」와 남북 경제협력 문제
Ⅲ. 대북 경제협력 분야 「녹색평화」 창출 방안
Ⅳ. 대북 경제협력 및 개발지원의 과제
Ⅴ. 결어

Ⅰ.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 새롭게 휘몰아치는 단어: 녹색. 이젠 안 붙어 다니는 곳이 없다. 녹색성장, 녹색교통, 녹색관광, 녹색웰빙... 「녹색」은 공공과 상업분야의 전면에 자리 잡아 정부기관의 브랜드 가치나 기업의 이미지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녹색이 부상하게 되었을까. 「녹색」의 의미가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을 지향하는 의지는 가히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기세다. 녹색 물결이 모든 것을 자신으로 빨아들이는 가운데, 드디어 평화에도 녹색을 달았다.

남북관계에 「녹색」과 「평화」가 하나의 단어로 나란히 붙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이다. 본인에게는 평화에 녹색을 입힌 것은 평화창출과 정착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과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쳐진다. 즉 「녹색평화」는 핵이 없는 한반도를 평화창출의 기본과제로 삼으면서, 남북협력을 생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1] 특히, 최근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21세기 한반도 미래전략을 관통하는 의제로서 「녹색평화」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 글에서 「녹색평화」에 대한 거창한 담론(discourse)을 전개할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도로 제시되고 있는 「녹색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지지하고,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의 차원에서 「녹색평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꾸어 말해 녹색평화 창출을 위해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내용과 전략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제1차적 관심이다.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녹색평화창출을 위한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이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녹색평화창출과 관련된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이 국제정치 및 남북관계 차원의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만 가능하다면 이

1) 박명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녹색평화선언 구상,"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학술회의 2009.12.16 발표논문 참조

글 속에 담긴 논의는 별의미가 없을 것이다.

먼저 한반도 녹색평화의 창출이 경제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녹색평화 창출을 위한 경제협력과 대북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녹색평화」와 남북 경제협력 문제

1. 왜 「녹색평화」인가?

「녹색평화」는 현재와 같이 교착·정체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찾아낸 화두다. 국제차원의 대북 제재 아래에서도 북미대화와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2009.10.4~6)에 따르는 북·중 관계의 변화, 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대북협상 의지천명, 2010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2] 등,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국제환경에 부응, 새롭게 추진해야 할 남북관계의 방향제시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남북한 내부에서 보이고 있는 '심층적 변화의 흐름'도 「녹색평화」 추진의 바탕이 된다. 북한이 현재 당면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 및 생활양식에서의 대남 이질성과 비대칭성의 심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우려가 새로운 관점에서의 평화창출을 분출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녹색평화」다. 남북한이 앞으로 이루어내어야 할 관계정립의 창조적 화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태와 같은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환경은 이와 같은 논의의 실마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평화」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있어 이정표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2. 「녹색평화」란 무엇인가?

녹색평화(Green Peace)의 기본적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다.[3] 이는 1992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선언」, 더 나아가서는 오마바의 "핵없는 세계 구상"[4]과도 통한다. 이런 점에서 「녹색평화」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수용하고 이에 부응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

2) 북한은 조건부 6자회담 참여입장을 표명, "조미회담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되어있다는 입장을 제시. 2009년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중앙통신을 통해 보도

3) 박명규는 녹색평화를 '비핵화'의 강한 의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도 이것이 일방적인 북한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비핵화의 의지임을 천명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녹색평화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21세기 가치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박명규, 「앞의 논문」.

4) "핵없는 세계구상(A world without nuclear initiative)"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발표한 구상으로 같은 해 9월 24일 유엔안보리가 핵감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1887호)한 바 있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 핵무기의 대대적인 감축은 추진하는 반면, 핵 선제공격 정책은 유지하기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 2010.4.1.

둘째, 「녹색평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야 할 '긍정적 평화(positive peace)[5]'의 개념이다. 또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닌 일상생활의 미시적 영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의 평화'와도 연결된다. 2009년 12월 대북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과 같은 긴급하고도 인도적인 지원은 '사람의 평화'를 의미하는 「녹색평화」 구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녹색평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북 지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람과 연결된 바람직한 「발전」과 「개발」과도 닿아 있다. 심지어 발전이념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개발위주의 성장전략에서 기후문제를 감안한 저탄소 성장과 생태자원 문제를 고려한 환경론적 관점에서 남북협력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3. 「녹색평화」와 남북 경제협력 문제

「녹색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가? 남북경제가 상호간의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면, 「녹색평화」는 응당 한반도로 그 적용범위가 넓혀져야 하며, 그것이 남북경제협력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먼저 생각을 던진 사람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유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생태와 환경문제를 고려한 이른 바 「녹색성장」이 한반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협력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환경친화적인 발전전략 속에서 그리고 폐쇄적이고 단편적인 발전이 아닌 '개방적,' '전지구적,' '지역통합적 흐름'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 속에서 찾고 있다.[6] 물론,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녹색평화」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 교류협력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녹색평화의 창출」은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남북협력의 도구적 역할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협력을 통한 「녹색평화의 창출」은 미래지향적 사업과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경협은 그 유형적인 면에서 일반교역과 임가공교역, 투자를 동반한 대북사업 및 대북지원사업 등으로 대별된다. 일반교역과 임가공사업은 민간차원의 거래로 「녹색평화」와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적다. 더구나 수익창출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생태문제와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투자를 동반한 남북경협이다. 투자를 동반한 대북사업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개성공단 사업도 그 주력형태는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일종의 임가공사업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

5) "긍정적 평화"의 개념은 노르웨이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는 평화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 "부정적 평화(negative peace)"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한편, 사회정의의 실현, 인권의 옹호와 확대, 고통과 궁핍으로부터의 해방 등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긍정적 평화(positive peace)'로 표현했다. 요한 갈퉁,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6) 박명규, 앞의 논문, 지속 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지구환경선언'이 천명한 환경정책의 목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에 있어서 규범이 될 '의제 21(Agenda 21)'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원칙이다. 이 개념은 우리가 물려줄 환경과 자연 자원의 여건 속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도 최소한 우리 세대만큼 잘살 수 있도록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고 자연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ion on Enviroment and Development: WECD)'의 '브란트랜드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는 지속가능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United Nations,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2/187, 11 December 1987. Retrieved: 2007-11-14.

기업차원의 경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런 점에서 「녹색평화」와 관련된 남북경협은 기존의 사업형태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그 추진의 주체는 남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 주민의 삶과 밀접한 방향으로 추진하되, 그것이 「녹색평화」를 창출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 지원 또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거나 적어도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대북 경제협력 분야 「녹색평화」 창출 방안

1. 기본방향

가. 저탄소 녹색성장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흔들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주요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분야의 대대적인 기술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안을 시행 중이다.[8] 한국은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한다. 한국은 그동안 자원절약과 저탄소 사회로의 준비 소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에너지 소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웃 일본과 비교해서도 평균 3.4배나 높은 에너지 단위를 소비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한국 경제는 큰 부담을 안게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통한 녹색성장[9]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국가계획으로 다음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으로, 또한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개념으로 녹색성장이 자리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0] 북한도 2005년 4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바 있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의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경과 성장이라는 다소 부조화적인 개념의 결합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

7) 개성공단사업은 2010년 2월 현재 총 120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하고 있다. 2009년까지 누적생산액은 7억 8천만 달러, 누적수출액은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입주업체에 고용된 북한측 근로자는 2010년 3월 5일 현재 42,528명에 달하며, 대부분 여성근로자이고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1단계 기반시설은 2007년 10월 대부분 완공된 상태다. 정배수장(3만톤/일), 폐수종말처리장(1만5천 톤/일), 폐기물매립장(6만1천㎥)과 폐기물 소각장(12톤/일) 시설이 완공되어있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현황」 내부자료 2010. 3. 26,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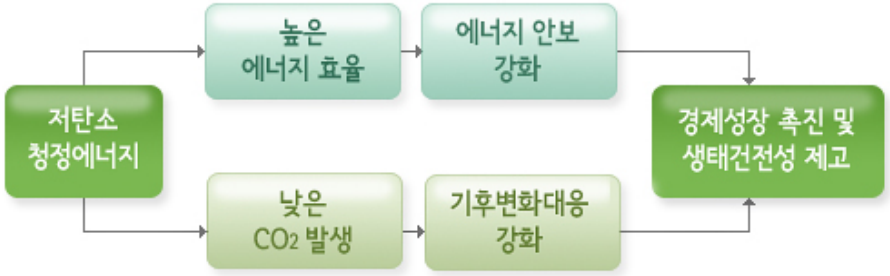
8) 최근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박차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최근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드는 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9) 녹색성장은 2005년 서울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주최로 제5차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장관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0) 이해정, "녹색 한반도 개발과 남북경협,"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09 여름호, p. 48.

전환하고, 그 전환과정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굴, 새 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1]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2007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12]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스턴보고서(Stern Review)」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경제적 손실을 매년 세계 GDP의 5~20% 정도 보았다.[13] 한국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2006년)이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에너지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4.3%를 차지해 산업부문(10.6%)이나 폐기물 부문(2.6%) 및 농업부문(2.5%) 보다 훨씬 높다.[14]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형편이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 더 중요한 문제는 녹색성장의 노력을 대북협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그 기본방향은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성장효율 위주의 요소 투입에서 생태효율 위주의 요소 투입으로 바꾸고, 성장의 핵심가치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15]을 육성,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남한 정부도 2009년 7월 14일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13)을 발표하고 그 중심 내용으로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green) 한반도와 DMZ 생태계 보존, 산림 및 문화재 조사를 포함한 국토생태축의 관

11) 강성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포커스」 2009년 07+08 창간호, p. 28.
1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5차 당사국 총회가 지난 2009년 12월 7일~18일까지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바 있다. 1997년 교토 의정서 후속으로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로 205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50%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목표에 합의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1997년 타결된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1990년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55개 국가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하게 된다. 이에 따라 EU국가는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8%를 감축해야 하며 일본은 6% 감축의무를 지고 있다. 미국은 7%의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통의정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감축의무는 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이 모두 감축 의무를 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3) 전 세계은행 수석연구원인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이 2005년 영국의 재무부 장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 Stern Review(2006)에 대해서는 http://www.occ.gov.uk/activities/stern.htm 참조.
14) 오진규, "신재생에너지 R&D 강화해야," 경제·인문사회연구, 「같은 책」, p. 33.
15)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발전·송전 분야에서 고효율 천연가스나 태양광발전 및 원자력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분야에서 에너지절약형 주택 및 건축물 건립,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리·보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북한과 연결된 사업에는 ①남북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②북한 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문가 양성, ③에너지 설비의 현대화와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16]

나. 대북개발지원

인도적 지원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식량이나 의약품 등 구호물자를 동반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개발지원은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발(development)을 돕기 위한 장기적 차원의 지원(assistance)을 가리킨다.[17] 흔히 개발지원을 선진국에서 저소득국가로의 자원 및 기술이전의 개념으로도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18] 개발지원과 경협사업을 구분한다면, 경제협력은 지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경제교류, 그러나 보다 실질적으로는 상업적 차원에 기반을 둔 주로 기업차원의 협력사업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다.[19]

대북 개발지원은 어디서 출발하였는가. 이는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저개발 국가가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없다는 데서다. 인도적 지원이 오히려 원조에 대한 의존을 강화, 경제개발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지원이 대규모 인프라(에너지 포함) 투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지원의 국제동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및 행정적 인프라 부문에 대한 예산배정비율이 경제적 인프라 및 생산부문 보다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사회분야개발이 개발지원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인구, 수자원 공급 및 위생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20] 행정적 인프라 구축 역시 중요한데, 이는 행정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물적 자본의 투자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사회분야 대북 개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부분, 특히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민관 차원의 협력이 개발지원 수혜국의 상황을 감안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발지원은 양자 지원 못지않게 다자적 지원이 중요하다. 다자적 지원은 지원국과 수혜국 양측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단계적, 점진적 접근이 요구된다. 개발지원과 관련된 북한의 수요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와 내용. 지원 절차와 조건이 장기적 차원에서 결정·추진되어야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다.

---

16)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계년 계획(2009~1013)」, 2009.7, p. 58.

17) 예를 들어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나 병원시설이나 의약품 공장을 짓는 것은 개발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 저소득 국가로 또는 저소득 내지 개발도상국간 자원과 지식의 교류가 이뤄지는 개념으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는데, 이 경우의 개발협력은 개발지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18) 저개발국가에 대한 정기저리차관도 개발지원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공적개발지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지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증여율은 해당 차관의 원리금 상환액을 현재가치로 환산, 전체 차관금액에서 제한 부분이 차관전체 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차관금액-원리금상환액의 현재가치)/차관금액x100으로 나타낼 수 있다.

19) 이와 관련 개성공단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차원의 개발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석진, "대북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방향,"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2006.5, p. 35 참조.

20) 김석진, 「앞의 글」, p. 38.

넷째, 북한 내 다양한 인력개발이 병행·추진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교육을 포함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물류·운송,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된 인력양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주로 에너지, 교통망, 정보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 민간차원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 빈곤층을 위한 각종 사회 프로젝트, 외부 개발지원 수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주요 사업 추진방안

이하에서는 녹색평화 창출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 개발지원과 관련, 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사업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남북 경제교류협력 사업의 어떤 형태라도 앞서 언급한 방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녹색평화창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남북경협과 대북 개발지원 주요 사업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 녹색평화공존의 남북한 에너지 협력사업

에너지 분야의 남북협력은 녹색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이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풀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분야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발전이나 개발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북한 에너지 분야 당면 문제와 정책방향

북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에너지 수급체계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에너지 인프라가 낙후된 가운데 석탄과 수력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구조로는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없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수전시설에 투자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21] 변화하는 국내외 에너지원의 적정배합을 통해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이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력갱생에 의한 국내 부존자원의 최대 이용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에너지원의 다양화는 석탄과 같은 자연자원의 개발이나 저질탄의 이용에서 벗어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수입·사용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에너지 수급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효율적 에너지 생산구조를 합리적 생산·공급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탄광은 과감하게 폐광시켜 경제성 위주의 고열량, 고품질탄 중심으로 개발하며, 지역적 분산·독립형 에너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원 확보에 요구되는 시설구축이 요구된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비축설비, 정제시설, 항만설비 및 발전설비 등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에너지 분야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효율적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훈련이 이

21) 북한이 생산하는 단위당 에너지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크게 초과하는 비경제적인 에너지다.

루어져야 한다. 실제 생산가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으로 책정·공급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북한은 현재 당장 생존을 위한 에너지 조달이 더 시급하다. 건설하는 데만 5~10년이나 걸리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얻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이를 위한 재정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난으로 북한은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여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에너지를 대량으로 수송하거나 송전할 수 있는 인프라도 크게 부족한 상황인 바, 단기간 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규모 분산형 전력을 생산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22] 사용에 있다. 풍력발전은 독일과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화력발전에 견줄 수 있는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도 나날이 그 기술이 발전, 경제성 있는 에너지 생산을 예고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단기간 내 설치할 수 있으며, 고갈의 우려가 없고, 연료비도 들지 않는다. 풍력발전기를 북한에 반입하는 것은 소위 미국의 적성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물자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남한 재생가능에너지 수준은 선진국 대비 풍력은 87% 정도에 달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74%, 태양열 72%, 바이오에너지는 57%에 달한다.[23] 일부 첨단 핵심 분야를 제외하고 재생가능에너지가 대단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비용이다. 그러나 풍력이나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이미 수력이나 화력 등과 비교해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양광도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탄소시장과 함께 세계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유관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특히, 태양광은 한반도에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중 최대의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한반도에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잠재량 중 태양광은 33.4%, 태양열은 50%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1> 한반도 재생에너지 전체 잠재량(단위: 백만 TOE,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 (조력/조류)	총계
		육상	해상					
871.0	585.3	12.3	22.0	20.9	2.3	233.8	2.8	1,750.9
(50.0)	(33.4)	(0.7)	(1.3)	(1.2)	(0.1)	(13.4)	(0.2)	(100.0)

자료: 이주량, "신 성장모델의 모색, 태양광 클로스터."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p. 4

북한도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심을 집중, 군 단위 에너지 자급을 위한 산림 농업연료 활용, 중소수력 개발, 풍력, 조력, 태양광 발전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24] 농촌에서는 분뇨, 옥수수대에서 얻은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도 한데, 북한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

22) 재생가능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로 구분되는 데, 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며,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이 있다.

23) "재생가능에너지가 남북한에 주는 이점" http://blog.idaro.com/entry/%EC%(E%AC 검색일 2010.4.1

24) 이유진 외,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연구-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2007년도 국회용역 과제보고서 2007.6.

는 재생가능 에너지는 풍력발전 분야다. 이와 관련, 북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50W급, 1kW급 등의 소규모 풍력발전기가 약 1,00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풍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총 에너지량은 3mW(2004년)이며, 2020년까지 풍력발전의 규모를 500mW까지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한번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면 사라지나, 풍력발전기는 20여년 이상 꾸준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에너지 정책을 남북협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 에너지 협력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에 두고 건설기간도 짧고 송배전망 추가 건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을 늘려갈 수 있는 남북협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의 대북 지원금지 해제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3)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의 경제적 효과

재생가능 에너지는 국제정치적, 안보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평화 에너지」다. 에너지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환경 에너지」다. 동시에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인 동시에 남북이 함께 경제적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경제 에너지」이기도 하다.

남북간의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은 무엇보다도 북한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북한 주민의 에너지 기본권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도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남한 정부가 북한에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시설을 보급하게 되면, 국내 관련 산업은 북한이라는 지속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 된다. 남한 재생에너지 기업의 안정적 시장 확보는 곧 기술향상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으며, 이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은 편이다. 나아가 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25] 거래제도나 정부지원이 뒷받침이 된 산업용 전력의 판매로 이어질 경우, 투자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농업 및 임업분야에서의 녹색평화 창출 사업

(1) 농업분야

에너지 분야 다음으로 「녹색평화」 창출의 효과가 비교적 큰 분야가 농림업이다. 이 분야는 북한이 당면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도 극히 중요하다.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주의 집단영농체제가 갖는 제도적 취약점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관리방식의 개선이 관건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녹색평화」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의 범주에 넣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북한 스스로 정치·제도적 개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녹색평화 창출과 관련된 농업분야의 남북협력은 오히려 북한지역 농업생산 기반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실 북한의 식량난은 기상여건이나 농경지 조건이 남한에 비해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농업기반이 부실한 것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그동안 토지정리사업,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등 기

25)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동안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일종의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정책당국으로부터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잉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하거나 기업들이 청정개발체제(CDM) 등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사고팔게 된다.

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토지가 산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의 비옥도가 크게 낮고 농사에 필요한 물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산림황폐화가 극심하고 저수지와 강이 유실된 흙과 모래로 메워져 있으며, 배수시설이 미비하여 자연 재해의 피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양질의 비료, 비닐, 종자, 농약, 농기계, 에너지 등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점도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의 제약요인들의 극복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는 투입재 공급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임업분야 산림복구

북한 지역의 산림복구사업도 「녹색평화」 공존을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산림복구사업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료와 식량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의 산림생태계는 오랫동안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산림의 재해 완충 능력이 약화되어 매년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북한의 산림 가운데 전체 21.7%에 달하는 163만ha가 황폐지가 되었다.[26] 북한의 산림 황폐화와 계속되는 재해 발생은 녹색성장을 통한 한반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점을 감안, 유엔개발계획(UNDP)이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같은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단체[27]들은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규모 나무심기를 비롯,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정도였다. 그나마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28]

북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남북 당국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남한 정부도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green) 한반도 창출이라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마련,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단계적으로 복구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개성, 금강산 등 남북접경 지역 대상으로 시범 지역을 설정, 북한 산림복구를 탄소배출권 조림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29]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참여유형을 개발하는 한편, 양묘장 조성, 조림기술협력, 병충해 공동방제 등의 협력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다. 남북접경지역 평화협력 사업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접경지역은 국토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자 자연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다.[30] 비무장지대는 현재 평화생명지역(Peace & Life Zone: PLZ)으로 인

---

26) 이해정, “북한 황폐지 조림을 위한 탄소배출권 사업 타당성 분석과 보완과제,”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2008.3.7.

27) 여기에는 평화의 숲, 동북아산림포럼, 새천년생명운동,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겨레의 숲 등이 있다.

28) 명수정 외, 「북한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pp. 136.

29) 2009년~2010년 조림사업의 대상지를 선정,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조림사업의 능력을 배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계년 계획(2009~1013)」, 2009.7, p. 58.

30) 비무장지대 일대 생태조사 결과 67종의 멸종 위기종을 포함, 2,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 「비무장지대 일원 생계보전대책 추진」, 국정브리프 보도자료 2005.8.25.

식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연결된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은 녹색평화 구현사업의 결정판이다. 남북분단의 상징적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비무장지대 자체가 평화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대를 녹색평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북한강 수자원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협력사업은 녹색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평화경제사업의 대표적 프로젝트일 것이다.[31]

(1) 비무장 지대 일원 평화경제사업

비무장지대와 관련 사업은 녹색평화창출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남북접경지역과 관련 사업으로 녹색평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평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남한 정부도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통해 비무장지대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상징성을 활용, 세계적인 생태평화의 상징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존재하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고, 이 일대를 생물권 보존지역(Geo Park)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둘째,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평화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역사유적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32]

셋째, 단절된 교통망을 복구, 녹색평화의 길로 만들고, 산업·물류·관광기반을 갖춘 남북교류협력지구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 정부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정책기획과 행정지원, 재원조달 등에 있어 유관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33]

넷째, 임진강 등 남북 공용하천의 수해방지 협력과 수자원 공동관리 및 활용 등을 통해 남북의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34] 임진강(272·4㎞)은 전체의 63%, 한강(326·3㎞)은 32%가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협력 없이는 이수·치수 및 공동이용·관리가 곤란하다. 따라서 남북은 기합의된 수해방지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임진강·북한강유역의 공동관리 및 이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공동이용은 물론, 관광자원의 개발, 재해시 공동대처, 전력생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5] 특히, 재해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강 상류 및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산림황폐지역에서의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남북 합작농장 건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접경지대의 사업이 녹색평화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31) 북한은 북한강 수계 안변청년발전소의 조업용 댐인 임남댐의 남쪽으로 흐르는 용수를 차단,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북한강 유역의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북한강 하류에 위치한 댐의 전력생산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남북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남댐은 북한이 1986년에 시작하여 2003년에 완공한 댐으로 금강산댐이라고도 부른다. 남한의 제 5공화국 정권은 이 댐이 수공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임남댐 남쪽에 평화의 댐을 건설했다. 2005년에는 예고 없이 대량의 물이 방류되어 남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일이 있다. 임남댐 건설 이후 한강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12%가 줄어들어 한강 하류에 있는 서울 지역 물 부족 현상과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임남댐은 폭 710미터, 높이 121.5미터, 저수용량은 약 26억 톤 정도다. http://ko.wikipedia.org/wiki/%EC%9E%84%EB%82%A8%EB%8C%90 참조(검색일 2010.4.3)

32) 김영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과 의미」 국토해양부 2010.2.

33) 행정안전부,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2009.12.2.

34) 위의 책, p. 59.

35) 국토연구원,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국토정책 Brief 제186호(국토연구원: 2008.9.8).

한다.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UNSCO) 지정 세계생태환경 자연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북한에 제안하고 동식물 서식지를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사업을 남북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농업·습지·산림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나는 취약 생태계 지역을 복원, 이 지대를 하나의 생태공간과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환경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산업분야

산업분야에서 녹색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외연적 성장 중심의 생산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자전거 공동생산은 이런 점에서 녹색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본보기 사업이 될 수 있다.[36] 남한은 현재 한국 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자전거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노동력과 남한의 생산기술을 이용할 경우, 1/3 수준의 임금으로 질 좋은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자전거를 남한과 북한에 공급하면, 북한 주민에게는 출퇴근 및 소형화물 수송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에는 자전거가 대량생산 되지 않아 외국의 중고 자전거를 비싼 값에 수입하고 있다. 남북한 자전거 공동생산 사업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녹색교통수단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 지역의 자연자원개발도 산업분야에서의 한반도 녹색평화 창출의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자연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실행계획의 하나인 「녹색한반도의 창출」을 통한 새로운 국가 브랜드 창출과도 직접적인 연계를 가진다. 자연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남한경제를 지속 성장시키고, 전략광종에 대한 남한의 자주개발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동반, 실질적 남북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 동북아 통합의 Gateway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대북 경제협력 및 개발지원의 과제

녹색평화 창출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이행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협력을 위한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체제개혁 및 개방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 및 제도개혁, 양호한 사업 환경을 조성, 지식과 기술 전수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인력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센터 설치, 관련 프로그램의 제공, 교사양성 및 장비·시설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36)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는 그의 논문 “남북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남북 녹색 교통협력사업 추진 방향,” 에서 제시, 관련 내용을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2010.3.25 제시.

셋째, 개발지원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요구사항이 수용되어져야 한다.[37] 북한이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지원 쪽으로의 지원방향을 선호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개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추진절차와 조건은 인도적 지원에 비해 훨씬 까다로울 것이다.[38] 인도적 지원은 모니터링 활동 정도면 되지만, 개발지원은 사업적 성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절차와 조건이 상당히 엄격하다.

넷째, 대북협력을 위한 재원조달이다.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 국제협력자금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개발 초기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39] 대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은 지원국의 능력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혜국인 북한이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제차원의 개발지원은 개발지원을 위한 조달재원의 총액을 개발도상국을 위해 배분하는 방식(aid allocation methode)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국의 상황과 여건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빈곤국가일수록, 정책과 제도의 개혁에 많은 진전을 가져올수록, 정치안보상 중요한 국가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된다. 북한의 경우,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원액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핵문제 해결과 체제 개방·개혁에 있어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Ⅴ. 결어

이 글에서는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녹색평화」와 연결시키고자 했다. 한반도의 녹색평화 창출을 위해 어떤 기본방향과 원칙을 설정할 것인지, 또 녹색평화를 구현하고 기여하기 위한 남북협력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다. 글을 적으면서 본인의 뇌리 속을 떠나지 않았던 문제는 북한 핵문제와 함께 국가 안보문제 속에 갇혀버린 남북관계였다. 아무리 녹색평화를 위해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의 방안을 제시해도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에서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선 변화만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는 「녹색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조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녹색평화」의 창출이 현재의 대북 정책을 추동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7) 개발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구는 지원 수혜국의 체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지원의 제공 여부 및 그 규모를 해당 국가의 정책 및 제도의 건전성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지원을 받는 국가가 스스로 개발전략(일명: poverty reduction strategy)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김석진, 김계환, 「산업부문 국제 개발지원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체제전환국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07-69.

38) 김석진, 김계환, 「앞의 책」, p.129~131.

39) 이한희, 신형원,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9.11.24.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DMZ의 활용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장)

<목 차>

Ⅰ. 서 론

Ⅱ. 비무장지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
1. 형성배경
2. 공간적 특성

Ⅲ. 비무장지대의 설치와 관리상의 주요 현안
1.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의 설치
2. 비무장지대 관리상의 주요 현안

Ⅳ. 녹색평화 시각에서의 비무장지대 활용
1. 비무장지대 활용의 기본방향
2. 녹색평화 시각에서의 협력사업 구상

Ⅴ. 결 론

Ⅰ. 서 론

한반도의 중앙지대에 설치된 비무장지대는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온 한국전쟁의 아픈 흔적이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군사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체결됨에 따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가 설치된 것이다.

그동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을 통한 남북한 평화와 화합에 대한 방안이 수차례 시도되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견의 접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단절상태에서도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이로 인한 교류협력의 추진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큰 진전이었다. 특히 군사적 대치로 단절되었던 비무장지대에 철길과 도로를 잇고 이 길을 통해서 수많은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남북한 평화와 화합, 그리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성과인 것이다. 비록 비무장지대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단절의 공간에서 남북한 통합의 꿈을 이루어가는 화합과 연합의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특별히 지난 60여 년 동안 인간 발길의 차단은 귀중한

생태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분단의 공간이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다. 동시에 평화를 열망하는 온 세계 평화인들의 관심의 공간이 되었으며 평화창출을 위한 노력의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지속되고 특별히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색상태에 있지만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염원은 식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어, 비무장지대가 남북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회복의 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적인 활용방안이 정부,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경의·동해선 철도 및 국도 1·7호선 연결사업 외에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금강산 관광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의 진전,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이산가족의 상봉, 개성공단 건설 등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서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활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4가지 정도, 즉 지역의 철저한 보전, 문화 공간으로의 활용, 평화와 화해의 상징지대로의 보존, 남북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 및 평화공업단지, 생태공원, 농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에 따라 우수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남북의 상생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비무장지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

1. 형성배경

일반적으로 비무장화(demilitarization)라 함은 국제법에서는 일정한 국가영역(육지, 영해, 하천, 운하, 영공 등)에 군대 도는 무기를 주둔·배치하지 않거나 군사적 시설물을 설치·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무장화의 개념과 범위는 군사전략 및 무기체계의 변화, 무기개발 기술의 발전 등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으로 변천하여 왔다. 본래 비무장화의 개념은 제한된 지역에 군대주둔과 동 군대에 대한 무기제공을 금지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부분적 비무장화(partial demilitarization)라고 한다.[1)]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간에 체결된 정전(휴전) 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완충지대로서 남과 북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정전 협정의 제1조 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2)]을 확정하고 쌍방이(남과 북) 이 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후퇴함으로서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 한

1) 차종환·제성호·김병우. 전게서. 36쪽.

2) 군사분계선은 지도상에 표시된 선으로서 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철책선이 가설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남북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식물이 군사분계선 155마일을 따라 매 2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설치된 표식물의 수는 모두 1,292개이다(김영봉 외. 2003.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8쪽).

다"고 되어 있다. 또한 1조 3항에서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 경계선 및 남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비무장지대가 설치된 실정법적 근거는 정전협정 제1조 1항과 3항에 있다. 정전협정은 당사자의 일방을 북한과 중국으로 하고 다른 일방을 한국과 유엔으로 하는 국제법상의 조약이다.[3]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 설치의 목적은 완충지대를 통한 적대행위 재발방지에 있으며, 그 역할은 군사적 완충지대를 통해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감시체제하의 격리공간을 둠으로써 기습적인 공격을 억제하는데 있는 것이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휴전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 배치상황을 중심으로 육지 248km(155mile)에 군사분계선(강화군의 말도에서 고성군의 명호리를 잇는 선)이 획정됨에 따라 이 선으로부터 각각 남북으로 2km 범위까지의 지역에 비무장 지대가 설치되었다.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감시기관으로는 정전협정 제19항～제23항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 정전협정 제36항～제43항에 의에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가 있으나 비무장지대의 주된 관리책임은 군사정전위원회가 맡고 있다.

2. 공간적 특성

1) 지형적 특성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은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서해안지역과 한탄강·북한강 상류의 내륙지역, 그리고 태백산맥의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북부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한반도의 동·서 단면은 기본적으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동부의 급사면과 서부의 완경사면이 비대칭으로 나타난다.[4] 비무장지대도 지형적으로 동고서저의 우리나라의 일반적 지형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서부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한강하구로서 평야지대 및 해안지대를 이루고 있다. 중부지역은 광주산맥이 가로놓여 있어 복잡한 산악형 지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부지역은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발달 고지대와 동해 해안지대를 이루고 있다.

동부산악 및 동부해안지역(고성군 일대)은 태백산맥의 북부와 동쪽 해안사면에 위치하며 표고 1,000～1,700m의 장년산지가 주능선을 이루어 험준한 지세를 나타내고, 동부해안지대는 모래해안이 주를 이루며 내륙은 100～200m이하의 완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해안선 가까이에는 20～30m의 야산이 동해와 접하고 있다. 중동부 내륙 및 산악지역(인제군, 화천군 일대)은 향로봉(1,296m), 건봉산(911m), 칠절봉(1,172m), 가칠봉(1,242m) 등 1,000m내외의 높은 산이 분포하고 경사도도 높다. 중서부내륙지역(철원군, 연천군, 일대)은 백마고지(395m), 철원평야 주위의 서방산(717m), 천덕산(420m), 야월산(410m) 등의 준산지가 있고 대부분 표고 400m이하의 야산 구릉지와 평야지가 분포하고 있다.

서부해안지역(파주시, 김포시, 강화군 일대)은 해안 야산성 산지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임진강 중·하류지역은 충적 평야지대와 하구 저습지가 발달하여 있다.

비무장지대를 관류하는 하천은 동해로 흐르는 남강과 서해로 흐르는 북한강 및 임진강, 그리고 한탄강이 있으며,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 하천들이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북

3) 정전협정의 일방당사자는「한국과 유엔」이라는 주장외에「한국과 참전 16개국」, 또는「유엔」만이라는 주장도 있다(제성호. 1997.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54쪽).
4) 앞의 책. 118쪽.

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 흐르고 있다.

DMZ 일원의 하천은 크게 임진강 수계, 한강 수계, 동해안 수계로 구분된다. 임진강 수계의 하천은 사천강, 사미천, 임진강, 역곡천, 상류천, 한탄강, 김화남대천으로, DMZ를 관통하여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으며, 한강수계의 하천에는 금성천, 쌍룡천, 북한강, 수입천, 인북천, 서화천이 있다. DMZ를 지나는 모든 하천은 반세기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DMZ 일원의 습지는 전 구간에 걸쳐 다양하고 넓게 분포하고 있다. DMZ와 민통선 지역을 관통하는 물줄기와 함께 발달해 물줄기 주변이 자연천이 과정을 거쳐 습지로 변한 상태이며, 주로 DMZ 일원 중서부 지역의 저지대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며 뛰어난 생물종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농지는 많은 지역이 습지화되어 다양한 생태계의 서식처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파주의 판문벌지역과 철원의 비무장지대 및 민통지역은 묵논습지화되어 있고 고성비무장지대는 해안사구가 넓게 형성되어 해안습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5)]

2) 토지이용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의 총 토지면적은 90,703ha로 산출되었고, 북한지역이 남한지역보다 431ha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의 토지는 산림지역이 75.5%로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초지가 20.3%, 농경지가 2.8%, 습지 1.1%, 나지 0.1%, 수역 0.2% 등이다. 농지의 경우 3/4이상이 북측에 분포하고, 주로 서부 비무장지대, 특히 판문점과 대성동마을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경우 남측지역은 비무장지대 내외의 토지이용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나 북측은 산지개간에 의해 농지가 조성되었거나 황폐지로 전환된 것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표 1>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형태

(단위 : ha, %)

구 분	남 측		북 측		계	
산 림	35,017	(77.6)	33,480	(73.5)	68,497	(75.5)
농경지	588	(1.3)	1,907	(4.2)	2,495	(2.8)
초 지	9,091	(20.1)	9,324	(20.5)	18,415	(20.3)
습 지	226	(0.5)	806	(1.8)	1,032	(1.1)
나 지	86	(0.2)	12	(0.0)	98	(0.1)
수 역	129	(0.3)	37	(0.1)	166	(0.2)
계	45,136	(100)	45,567	(100)	90,703	(100)

자료: 임업연구원. 2000. 비무장지대의 산림생태계 현황

3) 산림유형 및 현황

DMZ 일원 산림 생태계는 동부지역부터 철원평야에 이르기까지 지형 및 지세가 험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식생에 따라서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혼효림

5) 김귀곤, 2010, 평화와 생명의 땅 DMZ. p6.

그리고 관목림의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DMZ 내부의 산림의 경우 사계청소와 주기적 산불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20년생 미만의 어린 소나무림과 맹아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민통선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 영향이 미치지 않아 중동부 지역의 산림은 임령이 높고 일부 극상림도 나타내며 우수한 산림 생태계를 보이고 있다. 민통선 지역의 산림의 경우, 군작전을 위한 전술도로로 인해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비무장지대의 산림은 크게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및 관목림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임상별로는 혼효림이 전체산림 중 약 6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 주로 활엽수림과 관목림이, 동부지역에 혼효림과 침엽수림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목, 관목 그리고 덤불림으로 형성된 산림 및 관목덤블림은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75%를 차지하고 있다.[6] 남북한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남쪽 산림은 인접지역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북쪽은 산림의 훼손이 심하여 남북간이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임상별, 소밀도별 임목축적량을 추정한 결과 총 임목축적량은 150만㎥로 나타났고 그 중 남한지역이 북한지역보다 약 6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a당 임목축적량은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고 남북한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사계청소 등 군사목적에 의한 지속적 산림훼손과 산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식물상 및 식생

비무장지대는 백두대간(Backdu Mountain Chain), 도서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Core Eco-Axes)의 하나로 국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중요 지역이다. 특히,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생태축으로서의 의미가 높은 것과 같이 비무장지대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동서 생태축으로서의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DMZ는 남방계 생물과 북방계 생물이 교류하는 자리에 있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온대지역의 천이과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일원은 자연적이거나 군사적 목적에 의해 주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은 훼손되나 반대로 초본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풍부한 초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뛰어난 생물종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DMZ 일원의 생태계 조사 결과, 야생동·식물 2,716여종을 포함하여 멸종 및 보호 야생동·식물 67종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남(환경부, 2003).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은 식생에 대한 교란특성이 시계청소와 군사훈련과 같은 군사목적을 위하여 주로 산불과 벌채 그리고 도로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지뢰밭과 같은 지역이 많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후방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나물류와 같은 식물의 선택적 채취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즉 교란은 많으나 비교적 손은 덜 탄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저습지 등은 다른 토지용도로 이용되고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잦은 산불과 벌채 등으로 참나무류와 소나무류 등이 우점하는 이차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군데군데 국소적으로 습지식생, 하안식생, 해안식생, 초지군락 등이 형성되어있다.

동해안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상은 73과 193속 263종 33변종 2품종으로 모두 298종류로 조사되었다. 이 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서해안지역보다 다소 온난한 특성을 가지고

6) 앞의 책 89.

있다. 중동부산악지역은 태백산맥과 그것을 중심으로 발달한 계곡, 분지 및 대지 등과 동해로 유입되는 남강, 서해로 유입되는 북한강과 한탄강 등의 발원지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자연환경적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물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식물지리학적으로 보면, 북방계 식물요소와 남방계 식물요소가 혼생하는 등 한반도 식물상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는 식물상은 89과 335속 597종 1아종 98변종 8품종으로 모두 704종류로 정리되었다. 중서부내륙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상은 96과 304속 517종 1아종 79변종 7품종으로 모두 604종류로 정리되었다. 금학산 (947.3m), 고대산 (832m), 지장봉 (877.2m) 등 표고 800m이상의 산지가 일부 있으나, 아이스크림고지, 백마고지, 야월산 및 천덕산 등 대부분이 500m이하의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이길리, 대마리, 월정리를 주축으로 하는 철원평야, 산명호, 토교저수지, 강산지, 학저수지 등 많은 저수지 및 늪지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해안 및 도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상은 115과 429속 683종 2아종 120변종 12품종 등 모두 817종류로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수의 식물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파주, 김포, 강화도, 석모도, 교항도, 대청도, 백령도 등이 포함되는 비무장지대 서부해안 및 도서지역의 산림식생은 과도한 인위적 간섭으로 인하여 도서지역인 대청도 일부 급경사 절험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식생이 파괴된 후 재생된 이차림, 맹아림과 조림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무장지대는 산불과 시계청소 등 서식지의 지속적인 교란으로 대부분 2차림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인간의 간섭이 없는 고산 및 저습지가 많고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교차하여 서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식물상은 한국특산식물 금강초롱꽃, 정향풀 등 1,000여종의 분포가 확인되었고 겹양지꽃, 흰소영도리, 흰패랭이꽃 등도 발견되었다.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산림청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은 동부산악 및 동해안지역에서 흑삼릉, 부채붓꽃, 정향나무 등 12과, 12속, 11종, 2변종 등 총 13종류가 발견되고, 중서부내륙지역에서 삼지구엽초, 낙지다리 및 붉은인가목 등 3종류와 서부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모새달, 두루미천남성, 개상사화, 대청부채, 사철난, 검팽나무, 쥐방울덩굴, 낙지다리, 모감주나무, 토현삼, 초종용 등 11종류가 조사되었다.

Ⅲ. 비무장지대의 설치와 관리상의 주요 현안

1.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의 설치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전협정의 부산물로서 군사적 측면에서 비무장화된 완충지대의 성격을 갖게되었으나 국토활용 측면에서는 유보지역의 성격을 가진 채 그 동안 제대로 된 현황조사나 활용계획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현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적 측면의 감시를 담당하는 기구에 의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가 아닌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와 비무장지대의 유지를 위한 감시기관에는 정전협정 자체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기구와 남북한이 각자 군사적 감시를 위해서 설치한 감시기구가 있다.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국제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정전협정 제2조 19항~23항),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정전협정 제2조 36항~43항)가 있으며, 남

북한이 설치한 감시기구는 남북한 각자가 운영하는 민정경찰이 있다.[7]

1) 군사정전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협의·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직무와 책임 외에도 비무장지대 내 표식물 건립에 대한 감독권,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권,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을 갖는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의 민사행정, 경찰 인원수 및 휴대무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필요한 규정을 작성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데 이중 5명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임명하고 나머지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임명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협조를 받도록 하였고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에 따른 감독 시 상호 협조하는 것이다.

2)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정전협정에 규정된 양대 감기기구 중의 하나로 정전협정 제37항에 따라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데, 2명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스위스, 스웨덴, 다른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장교가 각각 임명되었다.[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첫째,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되는 군사인원과 작전물자의 반입에 대한 감독과 시찰실시, 둘째,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와 시찰활동, 셋째, 중립국 시찰소조편성·운영 및 시찰소조활동 결과의 군사정전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에는 20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았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축할 수 있다. 중립국시찰소조는 각 조당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영관급으로 하며,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선정하고,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선정한다.

2. 비무장지대 관리상의 주요 현안

1) 정전협정 위반 실태

한국정전협정의 서언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협정

---

7) 1995년 3월이래 비무장지대 관리를 책임진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북측 구성원이 북한의 요구로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8) 체코는 1993년에, 폴란드는 1995년에 각각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하였으며, 현재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양측은 정전협정의 주요 내용을 위반하고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화하고,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의 2km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우선 비무장지대의 유지상태를 보면, 군사분계선 북측의 경우 북한이 정전협정 직후부터 비무장지대를 침범하여 북방한계선 이남에 철책선을 가설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 제2세대 철책선 가설을 완공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측도 비무장지대로 진입하여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인 비무장지대 내에 철책선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북한측은 북방한계선에서 비무장지대 내로 1km~1.5km까지 진입해 철책선을 설치하였고, 남한측 역시 남방한계선에서 500m 까지 비무장지대로 진입해 철책선을 설치하였으며 일부지역은 그 이상까지 들어가 설치된 곳도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이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비무장 규정의 준수 상태를 살펴보면, 북한측의 경우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을 넘어 군사분계선 근거리까지 다수의 중화기 진지를 구축하고 무장 전투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무장상태는 각종진지 354개소(박격포진지 234개소, 고사포진지 92개소, 대전차포진지 28개소), 4개의 갱도(땅굴), 29.4km의 지뢰지대, 282개소의 감시소(Guard Post : GP) 및 관측소(Observation Post : OP), 117개소의 방송시설, 철책선, 막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9)]

남한측도 이에 대항하여 철저한 방어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내 주요지점에 제한된 수의 GP 와 OP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한측은 GP 및 OP 100개소, 107개소의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수적으로 북한측의 약 1/3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남한측은 전투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 등 다수의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다.

<표 2>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구축 및 장비배치 현황

구분	GP/OP	방송시설	철책선	지원시설	박격포	고사포	대전차포	기타
북한	158/124	(117)	260㎞	3,362동	234	92	28	316
남한	87/13	(107)	290㎞	1,209동	-	-	-	-

자료: 전성훈. 1999.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군사정전위원회 2008 확인

비무장지대는 지난 50여년 동안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정전협정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체결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의 군사인원, 장비, 시설 등 중무장시설들을 철거하여 순수한 비무장지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무장지대내 수많은 GP 및 OP 등의 군사시설 구축과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에서의 철조망의 비무장지대내 진입 설치는 비무장지대에 형성된 귀중한 생태계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측 비무장지대의 경우는 그 훼손의 범위와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비무장지대의 원상태 회복을 통한 생태계의 보전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은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시도 할 수 있어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9) 전성훈. 1999.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9쪽.

2) 정전체계의 한계와 관리상의 문제점

군사정전협정의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정전협정의 빈번한 위반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정전체제의 제도적 한계 내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정전체제의 한계와 주요 문제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10)]

첫째, 정전협정 내에 협정위반사건의 억제와 시정을 위한 강제규정 및 그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1990년대에 들어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전협정 내용의 수정과 증보 등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전협정위반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준수를 강제하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정전협정 내에 이 협정의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 때문에 그동안 일어났던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주장이 남북한간에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953년에서 1991년까지의 기간 중 북한측의 실제 위반 건수는 408,739건이나 북한측이 인정한 위반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반면 상기 기간 중 유엔군측의 실제 위반건수는 16건에 불과하나 북한측은 454,605건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협의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된 적은 거의 없었다.

셋째, 정전협정에는 일반적인 비무장 의무를 규정할 뿐 비무장지대 내에 시설설치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과 금지되는 시설의 한계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러한 분명치 않은 규정을 악용하여 비무장지대 내에는 전투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 등 군사시설물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이처럼 정전협정 준수의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전협정위반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정전협정은 비무장상태의 유지라는 군사적 측면의 접근 외에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활용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갖고 있는 공간적 의미와 남북한의 공동활용 정책은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과거에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반세기가 넘는 기간이 경과한 현재 비무장지대는 비교적 우수한 생태계를 비롯해 연구와 활용이 필요한 국토의 특이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정전협정의 한계와 문제점은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귀중한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있다. 그러나 군사정전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를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원상태의 회복과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녹색평화 시각에서의 비무장지대 활용

1. 비무장지대 활용의 기본방향

녹색평화 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의 활용은 우선 반세기가 넘도록 사람의 발길이 제한됨에

10) 제성호. 1997.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방안 :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림대 국제문제 연구소; 제2회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DMZ 학술회의 발표논문. 5~6쪽.

따라 형성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고 이를 남북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에 심혈을 기울려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의 생태의 우수성을 인정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협력을 통한 평화적인 이용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사업의 선정은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에 형성된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보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북한이 참여 할 수 있는 남북한 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그들의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에 그동안 참여 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공동 이익의 증진과 국토환경의 보전,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에 중점을 두고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녹색평화적 차원에서 활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자연친화적인 국토이용을 구상토록 하고,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과 파괴된 생태계의 복구방안을 마련한다. 한반도 중앙지대를 가로지르는 방대한 면적의 비무장지대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남북한 공유하천과 고산 준령은 멸종위기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군사작전으로 인한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남북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 그 가치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보전된 귀중한 생태자원은 세계인의 관심이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자원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비무장지대의 생태자원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남북한 협력을 유도한다.

넷째, 비무장지대에서의 교류협력은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이용한 토지와 교통망을 활용한다. 교통망의 연결과 군사시설의 철수 그리고 농업활동 등에 있어서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한다. 다섯째,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방지에 남북한이 공동대처해 나아감으로써 재난을 방지한다.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화재와 홍수 그리고 병충해의 예방과 대처에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한다.

2. 녹색평화 시각에서의 협력사업 구상

1) 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 조성

비무장지대는 생태자원이 풍부한 생태계의 보고로 국제적으로도 희귀생태자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지형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동고서저의 형태로, 동부 및 중부지역은 산악이 발달한 고지대로 수목 등 생태계가 우수하고, 서부지역은 습지, 철새도래지, 해안 갯벌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정부부처와 환경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태계의 조사가 부분적으로 나마 이루어졌다. 큰 틀에서는 비무장지대를 핵심지역으로 하고 민통선 및 접경지역 등 생태계 우수지역들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함으로써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 국가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의 추진가능지역은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 전 지역을 주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이용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환경성을 강화하고,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핵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향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지정 가능성을 감안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분을 위한 관리범위의 적정규모 설정방법을 개발하여 지역을 구분한다. 비무장지대는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한국전쟁 이후의 독특한 전쟁유산,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의 주요 서식처로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핵심지역을 다시 세계유산으로 중복 등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의 추진은 단계별로 추진하되 1단계에서는 남측 비무장지대의 생태조사를 한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연장 추진하여 남측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철저한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홍보하고, 북한 당국 및 학자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2단계는 북측 비무장지대 생태조사 및 종합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북한의 동의하에 북측 비무장지대의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비무장지대 전역의 생태계조사를 종합정리하고, 소유권 정리, 관리지역 설정 등의 순서에 따라 종합보전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종합보전대책 수립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추진을 위해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한다. 3단계에서는 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및 세계복합유산 동반등재를 추진한다. 우선,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국내외적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나아가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설악산-비무장지대-금강산(DMZ녹색평화의 산) 연계지역을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추진 한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한 기대효과를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희귀생태 자원의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평가 및 국제기구의 재정적·기술적 지원기능 등과 같은 연구활동 활성화 도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자연생태계의 연결과 체계적인 보전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남북한 화해협력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DMZ녹색평화생태공원 조성

남북한 접경지역 자연생태계의 특성은 서해 한강 하류 비무장지대의 광활한 갯벌과 한강과 임진강 합류지역의 철새도래지, 습지 등 다양한 자연 생태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중부의 임진강을 중심으로한 주변지역의 풍부한 생태자원과 평야지대의 철새도래지, 동부의 고산지대를 중심으로한 희귀동식물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8년 9월 “비무장지대 평화선언”을 통해서 비무장지대 일원에 생태평화공원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생태평화공원의 지정은, 남북 평화 화합을 도모하고, 남북간 긴장완화를 통해 남북환경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후보지의 선정은, 우선 DMZ의 생태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지역, 남북공동조성이 가능한 지역, 생태평화공원조성이 가능한 지역,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 가능한 지역 등으로 하고 있다.

생태공원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보면 서해 연안지역에서는 강화·연백지역의 갯벌, 한강과 임진강 합류지역의 철새도래지, 중부의 임진강 희귀담수어종과 수변생태자원, 철원의 철새

도래지 등이 우수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부의 경우는 북한강유역 수변의 생태자원, 양구 해안분지 주변의 다양한 생태자원, 그리고 동해안 비무장지대 감호 주변의 습지 등이 공원을 조성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추진방안은 비무장지대내 주요생태자원의 남북한 합동조사를 통해 발굴한 희귀 및 우수생태자원을 중심으로 DMZ녹색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비무장지대는 군사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내부의 생태계를 조사할 경우 비무장지대 설치 근거에 따라 남북한의 국내법이 아닌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을 준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 당사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협력을 통해 남북한 비무장지대를 아우르는 DMZ녹색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한다.

3) DMZ녹색평화의 강 추진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남북한 공유하천 유역은 생태적으로나 수자원이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남북한 평화적인 협력은 우수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주요 하천은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소양강, 남강으로 이중 남강을 제외한 4개의 강은 본류가 북한에서 시작하여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남쪽으로 흘러 서해에 이른다. 이중 임진강과 북한강은 현재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 측면에서 남북이 협력해야 될 시급한 사안을 안고 있다. 특히 임진강과 북한강의 경우 북측에서 댐을 건설하여 유역을 변경함에 따라 하류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하류의 용수부족으로 전력생산의 차질과 생활용수에 영향을 끼치고, 한편으로는 수공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주요 공유하천을 DMZ녹색평화의 강으로 공동 활 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진강유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여건을 보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접경지역과 북한의 중·상류지역은 댐 건설에 가능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분석된다. 중·상류 북한지역은 높은 산악과 깊은 협곡이 많고, 취락지역과 농경지가 적어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과 보상지역이 적으나 북한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에 남북합의를 도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남방에 댐을 건설할 경우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접경지역내 광범위한 주변지역의 수몰로 인해서 농경지와 귀중한 생태자원, 그리고 문화재 등의 수몰이 예상된다.

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은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임진강유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임진강 중·상류지역에 홍수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에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홍수의 피해를 줄여나간다. 나아가 남북한 임진강유역에 대한 주요하천에 하천제방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위급 상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북한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소규모 댐의 공동활용방안 강구와 하천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한다. 동시에 임진강유역의 항구적인 재난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한다.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여건을 보면, 임남댐에서 평화의 댐에 이르는 북한강 계곡은 산세가 험준하고, 경사가 급하여 집중호우나 상류에서 물을 대량 방류할 경우 하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북한강을 차단하여 임남댐을 건설 담수에 들어감에 따라 약 17억t의 물이 차단되어 남으로 내려오는 물이 크게 줄면서 이 지역 생태계의 파괴와 전력생산 용수 등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임남댐과 평화의 댐에 이르는 유역으로 주로 평화의 댐에서 비무장지대 사이의 지역과 북으로는 비무장지대에서 임남댐까지의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가능한 추진방안은 남

북한 당국의 합의하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의 댐 담수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한다. 평화의 댐 담수를 통해서 임남댐(금강산댐)까지 내륙수운을 개발하고 이를 물류유통 및 금강산 관광수로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화천댐까지 연계 이용하는 방안과 임남댐의 저수량의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평화의 댐으로 방류하여 화천댐의 전력생산과 수도권 일원의 용수공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나아가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북한강유역의 생태계 복원과 홍수의 조절, 그리고 전력생산과 생활용수를 확보토록 한다.

남북한 주요공유하천은 남과 북이 자유롭게 활용해야 하는 한반도의 젖줄이다. 이러한 강이 북한지역에서의 댐건설로 지금은 유역이 변경되고 흘러가야 될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한 남북한 공유하천의 평화적인 활용은 한반도의 중앙지대에 DMZ녹색평화의 강이 유유히 흐르게 될 것이다.

4) DMZ녹색평화브리지 건설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주요교통망의 연결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남북한 평화와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며 단절된 국토를 연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육상을 통한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남북한 주요교통망의 연결은 동북아지역에서의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대륙과의 연계를 가능케 하여 동북아지역의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한반도로부터 유럽으로 가는 해상 운송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수송시간과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북한의 경우 통과료를 부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한반도종단철도(TKR)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남북한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연결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경우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며 연결되었다는데 아쉬움이 있다. 비록 생태통로를 일부 설치하였지만 반세기가 넘게 형성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 것은 이 지역에 형성된 귀중한 습지와 생태자원의 손실인 것이다.

이제 남은 경원선과 국도3호는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남과 북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비무장지대에 연육교(DMZ평화브리지)를 설치하여 통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DMZ평화브리지는 역사성을 부여하여 한반도 중앙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와 화합차원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설한다. 예를 들어 DMZ평화브리지 우편 교각에는 역사적인 위대한 대왕들을 조각하고 좌측 교각에는 각 분야의 우리역사를 빛낸 인물들을 조각하여 세움으로써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이 여기에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조각작품으로 연육교를 건설한다. 동시에 군사분계선지점인 DMZ평화브리지 중앙에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관망하고 이곳에서 잠시 머무러 평화의 중요성을 논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다. 영국 댐스강의 타워브리지와 같은 구조도 좋을 듯하다.

한편 한강하구에서 서해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공유수역은 교량대신 강하저에 터널을 뚫어 남과 북을 연결하게 한다. 이는 한강하구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토록 한다. 이는 녹색평화의 차원에서 DMZ를 활용함으로써 녹색평화브리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5) DMZ녹색평화의 마을 조성

비무장지대에서의 농업협력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비무장지대가 설치되기 전에 논과 밭으로 경작하였던 지역이 이제는 생태적으로 귀중한 습지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농업협력가능지역은 서부의 파주지역, 중부의 연천과 철원지역이 가장 여건이 좋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내에서 현재 농업이 이행되고 있는 지역은 파주지역이다. 파주지역의 특성은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측은 대성동 마을(파주시 조산리), 북측은 기정동 마을(판문군 기정리)이 입지하여 있다. 이 지역은 임진강의 하류지역으로 평탄한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하여 남북분단 전에는 농경지로 사용된 곡창지대이다. 그러나 휴전협정 이후에도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나 양측 마을이 있는 비무장지대 주변의 일정지역은 농경지로 개간하여 사용되고 있다.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은 1953년 8월 휴전협정으로 남방한계선 이북(DMZ) 조산리 지역에 피난하여 귀향한 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조성되었는데 당시 주민은 30세대 160명이었으나 분가 등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51세대 227명이 되었다. 이 지역은 한국정전협정에 의해서 남측은 유엔군사령부 소속 민정반에서 관리하고 북측은 북한과 중국의 공산측 사령관이 관할하고 있다. 경작면적을 살펴보면 군사분계선 남측 약 500미터 지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남한의 대성동 마을은 4.83㎢(146만평)의 면적에 주로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정동 마을도 군사분계선 북방 약 500미터의 평야에 자리잡고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작지의 면적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지만 대성동 마을과 동일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은 남한의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양측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여 경지정리와 농로 및 수리시설 정비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나아가 주변의 경작 가능한 구릉지 및 과거 농경지에 대한 자연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농경지 확장 가능성을 진단한다. 보전이 필요한 주요 생태자원을 선별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 경작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협동농장을 추진하되,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인력을 투입하여 벼농사 및 특수화훼농업을 경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별히 DMZ의 맑은 공기와 물 흙 등 청정자연환경에서 화훼농업을 추진함으로써 남과 북이 공동으로 평화의 꽃마을을 조성하여 비무장지대내에서 평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생산된 아름다운 꽃을 평화의 상징으로 온 세계에 수출한다. 동시에 비무장지대에서 유일하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의 훼손을 막고 현재의 농토를 남북한 평화와 화합의 지대로 만들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관심을 이끌어 냄으로써 녹색평화의 꽃이 피는 이 지역이 관광의 명소가 되도록 한다.

Ⅴ. 결 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활용은 생태계의 보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와 화합의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동시에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 활용방안 구상은 다가올 통일국토에서 이 지역의 역할을 조명해보는데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의 방대한 토지자원과 여기에 조성된 귀중한 생태자원의 평화적인 이용방안의 모색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평화의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활용을 통한 남북의 상생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 할 수 있는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비무장지대의 지형적 특성과 토지이용실태 그리고 주요 생태자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무장지대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군사적 측면에서 조명해봄으로써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녹색평화의 차원에서의 주요 협력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 우리민족사의 비극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세기가 넘은 이제는 역사적인 유적으로서 그리고 생태계의 보고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특히 비무장지대와 주변지역에 형성된 귀중한 생태자원은 세계의 생태학자들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사랑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가보고 싶은 관광자원으로 변화되고 있다.

녹색평화의 차원에서 보는 비무장지대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우선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DMZ녹색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을 잘 가꾸어감으로써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도 높이도록 하였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대치함으로써 귀중한 자연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절된 남북한 교통망을 연결하되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연결 할 수 있도록 DMZ평화브리지를 설치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내에 있는 대성동마을과 기정동 마을이 자연친화적인 농업협력을 통해 비무장지대 DMZ녹색평화 꽃마을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현재 분쟁상태에 있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녹색평화적인 차원에서 평화의 강으로 복원 활용하는 계획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은 추진은 미래의 통일국토을 바라보면서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귀중한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국토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봉. 1997.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토개발연구원.

김영봉외.2002.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3.경의・동해선연결과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 국토연구원.

——— . 2005,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 . 2008, 남북경협 활성화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 . 2009, 비무장지대 인근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

——— . 2009,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김인영・김재한 편. 1999. DMZ -발전적 이용과 해체. 도서출판 소화.

김재한 편. 2000. DMZ Ⅱ-횡적 분단에서 종적 연결로-. 도서출판 소화.

이문항. 2001. JSA-판문점(1953～1994). 도서출판 소화.

이재범. 2005. 태봉의 궁예, 철원에 살아있다. 철원군.

전성훈. 1999.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정규서 외. 2002. DMZ Ⅲ-접경지역의 화해·협력. 도서출판 소화.
제성호. 1997.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 1997.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방안: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제2회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DMZ학술회의발표논문.
차종환・제성호・김병우. 2000. 한국 비무장지대의 식물생태. 예문당.
안종환 외. 1995.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조성에 관한 시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원병오외. 1996. 야생의 보고 비무장지대. 성천문화재단.
국가정보원, 2001.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분석”.
대한민국정부. 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임업연구원. 2000. 비무장지대의 산림생태계 현황.